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 김국신 · 전병곤 · 배공찬 · 이원덕 · 이재현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김국신·전병곤·배금찬·이원덕·이재현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인 쇄 2009년 12월
발 행 2009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국제관계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시밀리)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 늘품플러스 (070-7090-1177)
인 쇄 처 양동문화사 (02-2272-1767)
가 격 ₩10,000

© 통일연구원, 2009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
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여인곤,
김국신, 전병곤, 배금찬, 이원덕, 이재현. — 서울 : 통일연구원, 2009
p. ; cm. -- (KINU 연구총서 ; 09-05)

참고문헌 수록
ISBN 978-89-8479-514-3 ₩10,000
한국 외교 정책[韓國外交政策]

349.11-KDC4
327.519-DDC21

CIP2009003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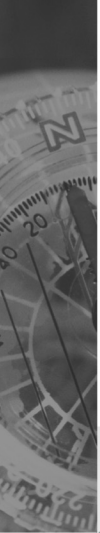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 | |
|---|----|
| I. 서론 | 1 |
| II.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 7 |
| 1.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와 실용외교 | 9 |
| 2.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의 개념과 주요 정책과제 | 10 |
| III.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 | 17 |
| 1. 세계경제 침체와 미약한 회복세 | 19 |
| 가. 세계경제 위기의 배경과 현황 | 19 |
| 나. 세계경제 위기의 전망 | 23 |
| 2. 역내 안보 역학구도의 변화 | 26 |
| 가. 부시 행정부와 ‘미·일·호주 대 중·러·SCO’ 견제구도 | 26 |
| 나. 오바마 행정부와 안보 역학구도의 새로운 변화 | 30 |
| 3. 역내 경제의 역동성 | 33 |
| 4. 역내 안정 위협요인의 상존 | 38 |
| 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 | 39 |
| 나. 역내 영토분쟁 | 43 |
| 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 47 |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 |
|-------------------------------|-----|
| IV. 관련국의 동아시아 인식 및 정책기조 | 51 |
| 1. 미국 | 53 |
| 2. 일본 | 61 |
| 3. 중국 | 66 |
| 4. 러시아 | 71 |
| 5. ASEAN | 77 |
| 6. 기타국 | 79 |
| 가. 호주 | 79 |
| 나. 뉴질랜드 | 82 |
| 다. 인도 | 84 |
| V. 한국·동아시아국가 관계 현황 | 87 |
| 1. 주요국 관계 | 89 |
| 가. 한·미관계 | 89 |
| 나. 한·일관계 | 113 |
| 다. 한·중관계 | 124 |
| 라. 한·러관계 | 134 |



목 차

| | |
|---|------------|
| 2. 한·ASEAN 관계 | 155 |
| 3. 기타 관계 | 175 |
| 가. 한·호주 관계 | 175 |
| 나. 한·뉴질랜드 관계 | 179 |
| 다. 한·인도 관계 | 181 |
| 라. 다자관계 | 184 |
| | |
| VI. 한국·동아시아국가 관계 평가 | 195 |
| 1. 협력 촉진요인 | 197 |
| 2. 협력 장애요인 | 204 |
| | |
| VII. 동아시아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215 |
| 1. 3대 기본방향 | 217 |
| 가. 협력 촉진요인의 확대와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 | 217 |
| 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역량구축 | 220 |
| 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 221 |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 |
|----------------------------|-----|
| 2. 세부 추진방안 | 224 |
| 가. 대미국 정책추진 방안 | 224 |
| 나. 대일본 정책추진 방안 | 230 |
| 다. 대중국 정책추진 방안 | 234 |
| 라. 대러시아 정책추진 방안 | 238 |
| 마. 대ASEAN 정책추진 방안 | 241 |
| 바. 기타 국가에 대한 정책추진 방안 | 244 |
| | |
| 참고문헌 | 251 |
| |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259 |



표 목 차

| | |
|---|-----|
| <표 II-1>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과제 | 16 |
| <표 III-1> 주요국의 2009~2010년도 경제성장률(GDP) 전망 | 25 |
| <표 III-2> 동아시아 주요국의 무역량 추이 | 34 |
| <표 III-3> 동아시아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추이 | 36 |
| <표 V-1> 한·일 수출입현황 | 117 |
| <표 V-2> 한·일 간 직접투자 | 118 |
| <표 V-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 125 |
| <표 V-4> 한국의 무역 중 중국의 비중 | 126 |
| <표 V-5> 중국의 무역 중 한국의 비중 | 126 |
| <표 V-6> 한국의 대중 투자현황 | 127 |
| <표 V-7> 2008년 한·러관계 전개과정 | 138 |
| <표 V-8> 한국의 대러 교역추이 | 154 |
| <표 V-9> 한국의 교역규모 | 165 |
| <표 V-10>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 171 |
| <표 V-11> 한국의 대호주 교역추이 | 178 |
| <표 V-12> 한국의 대뉴질랜드 교역추이 | 181 |
| <표 V-13> 한국의 대인도 교역추이 | 183 |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표 VII-1> 한·동아시아국가 간 협력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능력별 구분 218

<표 VII-2> 동아시아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위한
국가별 정책추진 방안 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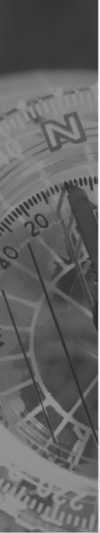


그림 목 차

| | |
|---------------------------------------|-----|
| <그림 II-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 13 |
| <그림 II-2>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구도 | 15 |
| <그림 III-1> 세계경제(GDP) 전망 | 24 |
| <그림 III-2>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변화 추이 | 48 |
| <그림 IV-1> 러시아의 원유파이프라인 계획 | 76 |
| <그림 V-1> 2008년 한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비율 | 164 |

I. 서론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미·소간의 이념과 권력 정치적인 대립으로 특징 지워지는 냉전이 종식된 이후 국제질서에서는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오랫동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러나 냉전이 종식된 지 약 20년에 불과한 현재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국제적 입지는 흔들리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인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2001년 이슬람 무장테러 단체인 알 카에다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 자행된 9·11 사태로 약 3,000명에 달하는 미국인과 외국인들이 사망하였다. 이는 미국의 국가적 위신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둘째, 2001~2009년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라크 전쟁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힘을 통한 평화를 구현해 왔다. 미국은 우월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혼자서 행동해 왔고, 다른 동맹국들의 의견을 듣기보다 명령하고, 영향력으로 동맹국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으로 압박했다. 이렇게 하드 파워(Hard Power)에 기반을 둔 외교정책은 끊임없이 불화를 만들어냈다.”¹ 셋째, 미국 경제는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긴 침체에 빠져있다. 2007년 4월 미국의 초대형 모기지론 대부업체의 파산으로 시작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사태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신용경색을 불러왔다. 일본, 영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들의 경제상황도 매우 나빠져 미국 금융위기의 파급효과가 전 세계에 미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2009년 1월 민주당 후보로 집권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약화된 ‘미국 지도력의 복구’(Renewing of American Leadership)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21세기 국제질서에서는 그동안 미국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¹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홍순식 옮김, 『스마트파워』 (서울: (주)도서출판 삼인, 2009), p. 19.

해왔던 일본과 유럽연합(EU) 이 외에 브릭스(BRICS)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 국토가 광대하여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인구가 많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통칭하는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 일본, EU와 더불어 세계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릭스 4개국 정상들은 6월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에서 최초의 정상회의를 열고 세계 금융시스템 개혁과 무역체제 재편, 개도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의결권 확대, 서방 금융기관의 투기 규제, 국제경제 질서재편 등의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전 세계 달러와 유로화의 42%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경제 위기의 와중에서도 2009년 4.8%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2009년 현재의 국제질서는 미국이 자국의 지도력 회복을 모색하는 가운데 미국 중심의 단극체제가 다극체제로 변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 고찰할 때, 유럽에서는 EU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확대·강화하고 있다. EU는 1952년 「유럽석탄철강공동체」로 출범할 당시 회원국이 6개국에 불과했으나 6차에 걸친 확대를 통해 현재 27개국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1/4을 차지하고 있는 ‘세계적 파워’(Global Power)이다. 2007년 EU가 전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37.5%에 달한다. 특히 EU는 경제 분야에서의 통합과 확대의 진전을 바탕으로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을 체결하여 공동외교안보정책(CFSP)과 내무사법협력(JHA)에 합의하였다. 이 결과 EU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21세기의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EU와 함께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동아시아이다.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하고, 전 세계 인구의 1/4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국가들에서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관찰되고 통합과정이 강화되고

있다. 세계경제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이 증가하고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의 미래가 이 지역에 달려있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시아의 한 하위지역인 동아시아에 대한 개념은 매우 불명확하다. 유엔 및 다른 통상적인 정의에 의하면 동아시아(East Asia 또는 Eastern Asia)는 남북한, 중국, 일본, 대만, 몽골을 포함한다. 그러나 경영학 및 경제학에서 동아시아는 경제적, 정치적 지역주의와 통합을 목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대만, ASEAN 10개국을 포함하는 광범한 지리적 영역을 의미한다.

ASEAN+3(한·중·일)로부터 발생된 동아시아 공동체(East Asian Community)에 관한 아이디어는 한국, 중국, 일본 보다 더 많은 국가들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n Summit)는 인도와 호주를 포함하고 있다.²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은 아시아를 선진공업 아시아(Industrial Asia)와 신흥아시아(Emerging Asia)로 구분하고 선진공업 아시아에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3개국을 포함시키고 있다. 신흥 아시아는 신흥공업국(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NIEs)과 ASEAN-5로 구분하고 있는데 전자에는 한국,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 인도 6개국, 후자에는 ASEAN 10개국 중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 베트남 5개국이 해당된다.³ 상기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동아시아를 IMF의 아시아 개념을 원용하여 선진공업 아시아 3개국과 신흥아시아 11개국 및 다른 ASEAN 4개국(미얀마, 캄보디아, 브루나이, 라오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동아시아에 속하지 않으나 우리의 안보

² “East Asia,” <http://en.wikipedia.org/wiki/East_Asia>.

³ IMF, *Regional Economic Outlook: Asia and Pacific* (Washington, D.C. : IMF, 2009), p. vii.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 한반도 접경국가인 러시아를 포괄하는 총 20개국의 광범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008년 2월 25일 출범하여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를 지향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국한된 지역 범주의 사고를 탈피하여 범아시아 차원의 협력 의제를 추출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신아시아 협력 외교’를 추진하여 세계의 중심권으로 부상하는 아시아의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다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21세기의 국제질서에서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Ⅱ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와 실용외교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의 개념을 정립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한 정책과제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Ⅲ장은 이명박 정부가 동아시아 외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외적 환경이 되는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을 안보와 경제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Ⅳ장은 동아시아의 관련국들이 역내 안보와 경제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떠한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제Ⅴ장은 한국의 동아시아국가 관계 현황을 주요국(미·일·중·러) 관계와 ASEAN 관계 및 기타(호주와 뉴질랜드, 인도, 다자)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분석 및 고찰을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한국의 동아시아국가 관계를 협력 촉진요인과 협력 장애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 제Ⅶ장은 결론으로서 우리 정부의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을 3대 기본방향과 세부 추진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II.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와
전략적 협력 강화 방안

1.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와 실용외교

2008년 2월 25일 공식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시대정신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추구해야 할 장기적 국가비전으로 ‘선진화를 통한 세계일류국가’를 공식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규범으로 ‘창조적 실용주의’를 주창하는 한편, 정부 5년 내 실현할 국정목표를 ‘신(新)발전체제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창조적 실용주의’는 실질적인 성과 중시, 현실적인 적합성, 새로운 목표와 방법의 창안, 체계적인 문제 인식과 해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발전체제 구축’은 산업화시대 발전체제를 승화시킨 새로운 발전체제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부문별 준거로는 ‘섬기는 정부,’ ‘활기찬 시장경제,’ ‘능동적 복지,’ ‘인재대국,’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는 5대 국정지표가 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국정지표별로 각각 4개씩의 국정전략을 배치하고, 각각의 국정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대국민 약속으로써 총 100개의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성숙한 세계국가’의 국정지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국익 우선의 세계기여 실용외교, 굳건한 선진안보체제 구축, 품격 있고 존중받는 국가 형성이라는 4개의 국정전략과 20개의 국정과제가 있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이라는 국정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5개 국정과제는 북핵 폐기의 지속적 추진,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한·미관계 발전,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신아시아 협력외교 추진이다.⁴

외교면에서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 외교’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4. 대한민국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자주’나 ‘우리 민족끼리’와 같은 소위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를 털어 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 위에서 안보나 경제 등 국익을 증진하되 경제면을 중시하고 외교에 따른 행동에서는 신축성과 유연성을 견지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용외교의 주요 목표는 신뢰관계가 훼손된 한·미동맹의 복구, 한국의 외교지평을 아시아와 호주 등으로 확장하는 신아시아 협력외교, 전 세계적 에너지 외교 추진, 한국의 국가위상에 적합한 기여외교, 한류의 전파와 같은 문화코리아 외교 전개 등이다.⁵

2.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의 개념과 주요 정책과제

이명박 정부는 안보위협이 다양화, 국익과 가치의 동시 추구 경향,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국가영향력 기반의 다변화 등으로 세계 안보환경과 위협요인이 변화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첫째, 우리 정부는 오늘날의 국제사회가 국가 간 교류의 증대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국제협력을 통한 평화와 복지의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국가 내부나 초국가적 영역으로부터 발생하는 도전과 위협에 직면할 가능성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안보에 대한 도전과 위협 요인은 테러리즘·마약과 무기거래·해적행위·컴퓨터 범죄·불법이민·불법자금 세탁 등의 초국가적 범죄, 대량파괴무기의 수평적 확산 및 이의 사용 가능성 증대, 기후변화·온실가스 배출 규제 등 환경과 경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 지역적 종교·민족 분쟁, 동북아에서의

⁵- 유종하,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정책,”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8.1).

역사·영토 분쟁 등이다.

둘째, 우리 정부는 21세기 국제질서에서 국익개념이 점차 국제사회의 공공성과 연계되는 추세이며 국제사회는 자유민주주의, 인도주의 가치, 시장경제에 대한 공감대와 이의 확산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자유민주주의 대열에 아직 동참하지 못한 실패국가(Failed States)들의 관리, 인간안보(Human Security), 테러리즘·국제난민·기후변화·질병 등 포괄안보위협(Comprehensive Security Threats)에 대한 국제사회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응, 인권침해 지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인도주의적 개입, 빈부의 양극화 치유와 개선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등을 중시하고 있다.

셋째, 우리 정부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제면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경제성장 둔화, ‘브릭스’ 신흥 시장국가들의 경제적 부상, ASEAN 및 한·중·일 국가들 간의 생산 네트워크 강화, EU의 통합심화와 회원국 확대에 의한 영향력 증가 등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서 세계경제 무대에서는 특정국가가 세계경제 질서의 틀과 규칙을 독점하기 보다는 주도적인 행위자의 수가 점차 증대되어 협의와 타협의 과정이 중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인한 2007년 미국의 경제위기와 그 여파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세계 에너지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자원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 경향 등으로 세계 경제의 긍정적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입장이다.

넷째, 우리 정부는 군사력과 경제력이 여전히 국가영향력의 핵심기반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국가의 이미지와 평판을 통한 국제적 리더십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국가영향력 기반이 다변화되고 있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급변하는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략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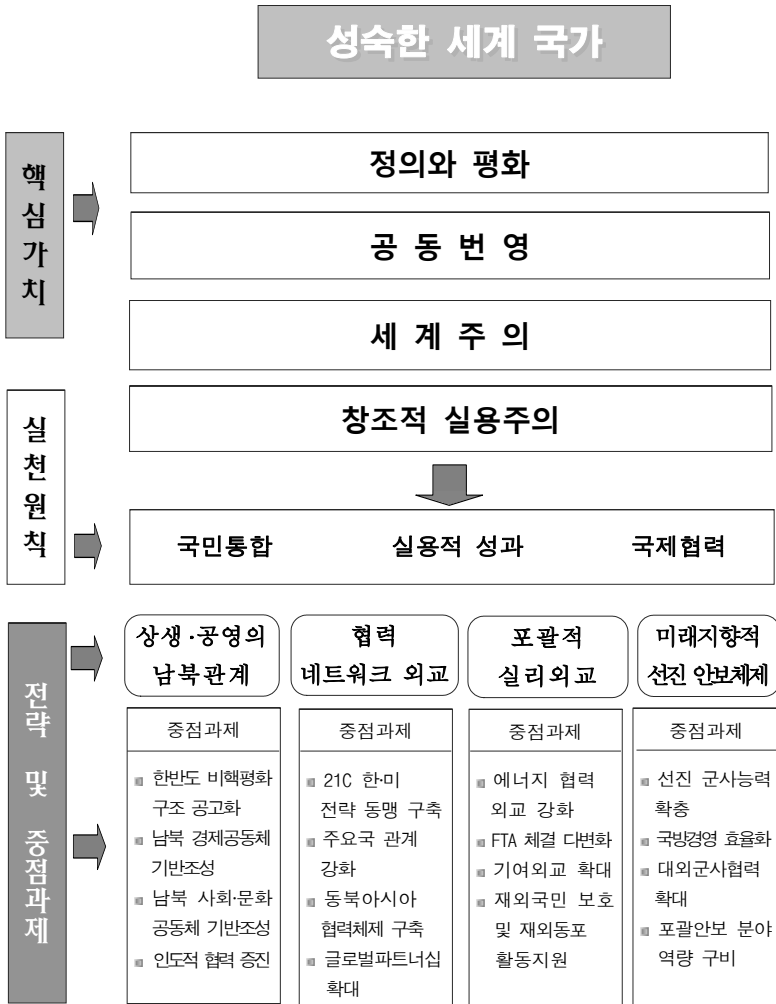
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가정책과 현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주어진 영향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지혜로운 전략(Smart Power)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⁶

상기와 같은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3월 ‘성숙한 세계국가’를 보다 체계화하여 외교안보의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성숙한 세계국가’는 “한반도의 범주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와 국가 이익을 세계차원의 공간에서 설정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⁷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의와 평화, 공동번영, 세계주의를 성숙한 세계국가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로 삼고, ‘창조적 실용주의’의 실천원칙 하에서 4개의 전략목표를 갖고 16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그림 II-1> 참조).

⁶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pp. 6~10.

⁷ 위의 글, p. 12.

●그림 II-1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



출처: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p. 11.

상기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 비전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는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할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을 “한국과 19개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의 동아시아국가들 간에 존재하는 협력요인들을 확대·강화하고 갈등 요인들을 축소·제거하는 한편, 경제·안보·문화면에서 우리의 중요한 현안과 중장기 과제들을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성숙한 세계국가 역량을 구축하고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개념 정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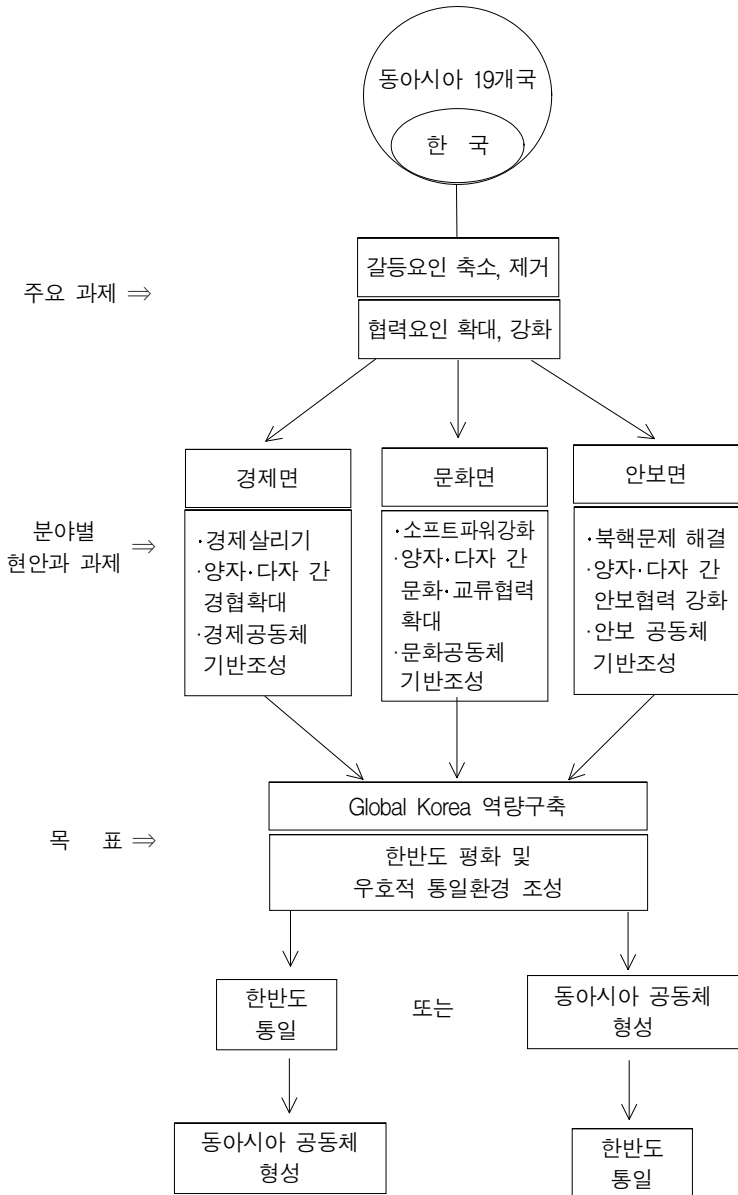
우리 정부의 중요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면에서 세계경제 위기에 따라 침체된 국내경제 살리기, 양자·다자 간 경험 확대,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기반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안보면에서는 북핵문제 해결, 양자·다자 간 안보협력 강화,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기반조성이며, 문화면에서는 소프트파워 강화, 양자·다자 간 문화교류·협력 확대,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반조성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와 같은 분야별 주요 현안과 과제들을 관련국들과의 협력으로 해결하여 성숙한 세계국가 역량이 구축되고 우호적인 통일환경이 조성되면 이를 기초로 우리 정부는 통일을 달성하고 동아시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먼저 형성한 이후 통일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상호의존도 및 협력과 갈등 정도를 고려할 때, 동아시아 공동체는 경제공동체 → 문화공동체 → 안보공동체의 순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그림 II-2> 참조). 또한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주요 국가별 정책과제들을 도식화하면 <표 II-1>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그림 II-2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 구도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표 II-1 '동아시아 전략적 협력'을 위한 국가별 주요 정책과제

| 대상국 | 주요 정책과제 |
|---------------|--|
| 미국 | '한·미동맹 미래비전' 수립과 구체화, 한·미 FTA 조기 비준, 고위급 전략대화 개최, '주한 미군기지 이전 정책협의회' 운영 |
| 일본 | 성숙한 동반자 관계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상급·고위급 외교 강화, 예방외교를 통한 한·일 간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 도모, 올바른 역사 인식 제고 공동 노력, 상생의 실질적 경제협력 강화 |
| 중국 | 양국 정상 상호 방문 및 전략대화 개최, 호혜적인 경제·통상협력 확대, 청소년 및 문화 교류·협력 확대, 양국관계 갈등요인의 안정적 관리 도모, 북핵 해결 및 북한 문제 관련 협력 도모 |
| 러시아 | 외교차관 전략대화, 경제통상 관련 정부 간 협의회 개최, 한·러 수교 20주년(2010) 기념 각종 문화행사 개최, 극동시베리아 개발 Action Plan 채택,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2012) 및 소치 동계올림픽(2014) 인프라 구축 참여 |
| 한·미·일 | 3국 간 폭넓고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활용, 협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고위급 협의 개최 |
| 한·중·일 | 3국 협력의 제도화·체계화 |
| ASEAN 및 기타 국가 | 동남아·서남아·대양주 역내 주요국별 맞춤형 전략 수립·추진, FTA 확대·발전, 문화적 소통 및 협력, 동아시아 경제·안보·문화 공동체 구축 |

출처: 대한민국 정부,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 (2008), pp. 83~86 참조하여 작성.

Ⅲ.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2007년의 미국발 금융위기로 2008년 9월 야기된 세계경제 위기는 동아시아 각국의 대내외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동아시아 질서는 기존 안보역학구도의 변화, 역내 경제의 역동성, 역내 안정 위협요인의 상존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 위협요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 역내 영토분쟁,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이 라고 할 수 있다.

1. 세계경제 침체와 미약한 회복세

가. 세계경제 위기의 배경과 현황

미국의 ‘비우량 주택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로 인해 2007년 초부터 미국은 금융위기를 맞았고, 이는 2008년 9월 전 세계 국가들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세계경제는 전반적인 침체상태에 빠졌다.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에 대한 배경은 구조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으로 구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먼저 구조적 원인과 관련, 세계경제에서는 1980년대부터 자유화, 개방화 추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거시적 불균형이 노정되었다. 지난 10년간 원유 수출국과 일본 및 중국 등 동아시아 신흥경제국들은 높은 저축률로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축적한 반면, 미국과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등은 과소비로 막대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대규모의 거시적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외환보유고는 적자국들이 발행한 국공채 투자 위주로 운용되었고 이는 실질금리를 하락시켜 주택모기지 등에 신용 확대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고수의 추구에 따른 금융혁신 및 구조화상품 발달과 금융자산 증대 등이 형성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거시경제에서 금융부문의 비중 및 영향력도 확대되는 신금융자본주의가 구축되면서⁸ 탈규제화, 위험관리의 실패, 실물경제와 유리된 금융시장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금융부문의 비정상적 급성장은 금융체제의 불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미국의 폭증하고 있는 재정적자는 경상수지 적자를 자극하게 되고 국제발행을 증대시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국제유동성을 확대시켰다.⁹

둘째, 세계경제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미국의 부동산경기 후퇴로 인한 서브프라임 대출의 부실화와 그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은행의 파산 등 부실화 및 그 여파이다. 미국의 경기가 IT버블로 인한 하강을 8개월 만에 끝나고 2001년 말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중에서 서브프라임, Alt-A, 홈에쿼티론 등 신용이 낮은 가계대출의 유동화 비율이 2001년 35.5%에서 2006년 62.6%로 높아졌다. 이같이 비우량 가계대출자산의 비중이 커지는 은행대출구조의 부실화는 결국 금융위기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또한 모기지대출의 유동화를 통한 증권(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이 발행되면 투자은행들이 MBS에 다른 채권, 대출자산 등을 섞은 후 이를 새로운 기초자산으로 삼아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을 발행하였다. 발행된 CDO에 다른 자산 혹은 파생상품을 결합하여 다시

⁸ 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980년 이후 약 3배 증가하였고, GDP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100% 이상인 나라 수가 1990년 33개국에서 2006년 72개국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26개국의 경우, 금융자산 규모가 300%를 초과하였다. 권순우, “신금융자본주의의 구조 및 핵심이슈,” 『신금융자본주의-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2008), pp. 8~9.

⁹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2009.4), pp. 3~4.

새로운 CDO를 발행하는 등 CDO가 확대 재생산되면서 단기간 내에 거대한 파생상품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파생상품에 투자한 투자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하여 당초 서브프라임 모기지대출의 부실화 정도로 단순해 보였던 2007년의 미국 금융 불안이 2008년 9월에는 전 세계 금융시장을 마비시키는 금융위기로 발전한 것이다.¹⁰

세계 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서브프라임 문제가 처음 시작된 것은 2007년 2월 영국의 금융그룹인 HSBC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중 부실이 20%에 달한다고 고백한 것이었다. 서브프라임을 전문적으로 취급했던 모기지 업체들이 타격을 받아 동년 3월 업계 2위였던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파산을 선언하면서 관련 전문 업체들이 차례로 무너졌다. 모기지 전문 회사에서 피해가 그칠 줄 예상했던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한 대응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모기지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채권(MBS)를 이용하여 담보부 채권(CDO)을 운용했던 헤지 펀드들이 위기에 몰리면서 결국 7월 21일 ‘베어스턴스’가 운영하던 헤지펀드 2개를 청산하였다. 미국 연방준비은행(FRB)의 시장안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10월이 되자 ‘씨티그룹’과 ‘메릴린치’ 등 대표적 투자은행들이 흔들리기 시작하였고 2008년 3월에는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하면서 ‘JP모건 체이스’에 넘어가게 되었다. 뒤를 이어 9월에는 미국 5위 투자은행이었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했으며 이는 세계경제 위기를 촉발하였다. 이후 각종 은행들과 금융회사들은 파산하거나 인수되었으며 투자은행이었던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는 은행지주회사로 전환신청을 하고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고 있다.

¹⁰- 국회예산정책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 pp. 4~1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세계 각국에서도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와 자국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세계 금융위기의 폭풍은 다른 국가들보다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더 증폭된 위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위기가 증폭된 배경으로는 국내 금융시장의 높은 개방성, 탈규제화로 인한 저규제 수준, 신흥시장의 한계 등을 들 수 있다.¹¹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나 전례 없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지원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안정되고 있다. 미국 경제는 산업생산과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2008년 4/4분기 GDP 성장률이 -3.8%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서 미국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2월 『2009 경기부양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ARRA)을 만들어 미국 GDP의 5.5%에 해당하는 7,870억 달러 규모의 최대 재정지출을 집행하고 있다. 이는 350만개의 일자리 창출, 중산층 지원 및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¹²

이 결과 주요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고 주택경기와 소비침체가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EU 전체 GDP 1.5%에 달하는 2,000억 유로 규모의 경기회복 대책을 운용하고 있다. 이 결과 2009년 2/4분기부터 내수 및 수출의 개선으로 산업생산의 감소세가 완화되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¹¹ 최원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진단 및 과제,” 『상장협연구』, 제59호 (2009.4), p. 16.

¹² “THE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 OF 2009,” <<http://www.msbo.org/services/biz/2009/FactSht-Summary.pdf>>.

일본 정부는 경기대책으로 총 75조 엔의 금융지원 및 재정지출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 경제는 정책당국의 대규모 경기부양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감소와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소비 및 고용상황의 부진이 심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내수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소폭 개선되면서 2009년 2/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플러스를 기록하는 등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다. 중국 경제도 수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09년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1%까지 하락하였으나, 3월 들어 산업생산과 고정자산투자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수출 감소세도 진정되면서 경기가 비교적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요 신흥시장국의 경기 개선도 당초 예상되었던 것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¹³

나. 세계경제 위기의 전망

2009년 하반기부터 세계경제는 침체 상황을 벗어나기 시작하였으나 안정화로의 길은 평탄치 않으며 경제회복은 더디게 진행되어 세계 경제(GDP)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III-1> 참조). 주로 공공개입 때문에 금융 여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개선되었으나 세계경제 침체는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느린 속도의 회복이 예상된다. 이는 금융체제들이 아직 건전하지 못하고 공공정책 지원이 점차 축소될 것이며 재산가격 축소로부터 고통 받은 각국의 가정들이 절약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금융 분야를 건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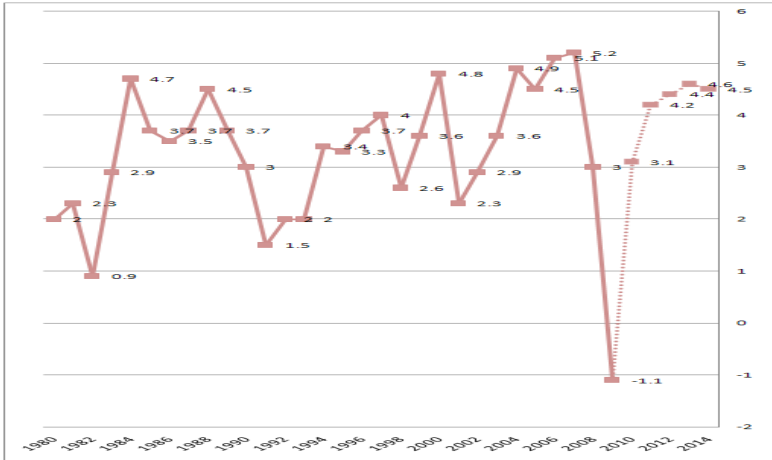
¹³- KDI, 『KDI 경제전망』, 제26권 1호(수정), pp. 17~19; 이승철, “경제살리기 방안처리는 경제위기 극복위한 중요한 해법 될 것,” 『일간전경연』, 통권 533호 (2009.4.17), p. 5; KDI, 『KDI 경제동향』 (2009.5), pp. 8~10.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며 거시경제정책들은 계속 지원될 필요가 있다.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재정적자 국가들에서 대내적 수요가 많지 않다면 주요한 재정흑자 국가들에서 많은 수요를 유지하는 정책들이 필요하다.¹⁴

●그림 III-1 세계경제(GDP) 전망

(단위: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http://www.imf.org>>.

‘국제통화기금’(IMF)에 의하면, 미국은 노동과 주택 시장의 개선, 산업생산의 회복세, 경영과 소비자 신뢰의 개선, 2009년 후반기 생산의 안정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009년 -2.7%, 2010년 1.5%로 각각 전망된다. 유로(EURO) 지역에서는 소비자와 경영의 조사지표들이 회복되고 있으나 실질 활동 관련 자료들은 안정화에 대한 징후를 거의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활동이 다른 지역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이루어

¹⁴- IMF, “World Economic Outlook,” <<http://www.imf.org>> (검색일: July 8, 2009), p. 1.

지고 있다. 실업률 상승이 소비와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에 따라서 경제성장률은 2009년 -4.2%, 2010년 0.3%로 예상된다. 일본은 생산의 안정화, 소비자 신뢰 개선, 적극적인 금융정책, 다른 아시아 경제권에 의한 강력한 이행 등으로 2009년 -5.4%로 전망되는 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는 1.7%로 상승될 것으로 보인다. 거시경제적 부양책과 기대치보다 더 신속한 자본흐름의 전환 등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8.5%에서 2010년 9.0%, 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2.4%에서 2010년 3.6%로 각각 전망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 -1.0%, 2010년 3.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표 III-1> 참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해소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교역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와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2009년에는 -1%를 상회하는 수준 그리고 2010년에는 4%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¹⁵

● 표 III-1 주요국의 2009~2010년도 경제성장률(GDP) 전망

(단위: %)

| 전망 연도 | 세계 | 미국 | 유로지역 | 일본 | 중국 | 아시아 신흥공업국 | 한국 |
|-------|------|------|------|------|-----|-----------|------|
| 2009년 | -1.1 | -2.7 | -4.2 | -5.4 | 8.5 | -2.4 | -1.0 |
| 2010년 | 3.1 | 1.5 | 0.3 | 1.7 | 9.0 | 3.6 | 3.5 |

주: 아시아신흥공업국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October 2009),” <<http://www.imf.org>>, p. 2;
KDI, 『KDI 경제전망』, 제26권 1호(수정), p. 8 참조.

¹⁵ IMF (검색일: October 2009, July 8 2009), pp. 4~5; KDI, 『KDI 경제전망』, 제26권 1호(수정), p. 3 참조.

2. 역내 안보 역학구도의 변화

냉전종식 이후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1996년 형성된 ‘미·일 대 중·러’의 견제구도가 2004년 호주의 미사일방어(MD)체제 가입을 계기로 ‘미·일·호주 대 중·러·상하이협력기구(SCO)’ 견제구도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통령의 집권 이후 상호 견제보다는 협력이 부각되어 기존의 역학구도가 새롭게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가. 부시 행정부와 ‘미·일·호주 대 중·러·SCO’ 견제구도

냉전종식 직후의 유동적인 동북아 질서에서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1996년 4월 17일 도쿄를 방문하여 하시모토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미·일 안보 공동선언: 21세기를 향한 동맹’을 발표하였다.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은 “아태지역의 안보정세를 보다 평화적이고 안정화시키기 위해 공동 혹은 개별적으로 노력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양국의 협력범위를 기존의 ‘필리핀 이북의 극동’에서 아태지역으로 확대하였다. 미국과 일본은 동북아지역의 유사시에 대비한 방위협력과 아태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해 미·일동맹을 재정비한 것이다.¹⁶

‘미·일 신안보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일주일 후인 4월 25일 옌진 러시아 대통령은 베이징을 방문하여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관계를 ‘21세기를 대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¹⁶ 배정호, “탈냉전시대의 미·일동맹: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pp. 45~77.

발전시킬 것을 선언하였다.¹⁷ 그리고 다음날 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중앙아시아 3개국과 함께 ‘상하이 5개국 회의’를 발족시켰다. 중·러 양국은 탈냉전기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서 미국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저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이로써 동아시아 질서는 ‘미·일 대 중·러’를 양대 축으로 하는 느슨한 대립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2001년 1월 집권한 부시 공화당 대통령은 9·11 테러 사태를 겪으면서 대외정책 목표를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에 두었다. 그리고 미국 군사력의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MD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했다. 미국은 동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 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역내 평화유지와 더불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은 미·일동맹 체제하에서 잠재적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증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 자원 및 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국가이익으로 추구하였다.¹⁸ 9·11테러 이후 부시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양국의 전략적 공동이익과 더불어 개인적 친분을 기초로하여 미·일동맹을 공고히 하였다.

반면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양국 공통의 전략목표로 설정한 중·러는 부시 미 행정부가 출범한 후 패권정책을 견제하기 위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왔다. 장쩌민 국가주석은 2001년 7월

17. “Joint Statement Issued on ‘Strategic Partnership,’” *FBIS-CHI-96-081*, pp. 1~2.

18. 배정호,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p. 5~6.

16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향후 20년간 양국의 포괄적 관계를 규정하는 「중·러 선린우호협력조약」¹⁹을 체결하였다. 이후 중·러 양국은 정상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정치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안보협력의 확대를 위한 군 인사교류도 활발히 진행하였다. 2003년 차오강찬 국방부장의 방러와 2004년 이바노프 국방장관의 방중 등이 그 예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 등 불량국가들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와 2004년 7월 MD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에 의해 미·호주 양국간에는 MD프로그램에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의 연구, 개발, 실험 및 평가의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미국은 호주의 레이더 기술 및 함상과 지상 기지 감지기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호주는 정보, 감시, 정찰체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²⁰ 반면 이와 같은 호주의 MD체제 가입과 SCO의 제도화²¹로 ‘미·일 대 중·러’의 견제라는 역학구도가 ‘미·일·호주 대 중·러·SCO’ 견제구도로 확대되었다.

미국측에서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일본측에서는 외무장관 및 방위청 장관이 참석하는 미·일안정보장협의위원회(SCC)는 2005년 2월 19일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및 아태지역의 안보 불확실성

¹⁹ 총 24조로 구성된 이 조약은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의 장기적·전면적 발전(제1조), 핵무기 선제불사용과 전략핵탄두 상호 불겨냥(제2조), 러시아의 영토보존 정책에 대한 중국의 지지와 대만의 독립 반대에 대한 러시아의 재확인(제4~5조), 변경지역에서 군사적 신뢰 강화와 상호 군사력 감축(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Xinhua: Text of Sino-Russian Treaty,” *FBIS-CHI-2001-0716*, pp. 1~5.

²⁰ “British American Security Information Council: Missile Defence Update” (July 1, 2004), <<http://www.basicint.org/update/MDU040701-PF.htm>> 참조.

²¹ 1996년 발족된 상하이 5개국회의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여 2001년 ‘상하이 협력기구’(SCO)로 제도화되어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에서 초래되는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통의 전략목표를 공표하였다.²² 그 후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10월 ‘미·일동맹, 미래를 위한 변혁과 재편’으로 명명된 보고서를 공개하고, 2006년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하였다.²³ 그리고 미국·일본·호주·인도·싱가포르 5개국은 ‘말리바 2007’이라는 작전명으로 2007년 9월 4~7일 인도양 벵골만에서 해상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미국은 동년 8월 SCO 6개 회원국이 러시아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합동 군사 훈련을 한 것에 대응하여 5개국 대규모 군사훈련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미·일 양국이 2005년 2월 공통의 전략목표를 설정한 후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응하여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중·러 양국이 국제질서의 다극화에 공동 노력할 것과 국제사회에서의 주권 존중, 인권의 지역적·국가적 특성을 인정할 것” 등의 내용을 포함한 ‘21세기 국제질서에 대한 공동선언’²⁴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는 8월 18~25일 극동지역 및 중국 산둥반도 및 인근해상에서 ‘평화의 사명 2005’로 명명된 양국간 최초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합동군사훈련은 동북아지역에 미·일 군사동맹에 대응하는 새로운 군사협력체가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²²- *Joint Statement U.S.-Japan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Washington D.C.: February 19, 2005), <www.mofa.go.jp/region/n-america/us/security/scc/joint0502.htm>.

²³- Security Consultative Committee Document, *U.S.-Japan Alliance: Transformation and Realignment for the Future* (October 29, 2005).

²⁴- “China-Russia Communique Spells Out Stance on Regional, International Issues,” *FBIS* (July 3, 200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보여주었다.²⁵

2006년 3월에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정치·경제·군사·안보 전 분야에 걸쳐 양국 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중·러 공동성명』²⁶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6년 중국은 ‘러시아의 해’를, 2007년 러시아는 ‘중국의 해’를 각각 기념하기로 합의하였다. SCO는 2007년 8월 9~17일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에서 ‘평화사명’(Peace Mission 2007) 명칭으로 창설 이후 최대 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²⁷ 서방국가들은 SCO의 군사동맹 발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또한 중·러 양국은 2008년 10월 11~25일 블라디보스톡 인근 해상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는 중국의 동해함대 소속 600여 명의 해군과 러시아의 지원으로 건조된 최신예 미사일 구축함 타이저우(泰州)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²⁸

나. 오바마 행정부와 안보 역학구도의 새로운 변화

부시 공화당 행정부는 2001~2008년 집권기간 중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성향을 보이며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외교(Power Politics)

25. 중·러 양국은 공히 UN의 원칙에 부합한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합동작전이라고 밝히고 제3국을 겨냥해서 실시한 훈련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중·러, 첫 합동 군사훈련 개시(종합2보), 『연합뉴스』, 2005년 8월 18일, <<http://bbs.yonhapnews.co.kr>>.

26. 여인곤, 『중·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6).

27. *SCO Peace Mission 2007 Exercise Concluding Stage To Be Held* (August 16, 2007), <<http://toolkit.dialog.com>>.

28. 『연합뉴스』, 2008년 10월 16일.

를 지향하였다. 반면, 2009년 1월 출범한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행정부의 전통에 따라서 자유주의적 국제주의의 성향을 보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을 강조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²⁹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금융시스템 안정화 및 세계경제 회복에 대내외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동아시아에서 그동안 형성되었던 ‘미·일·호주 대 중·러·SCO’의 상호견제라는 안보역학구도는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상이한 이념과 가치관 및 역사적 전통, 국가목표, 동아시아 전략 등으로 기본적으로 상대국을 견제하고자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제테러와 대량살상무기 확산, 마약 밀거래, 전염병, 에너지 등 범세계적 문제와 세계경제 위기의 해결을 위해서는 중국 및 러시아의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미 행정부의 클린턴 국무장관은 대외정책에 관해서 스마트파워(Smart Power)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외교정책과 이라크 침공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미성향이 증대하자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이사인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나이(Joseph S. Nye)는 미국의 장래를 위한 스마트파워 정책을 강조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스마트 파워 정책’이란 군사력·경제력으로 구성된 하드 파워(Hard Power)와 문화·가치·아이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접목한 현명한 외교정책을 의미한다. 스마트 파워 정책은 동맹과 파트너십 강화, 저개발국가에 대한 지원 확대, 인적 교류 증진, 자유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적

²⁹- William G. Hyland, *Clinton's World: Remaking American Foreign Policy* (Westport: Praeger, 1999), p. 3~4.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통합 추구, 에너지·기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³⁰ 이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대외정책에서 스마트 파워 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클린턴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역을 동아시아로 결정하고, 2월 16~22일 일본·한국·중국·인도네시아를 순방하며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22일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과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국제안보문제 등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특히 인권문제가 미·중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없음을 표명하여 오바마 정부가 미·중관계를 한층 더 격상시키기를 원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³¹ 중국도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관계가 한층 더 격상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과 쌍무적인 경제협력을 증진시키며 이와 동시에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도 강화하여 미·중관계의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은 4월 2일 런던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지역 현안과 세계평화 유지 등을 논의하는 한편, 21세기 전면적 협력관계 건설,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전략대화를 통합 격상시킨 새로운 대화채널 출범 등에 합의하였다.³² 그러나 양국간에는 중국 위안화 절상, 시장개방, 중국의 국방비 투명성, 대만문제 등을 둘러싸고

³⁰-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JR. (et. al.),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³¹-“Clinton asks China to curb emissions: Climate talks signals a new U.S. emphasi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3, 2009.

³²-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on Bilateral Meeting with President Hu of China,” <<http://www.whitehouse.gov>> (검색일: 2009.4.1).

여전히 많은 갈등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

한편, 오바마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서도 융통성 있는 태도를 보이며 양국관계의 재설정을 모색하고 있다.³³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하는 효율적인 핵통제체제 구축 및 핵군축을 위해서는 다량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러시아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MD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체코에 첨단레이더망 기지 설치 계획 등을 철회할 의사를 9월 17일 표명하며, 양국관계 정상화를 위한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미국의 조치 이후에 폴란드와의 국경지대인 칼리닌그라드 에 이스칸더(Iskander) 전술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취소할 예정이다.³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도 오바마 행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푸틴의 대외정책을 이어 받아 세계질서의 다극화를 강조하고 있어 미·러 협력관계가 순탄하게 증진되어가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³⁵

3. 역내 경제의 역동성

동아시아는 유럽 및 북미에 이은 제3의 세계경제 허브이다. 냉전에 종식된 직후인 1992년부터 2007년까지 16년 동안 14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량과 직접투자 유치 추이를 분석하면 세계경제에서

³³ 바이든 부통령은 2009년 2월 7일 독일 뮌헨에서 개최된 NATO 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하였다.

³⁴ “Russia insists on involvement in any international missile shield,” <<http://en.rian.ru>> (검색일: 2009.9.21).

³⁵ Owen Matthews, “The Medvedev Doctrine,” *Newsweek* (December 2008), pp. 36~3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동아시아 경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먼저 전 세계 무역량에서 동아시아 주요국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다. 1992년 전 세계 무역량 7조 5,777억 달러에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량은 1조 8,234억 달러로서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1%이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무역량 12조 9,656억 달러에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량은 3조 4,298억 달러로 26.5%에 달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전 세계 무역량 27조 9,768억 달러에서 동아시아 주요국들의 무역량은 7조 7,722억 달러로 27.8%이다. 27.8% 중 선진공업아시아 3개국 6%, 부상하는 아시아 11개국이 22%를 각각 차지하고 있어 부상하는 아시아 11개국의 무역이 매우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2> 참조).

● 표 III-2 동아시아 주요국의 무역량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1992년 | | 2000년 | | 2007년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전 세계 | 3,730,200 | 3,847,500 | 6,381,200 | 6,584,400 | 13,851,900 | 14,124,900 |
| 동아시아 (①+②) | 957,520 | 865,845 | 1,815,491 | 1,614,286 | 4,104,519 | 3,667,708 |
| ①선진공업 아시아 (Industrial Asia) | 392,533 | 286,255 | 556,416 | 461,112 | 868,609 | 808,380 |
| 일본 | 339,885 | 233,246 | 479,249 | 379,511 | 700,538 | 619,829 |
| 오스트레일리아 | 42,824 | 43,807 | 63,870 | 67,696 | 141,099 | 157,651 |
| 뉴질랜드 | 9,824 | 9,202 | 13,297 | 13,905 | 26,972 | 30,900 |
| ②부상하는 아시아 (Emerging Asia) (③+④) | 564,987 | 579,590 | 1,259,075 | 1,153,174 | 3,235,910 | 2,859,328 |

| 국가명 | 1992년 | | 2000년 | | 2007년 | |
|------------------|---------|---------|---------|---------|-----------|-----------|
|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수출 | 수입 |
| ③신흥공업국 (NIEs) | 445,501 | 453,707 | 972,214 | 913,028 | 2,689,485 | 2,360,095 |
| 한국 | 76,632 | 81,775 | 172,268 | 160,481 | 371,489 | 356,846 |
| 중국 | 84,940 | 80,585 | 249,203 | 225,094 | 1,218,000 | 956,000 |
| 홍콩 | 119,487 | 123,407 | 201,860 | 212,805 | 344,509 | 367,647 |
| 대만 | 81,395 | 72,181 | 168,700 | 128,580 | 310,700 | 200,730 |
| 싱가포르 | 63,484 | 72,179 | 137,804 | 134,545 | 299,272 | 263,155 |
| 인도 | 19,563 | 23,580 | 42,379 | 51,523 | 145,515 | 215,717 |
| ④ASEAN-5 | 119,486 | 125,883 | 286,861 | 240,146 | 546,425 | 499,233 |
| 인도네시아 | 33,967 | 27,280 | 65,404 | 43,595 | 118,728 | 93,088 |
| 말레이시아 | 40,713 | 39,926 | 98,229 | 81,963 | 176,025 | 146,773 |
| 필리핀 | 9,752 | 15,449 | 39,783 | 37,027 | 50,270 | 57,708 |
| 타이 | 32,473 | 40,687 | 68,962 | 61,923 | 153,100 | 140,795 |
| 베트남 | 2,581 | 2,541 | 14,483 | 15,638 | 48,302 | 60,869 |

주: NIEs(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7 & 2008* (2007 & 2008);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Yearbook 1998* (1998), pp. 126~133.

또한 동아시아 14개 주요국들은 해외직접투자(FDI)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전 세계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은 1992년 2조 1,602억 달러에서 2000년 5조 7,867억 달러, 2007년 15조 2,106억 달러로 대폭 증가되어 왔다. 동아시아 14개 주요국들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도 1992년 4,415억 달러에서 2000년 1조 2,021억 달러, 2007년 2조 8,028억 달러로 급증하였으나, 전 세계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2년 20%, 2000년 21%, 2007년 18%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7년의 하락세는 동아시아에서의 금융위기 사태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07년 18% 중 선진공업 아시아 3개국 3%, 부상하는 아시아 11개국이 15%를 각각 차지

I
II
III
IV
V
VI
VII

하고 있어, 부상하는 아시아 11개국¹이 더 적극적으로 해외로부터 직접 투자를 유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III-3> 참조).

표 III-3 동아시아 주요국의 해외직접투자(FDI) 유치 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국가명 | 1992년 | 2000년 | 2007년 |
|-----------------------------------|-----------|-----------|------------|
| 전 세계 | 2,160,186 | 5,786,700 | 15,210,560 |
| 동아시아(①+②) | 441,497 | 1,202,129 | 2,802,798 |
| ①선진공업 아시아 (Industrial Asia) | 92,377 | 161,461 | 516,438 |
| 일본 | 15,511 | 50,322 | 132,851 |
| 오스트레일리아 | 75,778 | 111,139 | 312,275 |
| 뉴질랜드 | 1,088 | 1,347 | 71,312 |
| ②부상하는아시아 (Emerging Asia) (③+④) | 349,120 | 1,040,668 | 2,286,360 |
| ③신흥공업국(NIEs) | 299,586 | 894,198 | 2,005,721 |
| 한국 | 6,885 | 38,110 | 119,630 |
| 중국 | 36,064 | 193,348 | 327,087 |
| 홍콩 | 206,561 | 455,469 | 1,184,471 |
| 대만 | 11,885 | 19,521 | 48,640 |
| 싱가포르 | 36,207 | 12,633 | 249,667 |
| 인도 | 1,984 | 17,5117 | 76,226 |
| ④ASEAN-5 | 49,534 | 146,470 | 280,639 |
| 인도네시아 | 12,013 | 25,056 | 58,955 |
| 말레이시아 | 16,860 | 52,747 | 76,748 |
| 필리핀 | 5,860 | 18,156 | 18,952 |
| 타이 | 12,302 | 29,915 | 85,749 |
| 베트남 | 2,499 | 20,596 | 40,235 |

주: NIEs(Newly Industrialized Economies).

출처: "Major FDI indicators (WIR 2008)," <<http://stats.unctad.org>>.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경제·통상정책에 관해서,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시장의 개방, 공정무역, 미국 상품에 대한 관세 장벽이나 수출업체에게 부당한 보조금 지급의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압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오바마 행정부가 한국·일본·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공정무역을 강조함으로써 통상마찰이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특히 민주당의 정치적 기반을 고려하여 통상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존의 자유무역이념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유무역 확대가 불가피하다. 보호무역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동아시아국가들은 미국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경제권을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배타적인 동아시아 경제권이 형성되면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도 국내경제가 회복되면 안보전략 차원의 필요성에 의해서도 동아시아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일본과 중국 간의 동아시아지역 리더십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과 경합의 가속화가 예상된다.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국면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 시장, 금융 부분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통제력을 비교적 강하게 유지해온 일본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내구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이후 오게 될 세계적 리더십의 전환 과정에서 일본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급격한 엔화강세는 일본 경제의 강함을 보여주는 징표이다. 그러나 일본은 사실상 국력에 비해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향후 이래의 일관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 지역주의 형성에도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일본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시에 일본은 '신 미야자와 플랜'을 가동시키고 『치앙마이 스와핑 협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긴 했지만 동아시아의 새로운 금융, 통화질서 수립을 주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1997년 한국의 경제위기 시에도 일본은 한국 구제를 향해 기민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의 세계 경제위기에 일본이 공동기금 형성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이다.

IMF는 2009년 4월 중국, 인도, ASEAN-5를 포함하는 개발도상국 아시아(Developing Asia)에서 경제성장률을 2009년 4.8%, 2010년 6.1%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은 7월 초에 수정되어 2009년 5.5%와 2010년 7.0%로 상승 전망되었다. 그리고 10월 이 전망은 2009년 6.2%, 2010년 7.3%로 재수정되었다.³⁶ 이는 거시경제적 부양책을 반영하고 있고 자본흐름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빠른 순환을 보여주고 있는 중국과 인도에서의 전망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세계경제 성장률이 2009년 -1.1%, 2010년 3.1%로 예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아시아 경제는 다른 지역보다 신속하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역동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역내 안정 위협요인의 상존

현재의 동아시아 질서 안정에 가장 위협적인 요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 역내 영토분쟁,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³⁶- IMF, "World Economic Outlook" (검색일: October 2009), p. 2.

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남북관계의 불안정

김대중 대통령은 1998년 2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재임기간 중 ‘평화·화해·협력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에 대북정책의 목표를 둔 포용정책, 소위 햇볕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재임기간 중 남북관계의 심화·발전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보다 한 단계 진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 증진·남북한 공동번영 실현·동북아 공동번영 추구에 목표를 둔 평화번영정책을 추진하였다.³⁷

반면 북한은 만성적인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북한식의 경제 개혁·개방을 추진하였다. 또한 북한은 체제유지와 협상카드로의 활용을 위해 비밀리에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면서도 6자회담에 참여하는 한편, 남한과는 다양한 분야의 대화와 교류협력을 지속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대남정책은 7·1 조치의 부작용, 부시 행정부의 대북 압박정책, 남한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 가능성 등 때문에 2005년 이후 점차 강경노선으로 변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은 10월 1일 시장에서의 식량거래를 금지하고 식량배급제 정상화 조치를 취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강경정책으로 선화하였다. 2006년에는 7월 단·중·장거리 미사일 7기 시험발사와 10월 핵실험을 감행하여 대외적으로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각종 언론매체들은 2007년 12월 남한에서의 대선을 앞두고 보수성향의 대통령 후보들을 비난하면서 보수세력의 재집권 저지 등을 선동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³⁷ 통일부, “대북정책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84호 (1998.8);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2003.3).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대남 강경정책이 예고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비핵·개방·3000 구상’에서 밝힌 것처럼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의 길을 택하면 남북 협력에 새 지평이 열릴 것”³⁸이라고 밝혔다. ‘비핵·개방·3000 구상’은 북한에게 핵 포기 시 얻게 될 분명한 혜택을 제시함으로써 북한의 선택을 유도하는 전략적 방안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1인당 주민소득 3,000달러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북한의 경제발전을 돕기 위해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 향상 등 5대 중점 프로젝트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³⁹ 이러한 배경에서 통일부는 정부 출범과 더불어 남북한 주민의 행복추구와 통일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고, 향후 대북정책 방향을 ‘실용과 생산성’에 기초한 상생·공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남북간 대화를 제의하고 교류협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3월말부터 대남 강경조치와 함께 ‘비핵·개방·3000 구상’ 등에 대한 비난을 지속하였다. 3월 27일 남북경제협력협회사무소 우리 측 당국자를 철수시키고, 3월 29일 모든 남북 당국 간 대화 중단 및 접촉을 거부하였으며, 4월 1일부터는 우리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면서 비난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우리 정부에 대하여 ‘비핵·개방·3000 구상’의 폐기 및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의 무조건 이행을 요구하였다.⁴⁰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해 이명박 정부가 관광사업을 잠정 중단하였다. 북한은 10월부터 남북

38. 청와대, “대통령 취임사,” <<http://www.president.go.kr>>.

39.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이렇습니다.』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25.

40. 『조선중앙통신』, 2008년 4월 1일.

관계 전면 차단 등 대남 위협을 강화하였다. 10월 2일 남북군사 실무 회담에서 대북비난 전단 살포 지속의 경우 각종의 제한 조치를 경고하였고, 11월 12일 판문점 남북 직통전화를 단절하였다. 12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 통행 제한·통제, 경제협력협약사무소 폐쇄, 개성관광·남북열차 운행 중단, 개성공단 상주 체류인원 절반 감축을 단행하였다.

2009년 북한은 군사면에서 더욱 강경한 정책을 추진하여 우리의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였다.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4월 방미 과정에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통일’ 발언과 민간단체들의 대북비난 전단 살포, 급변사태론, 선제공격론 등을 거론하면서 “남북사이의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관련한 모든 합의 사항 등을 무효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의 “서해 해상군사경계선에 관한 조항들을 폐기한다”⁴¹는 성명을 2009년 1월 30일 발표하였다. 3월 9일부터 20일까지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합동군사훈련 기간 중 북한은 동서해 남북 관리구역에서 3차례 육로통행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북한은 4월 5일에는 인공위성 발사를 구실로 장거리 로켓을 태평양 방향으로 발사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야기했으며, 4월 14일 이를 비난하고 제재하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되자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였다. 더구나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⁴²에 의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은 3월 30일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를 억류한데 이어 5월 15일 개성공단의 토지임대료와 토지사용료, 임금,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41. 『조선중앙통신』, 2009년 1월 30일.

42. 외교통상부 보도자료, “유엔 안보리 대북 추가 제재 결의 1874호 채택” (2009. 6.13).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계약의 무효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사가 없었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하다는 억지 주장을 폈다. 6월 11일 개최된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토지임대료 5억 달러와 근로자 월급의 300달러로 인상을 요구하면서 2015년부터 부과기로 되어 있는 토지사용료를 평당 5~10달러로 책정하여 2010년부터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⁴³

북한이 상기와 같이 남한과 국제사회에 강경한 정책들을 추진한 것은 미·북 직접대화 유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요구, 김정일-김정은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한 대내결속의 필요성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의 강경정책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일체의 도발을 중단하고 남북 간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와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화해의 증진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2009년 8월 4일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회동을 계기로 억류했던 미국 여기자 2명을 석방한 이후 미국과 남한에 대한 유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이 북한의 초청으로 8월 10~17일 방북하여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고 북한 측과 5개항⁴⁴에 합의하였다. 북한은 그동안 억류했던 개성공단 직원 유성진씨를 8월 13일 석방하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장 중이던 8월 21~23일 고위 조문단을 파견하였으며

43. 『연합뉴스』, 2009년 6월 12일.

44. 5개항은 ① 금강산관광 재개와 비로봉 관광 시작, ②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육로통행과 북측지역 체류 원상회복, ③ 개성관광 재개와 개성공업지구사업 활성화, ④ 백두산관광 시작, ⑤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추석상봉 실시이다. 「현대-북아·태평화위 공동보도문」 참조.

이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면담하였다. 또한 북한은 2008년 12월 1일 단행했던 경의선 육로통행 및 북한체류 관련 제한조치를 8월 21일 해제하고 8월 29일 나포했던 연안호와 선원들을 석방하였다. 그리고 9월 26일~10월 1일에는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추석 상봉행사가 실시되었다.

북한의 이와 같은 대남정책 변화는 근본적인 전략적 변화가 아니라 국제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고 식량과 비료 등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전술적 변화로 분석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1일 뉴욕에서 ‘코리아 소사이어티’·‘아시아 소사이어티’·‘미국외교협회’가 공동주최한 간담회를 통해 “이제 6자 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추진해야 한다”⁴⁵고 제의하였다.

나. 역내 영토분쟁

동아시아지역에서 영토를 둘러싼 주요 갈등과 분쟁에는 중·대만 대립, 북방영토(남쿠릴) 분쟁, 센카쿠(조어도) 분쟁이 있고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남사군도 분쟁 이 외에 다양한 소규모 영토분쟁들이 있다.

중국과 대만간의 분쟁은 1911년 신해혁명 계승자로서의 중화민국(국민당)과 1949년 창설된 중화인민공화국(공산당)간의 체제 정통성 문제 및 경제, 외교, 문화, 군사를 포괄하는 전분야적 대립이다. 1945년 8월 일본의 항복 이후 1946년 7월 공산당과 국민당 간의 내전에서 국민당이 패배, 대만으로 이전하였다. 장제스(蔣介石)과 장징궈(蔣

⁴⁵ 『연합뉴스』, 2009년 9월 22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經國) 총통 집권 시(1949~1988년)에는 본토 수복 및 통일이 국시이었다. 1991년 이후 대만은 본토 수복의 포기를 선언하였으나, 중국은 대만을 자국의 1개성으로 간주하고 국제적 지위를 불인정하고 있다. 중국과 대만 간에는 경제·문화적 차원의 교류가 증가되어 실질적으로는 분단의 의미가 감소되고 있으나, 대만의 국제지위 강화 노력과 대만 내 독립 움직임 및 중국의 무력사용 가능성⁴⁶은 양국간 긴장완화와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홍콩(1997.7) 및 마카오(1999.12)의 중국 반환으로 인한 중국·대만 통일 압력과 2000년 3월 대만 총통에 독립지향적인 야당후보 첸수이비엔(陳水扁)의 당선 등으로 양안관계가 경색되었다. 그러나 2008년 5월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총통 집권 이후,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관계 때문에 양안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관계는 축소되지 않고 있다.⁴⁷

북방영토(남쿠릴) 분쟁은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잇는 쿠릴열도 20개 도서 중 최남단의 2개섬(에토로후, 쿠나시리)과 홋카이도 북쪽의 2개섬(하보마이, 시코탄)에 대한 일본과 러시아 간의 영유권 분쟁이다. 2차 대전 참전조건으로 소련은 남사할린의 반환과 쿠릴열도의 양도를 보장받았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러시아의 구영토(쿠릴열도와 사할린 남부)와 쿠릴열도와는 별개인 하보마이, 시코탄을 차지하게 되어 영토분쟁이 발생하였다. 일·소 양국은 1956년 10월 『일·소공동선언』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의 경우

46. 1996년 3월 대만 총통선거를 전후하여 대만해협에서 전개된 군사긴장은 중국과 대만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질서를 긴장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7. “Taiwan,” <<http://en.wikipedia.org>>;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등 참조.

소련이 하보마이와 시코탄 2개 섬을 일본에 반환한다는데 합의하였다. 냉전종식 이후 이 문제에 대한 협상은 ‘선 경험, 후 영토문제 해결’을 주장하는 러시아와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는 일본의 입장차이로 교착되었다. 2004년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2개 도서 반환과 2개 도서 평화협정 체결 후 추가 협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고이즈미 총리는 대규모 경험을 내세워 ‘4개 도서 모두 반환 이후 평화조약 체결’을 요구하였다.⁴⁸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중의원과 참의원은 2009년 6~7월 북방영토를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명기한 『북방영토문제 해결 촉진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키고 2010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 정부, 의회, 국민여론은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⁴⁹ 따라서 이와 같은 양국간 이견이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동중국해상 센카쿠(조어도) 등 8개 무인도의 영유권에 대한 일본·중국·대만 간 분쟁이 있다. 이 지역은 1895년 청일전쟁 이후 일본의 영토로 귀속되었다가 1951년 9월 미·일 강화조약 시 일본으로부터 미국으로 이양되었다. 1972년 5월 미·일간 오키나와 반환협정 시 다시 일본으로 반환되어 이후 일본의 관할 하에 있으나, 중국과 대만은 역사적 근거를 중심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 방일시 중국은 조어도 열도 영유권 분쟁을 덮어두고 후대에 맡긴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영유권 문제가 표면화되지 않고 잠재된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1996년 7월 일본의 우익단체가 조어도 열도에 등대를 설치한 이후 중·일 양국은 영토주권 문제,

48. 『연합뉴스』, 2004년 11월 17일.

49. 최태강, “메드베데프시대 러-일관계,”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9.8.27), pp. 20~22 참조.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인근 해역에서의 조업, 통항문제, 군사훈련 등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당사국들은 현상유지를 희망하고 있으나, 일본은 2005년 2월 등대를 관리하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불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⁵⁰

동남아지역에서 중요한 영토분쟁은 남사군도 분쟁이다. 이는 남중국해의 남단에 위치한 73만km²의 해역에 있는 약 100여개의 소도, 사주, 환초, 암초에 대한 중국,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6개국 간의 영유권 분쟁을 말한다. 중국은 10개, 대만 1개, 베트남 24개, 말레이시아 6개, 필리핀은 7개 섬을 점령하고 있다. 이 해역 및 수면 돌출물에 대한 영유권 주장은 1960년대 이 해역에서 석유, 천연가스의 부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 브루나이를 제외한 당사국의 군장비, 병력배치로 영유권 해결이 어려우며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나 공동개발 형태의 해결방안도 모색되고 있다. 2002년 11월 ASEAN·중국 간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 합의는 분쟁 방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⁵¹

이 외에 동남아지역에서는 많은 집단들이 민족분리 독립과 자신들 고유의 민족국가 수립을 주장하고 있다. 일정 부분은 민주화가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고 있다. 필리핀 남부지역에서 이슬람교도들의 민족 독립 주장,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의 자치독립 투쟁, 말레이시아에서 일부 단체의 이슬람국가 건설 목표와 말레이 종족의 독점지배가 없는 정치체제 수립목표 등이 그 예이다.⁵²

⁵⁰ <<http://www.kida.re.kr/indexsub.asp?g=woww>>;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10), pp. 27~28.

⁵¹ <<http://www.kida.re.kr/neowoww/html/>>.

⁵² Katherine Palmer Kaup·민병오·김영신·이상윤·차재권 옮김,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p. 240~241.

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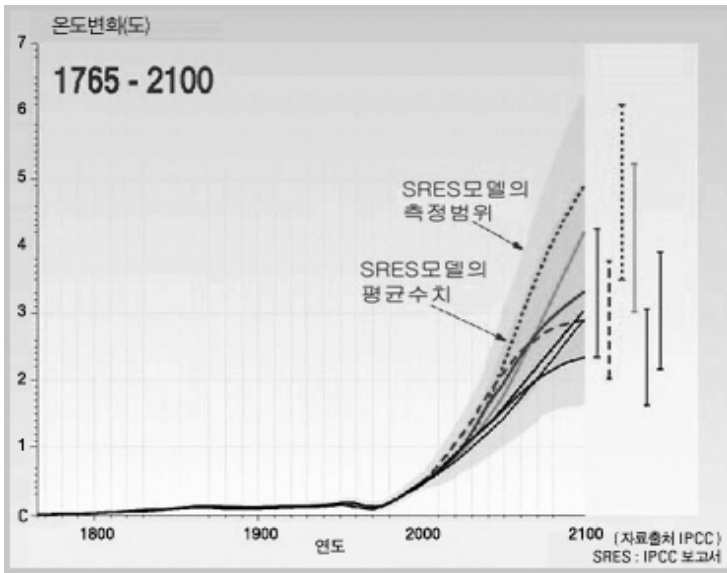
약 1만 2천 년 전부터 지구의 기후는 지금과 비슷한 기후로 안정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이 지구에 정착하여 인간사회가 발전되었다. 이처럼 인간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기후이지만 지금까지는 기후 변화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겨지지 못하였다. 그러나 1900년대 후반부터 온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기후변화가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후변화의 가장 분명하고도 눈에 띄는 것은 온도 상승이다. 지구의 온도는 지구를 감싸고 있는 대기에 의해 유지되고, 대기는 온실효과를 통해 지구의 온도를 유지시킨다. 하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늘어나 대기층이 두꺼워지면서 태양열이 옛날보다 우주로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져서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그림 III-2>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IPCC)가 발표한 배출시나리오를 연구한 특별보고서로써 1795년부터 2100년까지의 온도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5가지의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SERS(Special Report on Emissions Scenarios)의 평균 수치에 따르면 2100년까지 약 5°C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⁵³

이러한 기후변화는 동아시아의 몽고와 중국 등의 초원지대를 급격히 사막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근 국가들에 황사를 발생시켜 시정장애와 호흡기 질환, 알레르기 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지구 환경과 인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는 대만, 필리핀, 인도, 서사모아,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국가들에 대규모 홍수와 해일 및 태풍, 국지성 폭우 등을 야기하여 대규모 재앙을 가져다주고 있다.

⁵³ “녹색연합: 기후변화,” <http://safeclimate.greenkorea.org/climate/climate_01.php>.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그림 III-2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의 온도변화 추이



출처: “녹색연합: 기후변화,” <http://safeclimate.greenkorea.org/climate/climate_01.php>.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의 규제 및 방지를 위해 국제협약인 「기후 변화협약」을 1992년 채택하였고, 이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 200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1997년 채택하였는데 이를 「교토의정서」라고 한다. 의무이행 대상국은 미국, 일본, EU 회원국 등 총 38개국이며, 각국은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분야는 에너지효율 향상, 온실가스의 흡수원 및 저장원 보호, 신·재생에너지 개발·연구 등도 포함된다.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탈퇴하

였다. 한국은 2002년 국회가 이 의정서를 비준하였으나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이행의무는 2008~2012년 사이에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것이다.⁵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9월 22일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만일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지금 당장 대응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에 직면하게 될 것”⁵⁵이라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할 것이라고 밝히고 저개발국에 대한 선진국들의 지원을 촉구했다. 그러나 후 주석은 2020년까지 감축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구체적인 수치나 감축 목표량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을 핵심 국정비전으로 내놓으면서 전 세계의 ‘녹색’ 흐름을 주도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 세계 100여 개국 정상들이 참석하는 이번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첫 번째 국가별 그룹의 의장직을 맡아 회의를 선도 진행했다. 정상들은 지구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장기목표를 설정하는 방안과 기후변화 악영향에 대한 적응방식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2009년 12월에는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을 마련하기 위해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⁵⁶

54. “기후변화포털,” <<http://www.gihoo.or.kr>>;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http://ask.nate.com/qna/3740922>>.

55. 『연합뉴스』, 2009년 9월 22일.

56. “이대통령, 유엔서 ‘그린 리더십’ 과시,” 『연합뉴스』, 2009년 9월 23일; “후진타오 ‘이산화탄소 배출 대폭 감축,’” 『연합뉴스』, 2009년 9월 22일.

IV. 관련국의 동아시아 인식 및 정책기조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1. 미국

가.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성향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은 모두 미국의 세계 지도력 유지와 국익 확보를 대외정책의 근본 원칙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당은 대외 정책 접근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성향을 보이며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외교(Power Politics)를 지향한 반면, 민주당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성향을 보이며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및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고 있다. 2008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오바마(Barack Obama)는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 및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이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켰다고 비판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였다. 그는 집권하면 16개월 이내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하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동아시아정책에 관해서 민주당은 일본·호주·한국·태국·필리핀 등 동맹국과 강력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강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화당 정부와 특별히 대비되는 공약을 발표하지 않았다.⁵⁷ 하지만 경제·통상 정책에 관해서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무역을 강조하였다.

2008년 11월 4일 선거에서 승리한 후 오바마 정부 정권인수팀은 ‘오바마-바이든 플랜’(The Obama-Biden Plan)이라는 명칭으로 대외정책 구상을 발표하였다.⁵⁸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이라크 전쟁의

⁵⁷- 2008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Remewing America’s Promise,” <www.demconvention.org>.

⁵⁸- The Obama-Biden Plan, “Agenda·Foreign policy,” <www.change.gov>.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책임감 있는 종결과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탈레반과 알카에다 세력 격퇴를 대외정책의 첫 번째 과제로 강조하였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이 핵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핵확산금지조약(NPT)을 강화하며, ‘핵무기 없는 세계’를 목표로 핵군축을 실시할 것을 두 번째 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렇지만 2008년 10월 월스트리트 금융위기가 돌발함으로써 오바마 행정부는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세계경제 회복을 대내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떠안게 되었다. 경제·통상정책에 관해서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외국의 시장을 개방하며 공정무역을 관철시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주장하였다.⁵⁹

또한 미국 상품에 대해 비관세 장벽을 쌓거나 수출업체에게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오바마-바이든 플랜은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제조건으로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등을 제시하여 다른 나라들로부터 보호주의 성향을 보인다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자유무역 확대에 보다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행정부가 2009년 1월 20일 공식 출범한 이후 미국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버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케네디(John F. Kennedy) 대통령의 정책 스타일을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바마는 대외정책에서 이상주의적인 희망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⁶⁰

특히 제3세계 국가들의 빈곤퇴치 및 핵확산방지 등과 관련된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이상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⁵⁹ The Obama-Biden Plan, “Agenda·Foreign policy,” <www.change.gov>.

⁶⁰ 버락 오바마·홍수원 옮김,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 2006』 (서울: 랜덤하우스, 2007), pp. 440~452.

이념적 성향보다는 경험을 중시하여 초당적으로 구성된 오바마 외교·안보팀은 대외정책에서 실용주의적인 중도노선을 선호하고 있다. 즉, 바이든(Joe Biden) 부통령, 클린턴(Hillary Rodham Clinton) 국무장관, 게이트(Robert Gates) 국방장관, 존스(James Jones)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저명인사 및 경험이 많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외교·안보팀은 기존 동아시아 안보전략의 기본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현실주의적인 동아시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미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정책기조

(1) 동아시아정책 기조

탈냉전기 미국은 평화와 안정 유지 및 공동번영을 목표로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역내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서 북한의 핵·미사일개발, 중국의 군사력 증강,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 등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은 10만 명의 미군 병력을 전진배치하고 자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역내 세력균형이 유지되는 것이 세계 패권국가로서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지에 기초하고 있다.⁶¹ 이러한 전략적 기조 하에 미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⁶² 첫째, 중·장기적인 세계전략 차원에서 중국·

⁶¹- U.S. Department of Defense, *United States Security Strategy for the East Asia-Pacific Region*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February 1995).

⁶²- Ted Galen Carpenter and Doug Bandow, *The Korean Conundrum: America's Troubled Relations with North and South Korea* (New York: Palgrave, 2004);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 저·유종근 역, 『한국과 이혼하라』 (서울: 창해, 2007), p. 260.

러시아 등 어느 한 국가가 지역 패권세력으로 부상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제한하는 패권세력의 부상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둘째, 현존하는 안보위협 및 불확실성에 적극 대처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의 무력분쟁 및 핵확산 등 심각한 불안정은 미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에도 유해한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세계경제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 경제적 협력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동아시아는 이제 서유럽을 추월해 미국의 국제 상거래 및 투자에 가장 중요한 지역이 되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국가 차원의 이익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지속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전략은 2007년 2월 아미티지(Richard L. Armitage)와 나이(Joseph S. Nye) 등 동아시아 전문가들이 초당적으로 제시한 미·일동맹 발전방향과 새로운 아시아질서 구축에 대한 전략구상의 기본틀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⁶³

이 보고서는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최선의 아시아 지역질서구축 노력은 지역 국가들의 참여와 함께 미국의 지속적인 힘·개입·리더십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소위 ‘2차 아미티지 보고서’로 불리는 이 논문은 미·일동맹이 아태지역 안정과 번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미·일 양국 정부에 대해서 군사·안보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호주·인도를 포함한 집단안보동맹을 구축하여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한편, 중국이 책임 있는 이해 당사자

⁶³-Richard L. Armitage (et. al.), “The U.S.-Japan Alliance: Getting Asia Right through 2020” (February 16, 2007), <csis.org/files/media/csis/pubs/070216_asia2020.pdf.>.

로 행동할 수 있도록 미래 정책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중도·실용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안보팀도 이러한 동아시아 전략의 기본방향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군사·안보전략보다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적 협력 강화에 더 큰 비중을 두고 동아시아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대외정책에 관해서 ‘스마트 파워 정책’⁶⁴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시아국가들과 외교적 협력을 긴밀히 증진시키는 한편,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유무역 확대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2) 미국과 동아시아국가 관계 개관

클린턴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첫 해외방문지역을 동아시아로 결정하고, 일본·인도네시아·한국·중국 등을 순방하며 이들 국가들과의 협력을 증진시켰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17일 일본을 맨 처음 방문하여 미국이 일본의 안전보장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표명하였다.⁶⁵

또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일본인 납치문제를 의제로 다룰 것임을 약속하여 미국이 대북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⁶⁴- 본문 p. 34 내용 및 Richard L. Armitage and Joseph S. Nye, JR. (et. al.),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참조.

⁶⁵-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Hillary Rodham Clinton, The U.S. and Japan Helping to Chart New Course” (February 17, 200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일본의 의사를 존중할 것임을 보여 주었다.⁶⁶ 오바마 대통령도 취임 후 첫 번째 정상회담의 상대로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를 선택하여 2월 24일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미·일동맹을 중시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그러나 8월 30일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자 지금까지 강력하게 결속되어온 미·일 안보동맹이 이완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하며 일본 내부의 정치적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내각이 출범한 이후 미국은 미·일동맹의 기본 틀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으며, 양국관계의 쟁점에 대해서는 협의를 통해 조율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22일 북경을 방문하여 중국과 세계 금융위기, 기후변화, 국제안보문제 등에서 미·중 협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고, 인권문제가 양국관계 개선에 장애요인이 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다.⁶⁷ 오바마 대통령은 4월 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기존의 고위급 대화와 전략적 경제대화를 통합하여 새로운 협의기구를 만들고 전략대화의 수준을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2009년 7월 28~2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개최되었다.⁶⁸

⁶⁶ 부시 행정부가 일본인 납치문제를 무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하자 일본인들은 미·일동맹의 실효성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바 있다. Brian P. Klein, “Asia’s Challenges For Ob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2008), p 25.

⁶⁷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February 23, 2009.

⁶⁸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A New Strategic and Economic Dialogue with China” (July 27, 2009); 김홍규, “미·중 전략·경제 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 분석, 2009.8.21).

클린턴 국무장관과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이 논의한 전략협상에서는 주로 북핵문제,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을 포함한 국제 및 지역 이슈가 논의되었다. 가이트너(Timothy F. Geithner) 재무장관과 왕치산(王岐山) 부총리가 주재한 경제협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방안, 균형성장 확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이슈가 논의되었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세계의 도전적인 난제들 함께 풀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를 경계하고 있으며, 공정무역을 강조함으로써 무역마찰을 겪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재설정하여 양국 공통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7월 6일 메드베데프(Dmitri Medvedev) 대통령과 미·러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 후속 협정을 위한 초안의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⁶⁹ 양국 정상은 또한 아프가니스탄 안정화와 재건을 위해 러시아가 자국 영토를 이용한 미국의 무기, 군사 장비, 병력 이동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군사협력 협정에 서명하였다. 그 후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폴란드에 요격미사일, 체코에 첨단레이더망 기지 설치 계획 등을 철회하고 양국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 핵개발을 추가적으로 제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탈냉전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미·일동맹을 요체로 설정하여 강화하는 한편, 다른 아태국가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맹 네트워크를

⁶⁹- 새 협정이 발효되면 미국과 러시아는 7년 안에 핵탄두 수를 1,500~1,675개로 감축하게 된다.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Medvedev of Russia, The Kremlin, Moscow, Russia" (July 6, 200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미국은 2007년 3월 ‘일본·호주 안보협력 공동선언’을 계기로 미·일·호 3국 안보협력을 강화하였다. 또한 인도를 영향권에 포섭하기 위한 외교를 전개하였다. 부시 대통령은 2006년 3월 인도를 방문하여 싱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사이의 경제협력과 군사협력을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⁷⁰ 오바마 행정부도 인도와의 경제·군사협력을 발전시키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009년 7월 20일 인도를 방문하여 외무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인도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 촉진과 미국 기업의 인도 내 원전 건설을 골자로 한 양국간 협력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⁷¹

미국은 전통적으로 태국·필리핀과 동맹국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는 우방국으로서 긴밀한 유대를 지속하고 있다.⁷² 베트남 과도 과거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관계를 개선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보다 적극적으로 동남아시아국가들과도 관계를 증진시키고 있다.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18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미국과 인도 양국이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⁷³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태국 방콕을 방문한 클린턴 국무장관은 7월 22일 ASEAN 10개 회원국 외무장관들을 만나 『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 서명하였다. 클린턴 장관은 협정을 체결하는 가운데 미국은 앞으로 ASEAN 국가들과 적극 협력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들

⁷⁰ The White House, “U.S.-India Joint Statement” (March 2, 2006).

⁷¹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Remarks With Indian Minister of External Affairs S. M. Krishna” (July 20, 2009).

⁷² Katherine Palmer Kaup, 민병오 외 번역,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08), pp. 246~247.

⁷³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Developing a Comprehensive Partnership With Indonesia” (February 18, 2009).

과 맞설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⁷⁴ 그러나 미국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있으며 북한과 군사협력을 추구하고 있는 미얀마 정부와는 외교적 갈등을 겪고 있다.

2. 일본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내 주도권 모색을 우려하고 있고 북핵·대만·중국의 장래 문제를 역내 불안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한 이러한 인식하에 일본은 외교, 안보적으로는 대미관계를 기축으로 하는 미·일동맹 중심의 군사전략을 추구하는 한편, 통상·금융·투자면에서는 동북아라는 협의의 동아시아보다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하는 광의의 동아시아지역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이것이 양자택일적이거나 모순적이지 않다는 것이 일본 국가전략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은 미·일 군사동맹의 강화와 경제적 지역통합을 거의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동맹의 기본 틀을 흔들려는 어떠한 움직임에 대해서는 극히 경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즉, 일본은 안보에 관한 한,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메커니즘 구축에 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 핵문제, 대만 문제, 중국의 장래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은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안보의 기본이라는

⁷⁴ 『남아시아 우호협력조약』에는 양측 간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군사적인 수단에 의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이 담겨 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Remarks From the Signing Ceremony of the 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in Southeast Asia” (July 22, 200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생각이 뿌리 깊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속속 취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2001년 9·11 테러 발생 이후 미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테러 전쟁의 수행에도 일본은 매우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변환 및 동맹변환에도 일본은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1996년의 미·일 신가이드라인과 미·일동맹의 재정비, 2004년 새롭게 책정된 방위대강, MD계획에의 참가 등은 일본의 대미동맹 강화노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 일본은 미·일 안보체제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과의 군사적 일체화를 꾀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 미·일 안보체제의 적용범위를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지구적 범위로 확장하는 이른바 지구적 파트너십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전략을 고수한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2009년 9월 16일 출범하여 ‘21세기 국제지도국’을 지향하는 하토야마 민주당 정부의 대외정책도 미·일 양국간 관계 재조정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미·일동맹을 기축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⁷⁵

한편,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추진전략은 단적으로 말해,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⁷⁶ 일본

75. 배정호, “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2009.9.18).

76.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전략이 중국 정책으로서 고려되고 있다는 시각을 보이고 있는 국내의 선행 연구로는 김기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1(4); 이원덕,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현대일본학회, 2005); 손 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중국정책으로서 일본의 지역주의,”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견제, 중국과의 지역 리더십 경쟁이라는 요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이래 일본 외교가 당면한 핵심과제는 엄청난 규모와 속도로 강대국화하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 나타난 동아시아 지역주의 외교는 기본적으로는 2000년 초부터 진행된 중국의 대 동남아시아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대한 대응의 차원에서 출현한 것이다. 중국의 대 ASEAN 공세는 FTA 조기 실현의 전격 제안과 그를 구체화하기 위한 선행적 조치 실현으로 명확하게 나타났다. 중국은 2003년 역내 국가의 민간 싱크탱크의 네트워크(NEAT) 구축을 주도적으로 나서 는 한편, 2004년에는 말레이시아와 더불어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개최 성사에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경제적, 전략적 핵심 배후지역으로 간주하고 중국의 역내 주도권 모색을 견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일본은 1997년 아시아 통화위기 이전에는 미국을 제외한 형태의 어떠한 아시아 지역주의에도 반대(탈아 입구론적 전통)하다가 통화위기 이후 아시아 지역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였다. APEC의 구심력 저하에 따라 ‘ASEAN +한·중·일’ 구도를 중심으로 지역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2년 동아시아 공동체 선언을 하였다. 둘째, 일본은 동남아 등에 대해 800억 달러의 지원을 한다는 ‘신 미야자와 구상’을 기초로 동아시아 금융협력 지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다. 2001년에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

신화와 현실』(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8)이 대표적이며, 외국의 연구자로서는 Kenneth Pyle, *Japan Rising: The Emergence of Japanese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07)과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日本經濟新聞社, 2005)가 이런 시각에 동의하고 있다.

스와프 협정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 주도권을 발휘하였고,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구상을 통해 엔화의 국제화를 추구하고 있다. 셋째, 일본은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을 확립하고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1998년 이후 FTA 추진에 적극성을 보여 멕시코, 칠레, 싱가포르 등의 허브국가와 전략적으로 FTA 체결을 선결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FTA 체결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자유무역권과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상기와 같은 일본의 정책으로 동남아시아지역에 대한 일본과 중국 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과열되고 있어 일본은 한국, 동남아와의 FTA 추진을 선결하여 중국에 대항하려 하고 있다. 급기야 일본은 2004년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을 국가전략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⁷⁷

일본 외무성은 2006년 11월 일본 정부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과 관련하여 취하고 있는 기본입장에 관해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입장은 2004년부터 일본이 공식적으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언급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주창하고 있는 핵심적 이념이자 추구하고 있는 기본원칙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열린 지역주의 원칙의 추구이다. 일본은 동아시아 공동체에는 ASEAN, 한·중·일과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대영역이 포함되어야 하며, 더 나아가 미국 등이 각종 기능적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⁷⁸ 일본은 2002년

77.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일본의 공식적 입장이 수립된 것 또한 대체로 그 무렵인데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2004년 6월 APT 외상회의에 제출된 『ISSUE PAPER』와 2005년 8월 동아시아 공동체 평의회가 발표한 정책보고서 『東アジア共同体構想の現状、背景と日本の戦略構想』, 그리고 2006년 11월에 외무성이 발표한 『東アジア共同体構築に對する日本の考え方』에 잘 정리되어 있다.

78. 일본은 아시아 지역주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로 한정짓기보다는 광의의 동아시아 또는 아태지역으로 확대 정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것은 일본적 발상의

고이즈미 수상의 싱가포르 연설에서 동아시아 커뮤니티에 호주와 뉴질랜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2004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기존의 ASEAN+3 (한·중·일) 멤버와 더불어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2005년부터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EAS에는 중국 등의 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본의 입장이 관철되어 ASEAN과 한·중·일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정식 멤버로 들어왔다. 일본은 명분상 동아시아 공동체가 개방성, 투명성, 포괄성의 원칙하에 폭넓은 파트너의 참여와 그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⁷⁹

둘째,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에는 무엇보다 기능적 접근이 중요하다. 즉, 일본의 주장에 따르면,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발전 수준, 문화, 민족, 종교, 정치이념, 안보정책 등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 EU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합을 지향하는 포괄적인 정치 제도나 틀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동아시아지역에서는 금융, 통상, 환경, 인간안보 등의 비전통적인 안보 분야에서 기능적인 협력을 추구함으로써 점차 지역통합의 토대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단위로 하는 국익의 경쟁이 치열하게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동남아시아지역은 일본이 추구하는 동아시아지역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래 동남아시아를 자신의 경제적, 전략적 배후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따라서 일본이 한반도, 중국, 일본 3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소지역주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지역형성을 사고하는 소수의 그룹이 존재한다. 말하자면 와다 하루키, 모리시마 미치오, 강상중 교수로 대표되는 지식인이 그들이다.

⁷⁹ 지리적으로 동아시아지역으로 분류되기 어려운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굳이 EAS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들 국가들이 일본과 심화된 경제적 상호의존 및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 및 가치를 공유하고 있어서 역내 국가 간 역학관계 속에서 일본의 입지를 유리하게 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전개되어 있고 민족주의적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작동되고 있는 역내의 정치상황을 볼 때 이러한 일본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일견 현실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에는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어야 하며 글로벌 룰의 준수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단순한 지역협력을 넘어서 복수의 국가들로 구성되는 공동체가 수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정체성이 요구되며 필연적으로 공동체가 공유할 이념과 가치의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본은 자유와 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법치주의, 시장경제, WTO 등의 글로벌 룰 등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가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전 일본이 내세운 흥아론(興亞論), 대동아 공영권(大東亞共榮圈) 등에서는 아시아적인 전통가치가 중시된 것과는 달리 현재의 동아시아 공동체 담론에서는 대단히 서구적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이처럼 서구적 자유 민주주의의 가치규범을 중시하는 맥락에서 일본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참여를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3. 중국

가. 후진타오 정부의 대외전략 기초: 조화세계

동아시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및 정책기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의 대외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2050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의 실현을 장기목표로, 2020년까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의 실현을 중기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30여 년

간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성장에 주력해왔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대내외의 안정적인 환경 조성을 중시해왔다. 2002년 등장한 후진타오 지도부 역시 이러한 국가목표를 계승하고 있으며, 이는 대외 전략에도 투영되었다.

즉, 후진타오 정부의 대외전략 기조는 2020년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건설을 위해 경제발전 및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확립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신장된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은 ‘평화발전(和平發展)’을 내세우고, 세계 각국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방위 외교를 추진하면서 다자주의 전략을 구사해 왔다.⁸⁰ 이를 통해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주변국의 경계를 완화함과 동시에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는 주변국과 경제교류협력을 강화하여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신뢰형성을 통한 안정된 안보환경을 구축하려는 선린외교와 병행, 전개되었다.

이러한 책임대국외교, 다자외교, 경제외교, 선린외교는 후진타오 정부가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 ‘조화세계론’으로 계승, 발전되었다.⁸¹ 조화세계론은 개혁·개방의 각종 부작용을 함께 치유하면서 안정적인 발전을 이룩하려는 후진타오 체제의 새로운 통치이념인 ‘사회주의조화사회론’의 대외관으로써, 항구적 평화와 공동번영의

⁸⁰- 16대의 정치보고에서 장쩌민은 “적극적으로 다자외교 활동에 참여하여 UN 및 기타 국제기구 혹은 지역성 기구에서 역할을 발휘하고 개발도상국가가 자신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北京: 人民出版社, 2002), p. 47.

⁸¹- 2005년 4월 아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와 9월 유엔 60주년 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이후, 당·정 지도부가 조화세계 건설을 점차 강조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3월 10기 전인대 5차회의의 정부공작보고에서도 재차 강조됨으로써 새로운 외교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조화로운 세계의 건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⁸² 중국은 국내 차원에서 ‘조화사회(和諧社會)’의 건설을, 주변국에 대해서 ‘조화로운 아시아(和諧亞洲)’의 건설을, 전 세계 차원에서 ‘조화세계(和諧世界)’의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화세계론은 2008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세계 금융위기 이후 탄력을 받고 있다. 물론 중국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는 일정수준 약화될 것이지만 현재의 ‘일초다강(一超多強)’ 구도를 바꾸기에는 부족하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 여타 강대국과의 국력 차이가 좁혀질 것이며, 국제사회에서 신흥공업국의 부상과 역할을 상승, 촉진시킬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³

또한 금융위기 속에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도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⁸⁴ 이러한 인식은 중국이 미국 중심의 현행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려고보다는 기존의 안정적 질서 하에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리는 한편,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이해상관자’(Responsible Stakeholder)의 역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전략적 기회로 파악하고서 자국의 역내 영향력 및 발언권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할 것이다.

82.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北京: 人民出版社, 2007), p. 45.

83. 邵峰, “金融危機對國際關係的影響及中國的應對,” 『世界經濟與政治』, 第12期(2008), pp. 23~26.

84. 袁鵬, “奧巴馬政府對華政策走向與中美關係前景,” 『中國外交』, 第6期(2009), pp. 38~39.

나. 동아시아 인식 및 정책기조

이러한 대외전략 기조는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 기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지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의 주변국이면서 동시에 미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과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특수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대국외교와 선린외교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지역이다. 또한 중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중국위협론을 완화시키면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요한 지역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 지역을 대국외교, 선린외교, 경제외교, 개도국외교 등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전략지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 지역은 다른 주변지역인 중앙아시아나 남아시아보다도 중국의 핵심 지역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중심적 지위를 유지했던 곳으로서, 중국의 정치, 경제, 안보이익이 집중된 기회와 도전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동아시아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이 군사대국, 경제대국, 발달한 국가, 개발도상국, 신흥공업국, 자본주의국, 사회주의국, 단일민족국, 다민족국 등으로 구성된 복잡한 특징으로 인해 지역협력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에다 미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냉전적 유산과 이에 따른 전통안보위협과 탈냉전적 특징인 비전통 안보위협도 공존하고 있다고 인식한다.⁸⁵

즉, 북핵문제를 필두로 미국의 대중 경제와 동맹관계에 따른 군비 증강은 이 지역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와 영토·영해

⁸⁵ 楊毅, 『中國國家安全戰略构想』(北京: 時事出版社, 2008), pp. 193~196.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문제, 질병·테러·분리주의·에너지·환경·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강대국의 지역현안에 대한 입장과 목표가 달라 복잡하고 불안정한 정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강대국의 전략적 목표가 지역안정에 있기 때문에 현안해결에 유리하며, 전통안보문제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상호신뢰가 강화되고 있고, 강대국들이 동아시아 각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에 따라 동아시아지역이 세계경제에서 점차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도 내리고 있다.⁸⁶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 정세인식과 대외전략을 감안하면, 동아시아 정책 목표는 역내 불안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주력할 수 있는 평화로운 환경을 창출하는 한편, 경제협력을 통해 자국에 유리한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2020년까지 소강사회의 달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중국의 입장에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 환경의 안정적 관리는 핵심적인 외교과제가 된다. 따라서 선린외교의 일환으로 중국은 ASEAN과의 경제협력 강화와 경제교류협력을 통한 대만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남북한과의 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키려고 한다. 동아시아지역의 안정 없이는 중국이 의도하는 조화로운 아시아 건설을 이룰 수 없으며, 동북아시아 및 세계적 차원의 전방위 외교 추진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북핵 개발 및 보유를 반대하는 비핵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다른 한편, 대국외교의 측면에서 중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 강화를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경쟁국과의 갈등·협력

86. 陳顯泗 主編, 『和解東亞』(北京: 時事出版社, 2008), pp. 385~391.

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지역현안 해결과정에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중국의 경제발전이나 자국의 영향력 확보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국가와의 동반자 외교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6자회담과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양날개로 활용해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요컨대 중국은 동아시아 각국과의 개선을 통해 광범위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다양한 이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10+3, SCO, 6자회담, 한·중·일 협력 등 지역협력 외교를 통해 다자간 경제안보협력을 촉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중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질서를 구축하려는 비전도 갖고 있다.⁸⁷

4. 러시아

‘강한 러시아’ 건설을 주창하여 2000년 3월 대통령에 공식 선출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강력한 리더십에 의해 정치를 안정시키고 경제를 회복시켜 2004년 3월 재선되었다. 그는 5월 7일 집권 2기이며 제4대 러시아 대통령으로 취임하여 정치안정과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⁸⁸ 2008년 5월 7일 취임한

⁸⁷- 張蘊崙, 『中國與周邊國家: 构建新型伙伴關係』(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pp. 4~11.

⁸⁸-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emarks by Russian President Vladimir Putin at Presidential Inauguration Ceremony The Kremlin, Moscow” (May 7, 2004), p. 2, <<http://www.In.mid.ru>>.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튿날 푸틴 전 대통령을 총리로 임명하여 러시아 정치는 현재 쌍두체제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권은 푸틴 총리가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제정세의 긍정적 변화와 부정적 추세들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을 기초로 푸틴 전 대통령은 실용주의, 예측성, 국제법의 우위라는 세 가지의 대외정책 원칙을 가지고 전방위 외교정책을 수행하였고⁸⁹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이를 계승하고 있다.

러시아 동부지역은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광대한 아태지역⁹⁰ 공간의 일부이기 때문에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대내적 발전을 위해 아태지역의 대외적 자원들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태지역은 러시아의 특별한 이해지역이다. 러시아는 세계경제에서 아태지역의 역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계적 금융 및 경제 위기에서 조차도 대부분 경제들의 역동적인 성장이 관찰되고 통합과정이 강화되고 있어 미래가 이 지역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⁹¹

이러한 인식하에 러시아는 아태정책의 기초를 역내 국가들과의 관

⁸⁹ 러시아는 세계화로 인한 국제관계의 다극화 추세, 세계정치에서 에너지와 자원의 중요성으로 인한 러시아의 국제적 입지강화, 냉전종식으로 상실되었던 균형과 경쟁 환경의 점진적 복구 등을 긍정적 변화로 평가한다. 반면 국제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분쟁지역의 증가와 구소련공화국으로의 확산, 군비경쟁, 핵무기의 우주 배치, 소용량 핵물질의 제조와 확산, 국제적 논의사안(Agenda)들에서 군축과 군비통제 문제의 소멸, 미국의 단극체제 구축과 타국에 대한 미국식 정치제도와 발전모델 강요 등을 부정적 추세로 평가한다. “President of Russia: Annual Address to the Federal Assembly,” <<http://www.president.kremlin.ru>> (May 10, 2006), pp. 7~8 및 pp. 10~11;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May 10, 2007), p. 2.

⁹⁰ 러시아에서는 동아시아보다는 아태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본문에서도 아태지역으로 사용하기로 한다.

⁹¹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peech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at the ‘Russia’s East and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ference” (Moscow, July 3, 2009).

계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 통합체와 다자간 포럼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지역과 아태지역 간의 경제적 연결을 강화시키려는 조치들은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지연되며 비균형적인 방법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 결과 아태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적인 외교정책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외국투자나 무역증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최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한 매우 우호적인 조건들이 조성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즉 중국과의 관계정상화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덕택에 근본적으로 새로운 상황이 러시아의 동부국경을 따라 나타나고 있어 국경지역과 러시아 동부의 경제발전을 위한 광범한 기회들을 열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우호국이며 천연 자원이 풍부한 몽골이 국가의 부를 개발하고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러시아 경제,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한국과 점차 강화되는 동반자 관계로 큰 잠재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ASEAN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도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⁹² 특히 러시아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 풍부한 원유, 가스, 석탄, 기타 원광석, 목재, 전기 등 에너지와 천연자원들을 경제는 급성장하고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아태국가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외교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러시아는 우랄산맥 이동 지역의 발전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⁹²-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peech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at the 'Russia's East and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ference," p. 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갖고 2025년까지 극동, 브라티아 공화국, 트랜스바이칼 영토 및 이르쿠츠크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행 중이다. 따라서 고위인사들이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메드베테프 대통령과 푸틴 총리가 수차례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을 실무 방문했고, 2009년 5월 21일 중국 및 몽고와 국경을 넘는 협력에 관한 회의가 대통령 주재 하에 하바로프스크에서 개최되었다. 7월 3일 모스크바에서는 연방과 지역 당국들, 기업, 전문가 집단들의 대표 그리고 아태지역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대사들이 참여하여 러시아의 동부지역을 어떻게 아태 지역 통합과정에 끌어들이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책임자인 수발로프(Igor Shuvalov) 제1부총리가 정기적으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아태 경제권으로의 통합을 위해서는 대내적으로는 에너지·운송·통신을 포함한 현대적인 인프라 구축, 외국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관세와 조세정책의 조정, 확고한 법 집행과 부패의 척결, 연방중앙과 지방간의 통일된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⁹³

한편 대외적으로 첫째,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안보를 확보하고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심도 있고 잘 균형된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려 하고 있다.⁹⁴ 중국과는 2001년 체결된 「선린우호협력조약」의 이행

⁹³-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peech by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at the ‘Russia’s East and Integration in the Asia-Pacific Regi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Conference,” p. 3.

⁹⁴-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RUSSIA IN ASIA IN 2004: SOME RESULTS” (January 13, 2005);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May 10, 2007), pp. 35~39, <<http://www.In.mid.ru>>.

을 위한 2009~2012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미국에 대해서는 WMD 확산과 테러 방지에서 협력을 하면서 오바마 행정부와 건설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러시아의 민주화·이라크 전쟁·NATO 확대·이란 및 그루지야 등의 문제에서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는 북방4도와 평화조약 문제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여 새로운 차원의 대일 관계를 확립하고자 한다. 한반도에 대해서는 안정과 평화 유지, 남북한과 전면적 협력관계 강화, 비핵화, 남·북·러 3각 경험 추진 등을 중시하고 있다. 또한 ASEAN에 대해서는 10개 회원국들과의 약한 경험관계를 고려하여 2008년 7월 채택된 ‘2015년까지 러시아-ASEAN 간 포괄적 행동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대화 동반자 관계’(Dialogue Partnership)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는 ASEAN과 협력의 우선순위를 테러 및 초국가적 범죄와의 전쟁, 에너지·에너지 안보·환경보호·과학과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에 두고 있다.⁹⁵

둘째, 중국과 인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세계는 자원전쟁에 돌입하였고,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는 이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원유 파이프라인 건설과 관련, 러시아 정부는 2006년 2월 말 이르쿠츠크 지역 타이셰트(Taishet) → 아무르 지역 스코보로디노(Skovorodino) → 태평양 페레보즈나야(Perevoznaya) 만까지 총 4,100km의 동시베리아-태평양 원유 파이프라인(일본 라인)을 최종 승인하였다.⁹⁶

⁹⁵-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sia Pacific Dimens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Unity of Bilateral Relations and Multilateral Diplomacy” (December 28, 2008).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우선 1단계로 타이슈트에서 스코보로디노 지역까지만 건설하고 나머지 구간은 2단계로 추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이 노선을 자국과 연결하려는 중·일의 경쟁을 활용한 바 있다. 제1단계 구간은 2009년 5월 완료되었고 중국 지선은 2010년, 태평양 노선은 2014년 완료될 계획이다(<그림 IV-1> 참조).

●그림 IV-1 러시아의 원유파이프라인 계획



출처: 『한국가스신문』 (2005.3.28).

셋째, 러시아 정부는 아태지역이 세계경제의 엔진으로서 그리고 세계발전의 중요한 추동력 중 하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러한 중요성은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러시아는 아태지역의 유일한 통합체인 아태경제협력체(APEC) 뿐만 아니라, ASEAN, ASEAN 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 협력 및 신뢰구축조치 회의

⁹⁶ “The Sino-Russian romance,” *A Times*, March 21, 2006.

(CICA), 아시아협력대화(ACD),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태경제 사회이사회(ESCAP) 등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⁹⁷

5. ASEAN

동남아국가연합(ASEAN)은 1967년 8월 8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5개국 간에 태국 방콕에서 결성되었다. 창립 회원국들에 의해 승인된 선언은 ASEAN의 2가지 목적을 상술하고 있다. 첫째, 번영과 평화를 구가하는 동남아 국가 공동체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평등과 동반자 관계의 정신에 입각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역내의 경제성장, 사회진보, 문화발전을 촉진하는 것, 둘째, 역내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정의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유연현장의 원칙들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것이다.⁹⁸

하나의 제도로서 ASEAN은 협력과 통합을 통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대표할 수 있는 것으로 제안되었다. ASEAN은 다음과 같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했다. 첫째, 1992년 ASEAN 자유무역지대(AFTA)가 설립되었다. 이는 무역에 있어서 지역주의로 급속히 기울어지면서 변화해 가고 있는 1980년대의 국제 정치·경제와 ASEAN 지역에서의 기업의 영향력 증대 및 지역적인 무역자유화를 향한 일반적 경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ASEAN은 하나의 제도로서의 안정성과 경제성장의 분위기를 고무시키려는 회원국들의 책무수행을 통해 지역의 실질적 경제발전을

⁹⁷- "A Survey of Russian Federation Foreign Policy," pp. 37~38.

⁹⁸- ASEAN, "Overview," <<http://www.aseansec.org>>.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촉진했다. 해외직접투자(FDI)의 세계적 흐름에서 ASEAN의 비중은 1980년 1% 이하에서 1993년 9%로 늘었다. 회원국 중 4국(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이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에 있어 중요한 촉매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고도 성장국가들에서 제외된 인도차이나의 작은 동남아국가들을 흡수하였다. 브루나이가 1984년, 베트남이 1995년, 라오스가 1997년, 미얀마가 1997년, 캄보디아가 1999년 각각 회원국이 되었다. 넷째, AFTA에 담겨있는 무역 창출효과는 ASEAN의 10개 회원국들을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새로운 시장을 생겨나게 할 것이다. 예컨대 베트남과 미얀마는 자본집약적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값싼 노동력과 천연자원의 소중한 원천이다. 1999년 9월 2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3차 AFTA 평의회 결정은 5개 ASEAN 최초 회원국들에게는 2015년까지, 나머지 회원국들에게는 2018년까지 진정한 ASEAN 광역자유 무역지대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상품에 붙어 있는 수입세를 폐지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⁹⁹

한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조기 출범 문제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이견표출 등에서 보듯 ASEAN은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종종 내부적 갈등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별 국가 간 입장 차이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 득실 또는 역내 리더십 경쟁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ASEAN 내부의 일상적 행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3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⁹⁹- Katherine Palmer Kaup·민병오 외 번역,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pp. 182~185.

하지만,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에 의해 EAS의 위상과 장래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¹⁰⁰

그럼에도 한 가지 분명한 점은 ASEAN 국가들은 ASEAN+3 정상 회의와 마찬가지로 EAS도 반드시 ASEAN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내부적 이견도 없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동남아 중·소 국가 연합체인 ASEAN은 항상 중국, 일본과 같은 역내 강대국들에 의해 지역협력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을 우려,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지역협력과 관련하여 한·중·일 동북아 3국간 긴밀한 협의체제가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동아시아 양대 강국인 중국-일본 간 첨예한 전략적 경쟁과 대립으로 어느 일방도 독자적으로 역내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ASEAN은 자연스럽게 ASEAN+3과 EAS를 동시에 주도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다.

6. 기타국

가. 호주

호주는 약 769만km²의 세계 6위에 해당하는 국토면적을 갖고 있으나 인구는 2008년 현재 약 2,060만 명에 불과하고 1인당 GDP가 3만 7,299달러에 달하는 선진공업국이다. 동아시아¹⁰¹에는 세계에서

¹⁰⁰- ASEAN 국가들의 ASEAN+3 및 EAS에 대한 입장에 대해 Mohamed Jawhar Hassan, "Strengthening Cooperation in East Asia: Toward an East Asia Community," paper presented to the 1st ROK-ASEAN Cooperation Dialogue (CSIS, Jakarta, November 11~12, 2006).

¹⁰¹- 원문에서는 아시아로 언급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동아시아이기 때문에 본문에서는 동아시아로 표기한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인구가 가장 많은 2개국과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 및 세계 3대 경제국 중 2개국, 세계 5대 군사대국 중 3개국이 있는 지역으로 호주는 이들과의 무역과 투자가 자국의 번영을 보장해왔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세계의 경제적, 전략적, 정치적 영향력이 아태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21세기에 아태지역이 신속히 세계의 무게중심으로 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호주는 몇 년 동안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타지역을 능가해왔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향력의 변화가 단지 경제나 인구면에서가 아니라 군사 현대화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치적, 전략적 중요성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호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아태지역 안정을 보장해온 미국은 자신의 권한 및 동맹과 안보관계 네트워크를 통해 가까운 장래 동안은 역내에서 유일하게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전략적 행위자로서 계속 남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중국의 부상이 동아시아의 증가되고 있는 영향력에 결정적 요인이며 인도의 부상, ASEAN의 경제력, 인도네시아의 큰 잠재력, 일본과 한국의 지속적인 경제력을 인정하고 있다.¹⁰²

이와 같은 인식하에 자국을 ‘창조적인 중강국’(Creative Middle Power)으로 규정하고 있는 호주 정부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다자과정과 결과에 생산적으로 관여하는 것과 함께 아태지역과 협력하는 것을 외교정책 3대 기조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¹⁰³ 호주는

¹⁰²-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ustralia and the Asia-Pacific Century” (2009.8.14), <<http://www.foreignminister.gov.au>>.

¹⁰³-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Annual Report 2007-2008,” p. 1, <http://www.dfat.gov.au/dept/annual-reports/07_08/overviews/1/html>.

미국이 동아시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고 더 큰 개입을 반영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을 환영하고 있다. 2008년 제1위 무역상대국이었던 일본에 대해서 호주는 포괄적 FTA 체결을 통한 경제관계 증진, 고위인사 관계 확대, 미·일·호주의 3자 안보대화(Trilateral Security Dialogue) 구축을 희망하고 있다. 2008년 제2위 무역상대국이었던 중국에 대해 호주는 경제통합 촉진을 위한 포괄적이고 상호이익이 되는 FTA를 체결하려 하고 있고, 양국 외무장관은 2008년과 2009년 ‘중·호주 전략대화’를 가졌다. 한국과는 포괄적 FTA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고 인적 교류가 증대하고 있으며 수교 50주년을 맞는 2011년은 양국간 ‘우호의 해’로 기념될 것이다. 호주는 북한을 역내의 중요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매우 우려하면서 이를 세계적인 비확산 노력에 대한 중요한 도전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대북 유엔제재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¹⁰⁴를 가하고 있는 호주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을 지지하고 있다. 호주에게 남아시아의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고, 경제력과 전략적 중요성 및 유구한 역사 등으로 인한 세계적 영향력 가능성 때문에 인도와의 동반자 관계 및 FTA 체결도 중요하다. 특히 ‘호주·인도 전략연구기금’(Australia-India Strategic Research Fund)은 기후 변화, 수자원 보존, IT 보안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금이다. 그리고 호주는 일본과 인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하고 있다.

¹⁰⁴. 호주는 모든 북한인들에 대한 비자 교부 금지, 인공기 선박의 호주 항구 입항 금지의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다. 호주 정부는 양자 차원의 지원프로그램을 보류시켰으나 유엔기구나 국제 적십자사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하고 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 외에 호주는 ASEAN, ASEAN지역안보포럼(ARF),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태경제협력체(APEC), 남아시아지역협력연합(SAARC),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안보 및 경제 관련 역내 다자기구들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호주는 역내국가 정상들이 참석하여 무역, 투자 및 정치·안보·전략적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포럼으로 ‘아시아태평양공동체’(Asia-Pacific Community)를 제안하고 있다.¹⁰⁵

나.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호주에서 약 2,000km 남동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고 남섬과 북섬으로 구성된 도서 국가이다. 국토면적은 약 26만 8,680km²이고 2008년 현재 인구는 약 417만 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2007년 1인당 GDP가 약 3만 256달러에 달하고 인간발전(Human Development), 삶의 질, 수명, 교육, 경제적 번영, 언론자유, 부패 부재 등의 면에서 선진공업국이다.

뉴질랜드는 동아시아지역이 자국의 국제관계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과 인도가 20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 대국이 될 것이며 10대 무역상대국 중 6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의 사안들이 자국의 경제와 안보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¹⁰⁶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관여를 지역안보 외교와 국가 간 갈등 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고, 중국의 증가하

¹⁰⁵- Australian Government, “Australia and the Asia-Pacific Century.”

¹⁰⁶-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Asia,”
<<http://www.mfat.govt.nz/Foreign-Relations/Asia/ondex.php>>.

는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이 지배적인 추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은 경제력에 의해 중요한 행위자로 계속 남을 것이나 대내 정치적 제약이 더욱 단호한 외교·안보적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을 방해해왔다고 보고 있다. 인도의 급속한 경제·정치적 신장은 지속되고, 점차 강력해지고 있는 경제국가인 한국이 역내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지역안보에서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사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테러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경제적 응집력과 정치적 연대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조정과 구조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ASEAN이 2015년까지 완전한 ASEAN 경제공동체를 지향하거나 응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정치구조를 갖는 ASEAN 현장을 조인한 것을 그러한 예로 들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와 같이 통합을 향한 더 큰 추진력이 있고 양자간 및 지역적 기제를 통해 역내 현안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지역적 추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¹⁰⁷

상기와 같은 인식하에 뉴질랜드는 역내에서 안보,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경제성장 및 지속적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 미국, 일본, 중국, ASEAN 등과의 관계와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인도 등과 같이 전략적 이해나 최근 새로이 나타나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¹⁰⁸ 최근 동아시아로 경제적 영향력이 이동하고 있는 중심에는 한·중·일이 있기 때문에

¹⁰⁷-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Statement of Intent 2008-2011,” pp. 12~18, <<http://www.mfat.govt.nz>>.

¹⁰⁸-*Ibid.*, pp. 18~20, <<http://www.mfat.govt.nz>>.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뉴질랜드는 동북아의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안정이 자국에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동북아국가들과 투자, 과학과 기술, 관광, 교육 분야에서 협력이 진행 중이고 새로운 기회들을 모색하고 있다. 뉴질랜드·중국 간 FTA가 2008년 10월 1일 발효되었고, 2009년 3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 시 뉴질랜드·한국 간 FTA 협상이 시작되었다. 뉴질랜드와 일본은 2006년 11월부터 2009년 3월까지 양국간 경제관계를 점검하는 공동실무그룹을 운영했으며 경제관계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공동 모색하기 위한 관료그룹(Officials Group)을 4월 설치·운영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1974년 ASEAN의 대화파트너가 되었고 APEC, ARF, EAS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특히 ASEAN·호주·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AANZFTA) 설치를 위한 협정이 2009년 2월 조인되었다. 또한 뉴질랜드는 인도가 향후 30년 이내에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되고 경제 초강대국 중 일국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최근 접촉과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뉴질랜드는 인도가 동아시아 역내에 대한 관계를 강화하여 협력의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¹⁰⁹

다. 인도

인도는 약 329만km²에 달하는 세계 7위의 넓은 국토와 약 12억 명의 세계 2위 인구 및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국가이다. 지정학적으로도 중국, 동남아, 중동 및 유럽,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및 CIS국가들과 인접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이다. 인도 외교정책의 주요 목표는 경제 발전과 빈곤완화라는 대내적 과제가 신속히 그리고 어떠한 방해도

¹⁰⁹-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Asia."

받지 않고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대외적 환경을 증진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도는 기후변화, 에너지, 식량안보와 같은 사안들은 전 세계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하고 선린적인 관계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인도 주변에서의 미해결된 안보 상황과 테러, 세계 경제 위기를 주요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¹¹⁰

인도는 강대국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심화·강화시키고 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주요한 발전은 2008년 10월의 민수용 핵협정 체결로서 이는 30년간 유지되었던 핵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금지가 해제된 것이다. 9월에는 싱 총리가 미국을 방문하여 인도·미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무역상대국이고 기술과 모든 분야로 확대된 관계의 원천이다. 인도의 싱 총리가 2008년 1월 그리고 외무장관이 6월 중국을 방문해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시켰다. 인도·중국 간 국경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평화로운 상태에 있다. 양국간 국방협력도 상호 신뢰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인도와 러시아의 전통적 우호 및 전략적 연계도 강화되고 있다. 정례적 양자간 정상회담을 위해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2008년 12월 인도를 방문했고, 2008년 인도는 ‘러시아의 해’를 맞아 140건의 행사를 했으며, 2009년 러시아는 ‘인도의 해’를 개최하였다. 인도는 러시아와의 전략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최근 확대되어온 인도·일본 관계는 중요하고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싱 총리가 연례 정상회담을 위해 2008년 10월 일본을 공식 방문해 ‘전략적·세계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에 관한 공동성명’과 ‘안보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을 조인

¹¹⁰-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Annual Report 2008-2009,” pp. i~ii, <<http://www.meaindia.nic.in>>.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했다. 양국 외무장관 간 제2차 전략대화가 8월 일본에서 개최되었고, 경제와 통상 및 에너지에 관한 장관급 대화도 개최되었다. 또한 양국은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을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인도는 일본 공적개발원조(ODA)의 최대 수혜국으로서 2008~2009 회계연도에 약 2,360억 엔을 받았다.

인도는 한국과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압둘 칼람(Abdul Kalam)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였고 싱 총리는 2008년 7월 일본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을 만났다. 2009년 8월에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인도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문화, 체육, 교육 분야에서 교류를 지속하고 있다. 인도는 21세기 외교의 중요한 차원으로 ASEAN 및 호주, 뉴질랜드와의 협력도 중시하고 있다. ASEAN 개별국가들과의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 있고 상품 분야에서 인도·ASEAN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양자간 FTA도 여러 국가들과 협상 중이다. 인도는 동남아국가들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보조금, 연화차관(Soft Loans), 신용한도(Credit Lines), 훈련교육 등의 형태로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인도는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ASEAN뿐만 아니라, EAS, ARF 등의 지역 및 다자간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¹¹¹

¹¹¹-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Annual Report 2008-2009," pp. i ~ ii, <<http://www.meaindia.nic.in>>.

V. 한국·동아시아국가 관계 현황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1. 주요국 관계

가. 한·미관계

(1) 한·미 안보협력과 한·미동맹 미래비전

(가) 한·미 군사·안보협력

한·미 양국은 2002년 12월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주한미군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제고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한다는 취지에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FOTA)을 연구하기 위한 협의체를 발족시키는 데 합의하였다. 2003년 4월 제1차 FOTA 회의를 개최한 이후 2004년 9월까지 12차례에 걸친 FOTA 회의를 통해 『용산기지 이전협정』 및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주한미군 재배치에 합의하였다. 주한미군 기지 재배치 계획은 서울지역에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및 관련 부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소재한 미군 기지를 2단계에 걸쳐 중부와 남부 등 2개 권역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이다.¹¹²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가 일단락 짓게 되자 ‘한·미안보정책구상’(SPI)이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하여 동맹의 미래 공동비전에 맞춰 한·미군사지휘관계를 조정하기로 하였다. 2005년 2월 제1차 SPI 회의가 개최된 후 동년 9월 28~30일 제4차 SPI 회의에서 양측은 작전통제권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2007년 1월 한·미군사위원회에서 ‘한·미 지휘관계 연합 이행실무단 운영을 위한 관련약정’

¹¹²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 (서울: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2007.5), pp. 3~1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을 체결하고, 2007년 2월 23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을 기해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측에 전환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¹¹³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폐지되고 새로운 한·미군사협조본부가 창설될 예정이다. 한·미군사지휘관계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는 계속 유지된다.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한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였다. 2006년 1월 19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SCAP)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보장문제에 합의하였다.¹¹⁴ 이 합의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되, 미국은 한국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이 동북아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하였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이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인식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신중한 입장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한 것이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관계는 더욱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 8월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최초로 한국군 주도하에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실시하였다.¹¹⁵ 한편,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8년 9월 9일 정권수립 60주년 열병식에 불참한 후 뇌졸중 시술을

¹¹³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1), p. 68.

¹¹⁴ 외교통상부, “2006년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 전략적 유연성 설명자료” (2006. 1.22)

¹¹⁵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미 한국사령부의 작전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한·미 연합연습이다. 이 연습은 군사지휘소연습과 정부연습으로 구분하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시한다.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1), pp. 146~147.

받은 것으로 확인되자 북한 체제의 불안정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책도 협의하였다. 한·미군사당국은 한·미연합계획인 ‘개념계획(COPLAN) 5029’를 ‘작전계획(OPLAN) 5029’로 전환시키는 계획을 추진하고, 북한 내부 정변으로 인한 내전상태에 준하는 소요사태 및 대량탈북, 북한 정권의 핵과 생화학무기 통제력 상실, 김정일 위원장의 유고 등 크게 5개 시나리오에 대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였다.¹¹⁶ 월터 샤프(Walter L. Sharp) 한·미연합군 사령관은 10월 1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을 감소시키는 어떠한 발전적 조치도 환영하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우리의 임무를 실행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춰 놓고 있다”고 밝혔다.¹¹⁷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Robert M. Gates) 미 국방장관은 2008년 10월 17일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의 굳건한 대한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유사시 적절한 군사력의 신속 제공과 한국에 대한 보완전력 지속제공 등을 포함한 17개 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¹¹⁸ 공동성명은 먼저 미국은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 등 확고한 방위 공약과 현 수준의 주한미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또한 북한 급변사태 등 한반도 유사시에 적절한 수준의 미군 증원전력을 신속히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완벽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추진될 것임을

¹¹⁶ 국방부의 ‘개념계획 5029’는 1996~1997년 북한 붕괴가 임박했다고 판단한 미국측의 제기로 김대중 정부시기에 만들어졌다. 한·미 양국은 2006년 말 작전계획의 전 단계로 구체적인 군사력 운용계획을 제외한 ‘개념계획 5029’를 보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문화일보』, 2008년 9월 12일.

¹¹⁷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인터뷰,” 『국방저널』, 10월호 (2008), pp. 50~52.

¹¹⁸ 국방부, “제40차 SCM 공동성명” (2008.10.17); 박영민, “미, 한반도 유사시 신속증원군 파견,” 『국방저널』, 11월호 (2008), pp. 10~1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확실히 보장했다고 명시하였다. 한편,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프가니스탄의 안정과 재건을 위해서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견해를 같이하고 범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과 관련한 양국간 협력이 한·미동맹을 계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존 한·미동맹의 기본 틀을 유지·발전시키기를 희망하며, 부시 행정부 시절 한·미간에 체결한 군사·안보 합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즉, 주한미군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에 관한 합의사항을 준수한다는 입장이다.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9년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8차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의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다. 이번 회담에서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특히 한반도 안전 보장을 위해 핵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 유사시 한반도 방어 공약을 확고히 지킨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¹¹⁹ 양측은 또한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재확인하는 한편, 한·미 안보협의회의와 군사위원회의를 통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환 과정에 반영키로 했다.

한·미 양측은 2009년 8월 17~27일 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을 실시하였다.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비하여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주도하는 이번 연습은 미국 한국사령부가 지원해 지휘소 연습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최초 운용능력

¹¹⁹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의 성과: 한·미·일 ‘북 도발 단호 대처... 보상 없다’ 천명.” 『국방저널』, 6월호 (2009), pp. 14~15.

을 검증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¹²⁰ 한·미간 원활한 작전 수행을 위해 다양한 군사 협조 기구를 편성·운영하고 전시 증원 절차를 숙달하였다. 아울러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발전시키고 있는 각종 계획을 처음으로 적용하였다. 2010년 연습부터는 한국 합동참모 본부의 주도 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나) 한·미동맹 미래비전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바탕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하였다.¹²¹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21세기 전략적 동맹’ 구축, FTA의 연내 비준,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등에 합의하였음을 천명하였다. 또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 세계 분쟁지역에서 평화의 회복 및 재건복구를 위해 한·미공조를 높이 평가하고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와 대테러 국제연대, 평화유지군(PKO) 활동 등 안보문제에 공조체제를 구축하자는데 공감한다고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변화, 에너지, 환경, 국제범죄 및 전염병 퇴치, 인권과 민주주의의 증진 등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국제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2008년 말까지 예정된 3,500명의 감축계획을 중단하고 28,500명의 현재 주한미군 병력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무기를

120. “지·해·공 전술전기 연마 총력,” 『국방저널』, 9월호 (2009), pp. 8~9.

121. 김국신·박영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4).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구매할 경우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 일본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양국 정상회담에 따라 한국은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하고,¹²² 한·미 청소년 교류네트워크 구축 등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한·미 양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미래 청사진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2일 영국 런던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첫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간 긴밀한 협력을 확인하고 6자회담을 통한 검증 가능한 북한 핵폐기가 한·미간 공동목표임을 재확인하였다.¹²³ 그 후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여 6월 16일 워싱턴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대북원칙을 재천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공표하였다.

‘한·미동맹 공동비전’(Joint Vision for the Alli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은 부시 대통령과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을 한 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것으로서 한·미동맹을 군사·안보 위주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핵심내용

¹²²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인들은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이용하여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방문할 경우’ 무비자로 미국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¹²³ 청와대,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 (2009.4.2), <www.president.go.kr>.

으로 하고 있다.¹²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는 시점에서 발표된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를 추구하고,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과 증진을 위해 협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핵우산 및 재래식 전력을 제공함으로써 위협을 제거한다는 내용의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명문화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공고한 결속을 재확인해주고 있다. ‘한·미동맹 공동비전’은 또한 경제·무역·투자 협력관계를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며, 한·미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아울러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 확산, 해적, 조직범죄와 마약, 기후변화, 빈곤, 인권 침해, 에너지 안보와 전염병 등과 같은 범세계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라크·아프간에서의 평화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 있어 공조를 제고하고, 범세계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 G-20과 같은 다자협의기구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2) 한·미 FTA와 국제무대에서의 경제협력

한·미 양국 교역규모는 2006년 현재 768억 달러로 미국은 중국·EU·일본에 이어 한국의 제4위 교역상대국이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며, 제2위 투자대상국이다.¹²⁵ 한·미 양국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증가함에 따라 2006년 2월 3일 한·미 FTA 협상을 공식 출범하였다. 한·미 양국은 상품, 농산물, 무역구제, 서비스·투자,

¹²⁴ 김국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9.6).

¹²⁵ 외교통상부, 『미국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8.4), pp. 160~16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등 무역과 관련된 19개 분야를 협상 분야로 정하였다. 2006년 6월 제1차 협상을 개시한 후 2007년 3월까지 총 10차례의 공식 협상을 개최하고 2007년 4월 2일 협상을 타결하였다. 그 후 노동·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추가협상을 전개하여 2007년 6월 30일 최종합의문에 서명하였다. 한·미 FTA가 의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될 경우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안보 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강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한·미 FTA는 미국으로서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이어 두 번째로 큰 FTA가 된다. 양국 정부는 FTA 체결이 양국 모두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뿐만 아니라 한·미관계를 전반적으로 한 차원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그러나 양국 의회는 각기 선거과정에서 주민들의 반응을 의식하여 비준을 지연시켰다. 미국에서는 상·하 양원의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민주당이 자동차와 철강업체 및 노동조합의 반대를 의식하여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오바마 상원 의원도 2008년 선거유세에서 한·미 FTA 협상결과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특히 자동차 교역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였다.¹²⁶

한편, 한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로 인해 우여곡절을 겪었다. 한국은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 광우병에 감염된 소가 발견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했었다. 그 후 2006년 1월부터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 재개가 허용되었으나, 수입 쇠고기에서 등뼈 등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한 사례가 수차례 발생함에 따라 2007년 10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¹²⁶- 2008 Democratic National Convention, “Remewing America’s Promise”; 김진호, “미 대선, 오바마의 선풍,” 『자유공론』, 7월호 (2008), pp. 72~75.

2007년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통제 국가 지위를 획득함에 따라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요구하였다. 쇠고기 수입문제가 FTA 비준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한 한국 정부는 미국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2008년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 확대 방안에 합의하였다.¹²⁷ 하지만 한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개방을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한 달 이상 지속되었다. 그 후 FTA 비준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한·미 양국은 보다 시급한 경제위기 극복에 몰두하게 되었다.

미국 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로 인해 경기침체를 겪어왔다.¹²⁸ 지속적인 주택가격 하락으로 2008년 9월 미국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파산위기에 몰리게 되자 재무부는 양대 모기지 업체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부관리체제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9월 15일 세계 4위 투자은행인 리먼브라더스 파산보호 신청을 계기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는 금융시스템의 총체적인 위기로 확산되었다. 세계 최대보험회사인 AIG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등 미국의 금융위기가 본격화 되고 또한 그 여파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한·미 양국은 10월 30일 한·미 통화스와프(맞교환) 협정을 체결하였다.¹²⁹ 이 협정으로 인해 한국은 2009년 4월 30일까지 300억 달러 범위 안에서 미 연방준비제도

¹²⁷ 민동석, “한·미 쇠고기 협상의 뒷이야기,” 『외교』, 제87호 (2008.10), pp. 99~108.

¹²⁸ 2006년 하반기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이 하락하자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Sub-prime Mortgage) 연체율 상승으로 금융 불안이 발생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9』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12.1).

¹²⁹ ‘통화스와프’란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별도의 계약을 통해 한도를 정해 놓고 양국 통화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매일경제』, 2008년 10월 30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사회로부터 원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려올 수 있게 되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제 금융시스템 개선을 논의할 수 있는 정상급 국제회의 개최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기존의 ‘G-20 재무장관회의’를 ‘G-20 정상회의’로 격상하였다.¹³⁰ 2008년 11월 14~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제1차 G-20 세계금융경제정상회의에서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규제 개선, 금융시장 신뢰 제고, 협력 강화, 국제기구 개혁’ 등 5대 원칙에 합의하고 47개 구체적 행동계획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회의에서 한국은 영국·브라질과 함께 실무 작업을 주도할 의장단으로 선정되었다.¹³¹ 2009년 4월 1~2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제2차 G-20 정상회의는 금융위기가 점차 진정됨에 따라 실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에 집중하였다. 특히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지속하고, 보호무역주의 방지에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¹³² 2009년 9월 25~26일 미국 피츠버그에서 제3차 정상회의가 개최되어 세계경제 불균형 해소, 출구전략 논의, 금융규제 개혁, IMF·세계은행 개혁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그리고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IMF 지분 일부를 신흥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다.¹³³ 이번 회의에서 2010년 11월 제5차 G-20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¹³⁰- G-20 회의는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1999년에 발족되었다. 회원국은 G7(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캐나다)과 BRICs 4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을 포함한 한국·아르헨티나·호주·인도네시아·멕시코·사우디아라비아·남아공·터키 등 12개 신흥개도국 그리고 EU(의장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¹³¹-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 122~123.

¹³²- 박수중, “제3차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2009.9.24).

¹³³- 『한국일보』, 2009년 9월 26일.

(3) 북한 핵·미사일문제에 대한 한·미 공조

(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 유산

2001년 1월 부시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국이 대북 강경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여 제네바 합의가 파기되었다. 그 후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핵실험을 단행함으로써 북핵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¹³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0월 14일 대북 결의 171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모든 회원국들에 대해서 핵·탄도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는 품목은 물론 일부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까지 북한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북한이 핵실험한 직후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제재조치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2006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자 북한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북정책을 유연한 방향으로 전환하여 6자회담을 재개하였다.

2007년 2월 제5차 6자회담에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관한 합의문(2·13 합의)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2007년 9월 27~30일 제6차 6자회담을 통하여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라는 합의문(10·3 합의)을 발표하였다.¹³⁵ 10·3 합의는 북한과 미국이 수행해야할 과제를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영변의 5MW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등 3곳의 불능화를 완료하고,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서를

¹³⁴ 북한은 2005년 현재 핵무기 7~8개 정도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50kg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iegfried S. Hecker and William Liou, “Dangerous Deal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Threat of Export to Iran,” *Arms Control Today* (March 2007).

¹³⁵ 외교통상부, “‘제6차 6자회담 2단계 회의’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 (2007.10.3).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제출해야 한다. 한편, 미국은 북한을 국무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켜야 한다.

10·3 합의 사항 중 북한의 핵시설 불능화 과정은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하지만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는 약속한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않고 지연되었다. 북한은 2008년 6월 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 외교부 부부장에게 플루토늄 생산량과 사용처, 영변 핵시설 목록 등을 적시한 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신고서 제출에 맞춰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절차에 착수하고 북한에 적용해온 적성국 교역법을 6월 27일부터 폐지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후 미국은 10월 11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¹³⁶

2008년 12월 8~11일 개최된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제2단계 조치의 완전한 이행, 한반도 비핵화 검증, 동북아시아 평화·안보 지도원칙 등을 논의하였다.¹³⁷ 가장 큰 쟁점은 핵시설 검증방법이었다. 특히 시료 채취(샘플링)를 검증의정서에 명문화 문제를 둘러싸고 논의가 진행되었다.

한·미·일 3국은 북한의 과거 핵활동 규명을 위해 시료 채취를 문서에 명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북한은 지난번에 합의한 세 가지 검증 원칙에 시료 채취는 들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시료 채취는 현재 진행 중인 핵시설 불능화를 위한 비핵화 2단계협상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논박했다. 즉, 북한은 7월 6자회담에서 합의한 시설

¹³⁶-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어도 핵확산금지, 인권문제, 핵실험 등과 관련하여 취해진 대북 제재조치는 여전히 남아있다. U.S. Department of State, Fact Sheet Office of the Spokesman, "Existing Sanctions and Reporting Provisions Related to North Korea" (October 11, 2008).

¹³⁷- 외교통상부,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의장성명" (2008.12.11).

방문, 핵관련 기술자 인터뷰, 문서 검증 등 3개 검증방법 이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¹³⁸ 시료 채취뿐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역할, 검증 착수 시기,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 여부 등 대부분의 쟁점들에서 북한과 미국의 견해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북한이 검증의정서 채택을 거부함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비핵화 2단계(불능화)를 완전히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임기를 끝마치게 되었다.

(나) 오바마 행정부와 북·미관계

오바마 행정부 정권인수팀은 집권하면 북한과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당시 클린턴 국무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우리늄 농축, 핵확산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한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¹³⁹ 이에 북한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도발적인 외교 공세를 강화하였다. 북한은 2009년 1월 13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하여 “2005년 9·19 공동선언에 동의한 것은 비핵화를 통한 관계 개선이 아니라 관계 정상화를 통한 비핵화” 원칙이었다고 주장하며 미·북 관계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였다.¹⁴⁰

오바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2월 2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당사자들이 동시에 핵군축을 실현하

138. 『중앙일보』, 2008년 12월 11일.

139. U.S. Department of State, “Nomination Hearing To Be Secretary of State” (January 13, 2009).

140. 통일부, “북 외무성 대변인, 비핵화 관련 입장 표명,” 『주간 북한동향』, 제926호 (2009.1.12~1.18), p. 12.

는 길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¹⁴¹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검증을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클린턴 국무장관은 북한측의 주장을 무시하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2월 13일 뉴욕 아시아소사이어티 연설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지속 추진,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폐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병행 추진 등을 대북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¹⁴² 아울러 북한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떤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미·북협상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대북제재

오바마 행정부 출범 직후 북한은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하였다. 국제적 관심이 북한 미사일 문제에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은 2월 20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의 도발을 억제 하는데 한·미 양국은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¹⁴³ 북한은 2월 24일 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인공위성 발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¹⁴⁴ 이에 새로 임명된 보즈워스(Stephen Bosworth) 대북특사는 3월 2~10일 중국·일본·한국 등을 방문하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¹⁴¹ 통일부, “북 총참모부 대변인, 비핵화 관련 입장 표명,” 『주간 북한동향』, 제929호 (2009.2.2~2.8), pp. 14~15.

¹⁴² U.S. Department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Remarks at the Asia Society, “U.S.-Asia Relations: Indispensable to Our Future” (February 13, 2009).

¹⁴³ 외교통상부(2009.2.20).

¹⁴⁴ 통일부, “북, 인공위성 발사 준비 발표,” 『주간 북한동향』, 제932호 (2009. 2.23~3.1), p. 18.

6자회담 재개문제와 북한의 로켓 발사 움직임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국경지역에서 취재하던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3월 17일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억류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미사일 발사문제와 함께 미국의 관심을 끌었다.

북한은 4월 5일 함북 무수단리 소재 발사장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고, 운반로켓 ‘은하-2호’에 실린 ‘광명성 2호’가 인공위성 궤도에 진입시키는데 성공하였다고 발표했다.¹⁴⁵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해 궤도에 진입하지 못했이라며 실패로 규정하였다. 북한 로켓의 1단계 추진체는 국제기구에 통보한 낙하지점 근처에 떨어졌지만, 2단계 추진체는 무수단리 발사장 기점 3,100km에 못 미치는 곳에 떨어졌고, 3단계 추진체는 분리되지 못하고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¹⁴⁶ 북한이 로켓을 발사할 당시 체코를 방문 중이던 오바마 대통령은 4월 5일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한 로켓발사를 ‘미사일’로 규정하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촉구하였다.¹⁴⁷ 유엔주재 미국대사 라이스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결의안을 상정하였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여 추가적인 제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미국은 중국·러시아와의 견해 차이를 조율하여 의장성명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유엔 안보리는 4월 1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대북제재 결의 1718호

¹⁴⁵ 통일부, “위성 요격 관련 강경입장 발표 및 성공적 위성 발사 주장,” 『주간 북한동향』, 제937호 (2009.3.30~4.5), pp. 12~13.

¹⁴⁶ East Asia Nonproliferation Program(EANP), “The North Korea Rocket Launch: International Reactions and Implications,” *CNS Feature Stories* (April 27, 2009), <cns.miis.edu>.

¹⁴⁷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Statement by the President from Prague, Czech Republic” (April 5, 200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¹⁴⁸ 이번에 발표된 의장성명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한편, 기존 결의안의 제재 조항에 대한 실행에 착수할 것을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요구하였다.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은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북한은 4월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며 6자회담의 합의사항에 더 이상 구속받지 않고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¹⁴⁹ 그리고 영변에서 핵불능화 작업에 관여하고 있는 미국의 핵 전문가들과 IAEA 모니터 요원들에게 북한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북한 외무성은 4월 29일 다시 성명을 발표하여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경수로 발전소를 건설하여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겠다고 주장했다.¹⁵⁰

북한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¹⁵¹ 한국 정부는 5월 26일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 구상(PSI) 정식참여를 발표했다.¹⁵² 한편, 유엔 안보리는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추가 결의 채택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였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에서 공동보조를 취하며 이와 동시에 양자간 협의도 긴밀히 진행

¹⁴⁸-UN Security Council, "Statement by the President of the Security Council" (April 13 2009).

¹⁴⁹- 통일부, "안보리 의장성명 거부 외무성 성명 발표 등 강력 반발," 『주간 북한동향』, 제939호 (2009.4.13~4.19), pp. 16~18.

¹⁵⁰- 통일부, "추가 핵실험 가능성 시사 및 비동맹회의에서 6자회담 삭제 발표," 『주간 북한동향』, 제941호 (2009.4.27~5.3), pp. 18~19.

¹⁵¹- 한국 기상청 관측에 따르면 5월 25일 관측한 지진의 규모는 4.5로, 지난번 1차 실험 때 3.6에 비해 0.9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9년 5월 26일.

¹⁵²- 한국은 PSI 전면 참여를 선언하였지만, 남북한 간에 합의된 남북해운합의서는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외교통상부, "대변인 브리핑" (2009.5.26).

하였다. 북핵문제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타인버그 (James Steinberg) 국무부 부장관, 레비(Stuart Levey) 재무부 차관, 보즈워스 대북특사 등 미 정부대표단이 6월 2~5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의 의도 및 내부 정세 평가,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 행위 대응방안,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였다.¹⁵³

유엔 안보리는 6월 12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 대해 대북 제재결의 1874호를 채택하였다.¹⁵⁴ 1874호는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된 1718호를 확대 보강한 것으로써 34개 조항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경제 제재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1718호는 탱크와 장갑차, 대포 등 중화학 무기류를 금수 대상으로 했으나 1874호는 소형 무기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무기 관련 물자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북한으로 오가는 화물검색 범위 및 검색가능 장소도 대폭 확대하였다. 1718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금융자산을 동결토록 규정했으나 1874호는 무상원조와 금융지원, 차관 신규 계약금지 등으로 금융제재 대상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북한 주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인도주의 및 개발 용도에 대해서는 공적인 금융지원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더욱 강화된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자 북한은 6월 13일 핵포기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며 새로 추출한 플루토늄의 전량 무기화, 우라늄 농축작업 착수, 해상봉쇄 시 군사적 대응 등 3개 대응조치를 선언하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하였다.¹⁵⁵

153. 『동아일보』, 2009년 6월 3일.

154. <www.un.org/Docs/sc/unscreolutions09.htm>.

155. 통일부, “북,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반발, 외무성 성명 발표 등,” 『주간 북한 동향』, 제947호 (2009.6.8~6.14), pp. 17~18.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한반도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워싱턴을 방문하여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2차 핵실험 등 도발적 행동에 대해 확고한 한·미 공조체제에 기초하여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하였다.

그 후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1874호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미국 국내법에 따른 독자적 금융제재 조치를 취하며 대북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대북제재 조치를 이행하였다.

가) 북한 선박 해상 검색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발효 직후, 대량살상무기를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 북한 선박을 압박하여 북한으로 회항하게 하였다. 미 해군은 6월 16일 북한을 출항한 강남호를 초계기 동원하여 추적하였다.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를 향해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강남호는 미 해군의 감시가 지속되자 6월 29일 항로 바꾸어 북한으로 회항하였다.¹⁵⁶ 강남 1호는 불법무기 선적 의심만 받았을 뿐 실제 불법무기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 선박에 실려 이란으로 향하던 로켓 폭탄 등 다량의 북한제 무기가 8월 14일 아랍에미리트(UAE) 정부에 의해 압류되었다.¹⁵⁷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발효 이후 북한제 무기를 옮기다 적발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리 제재 위원회는 북한과 이란 당국에 대해 경위 설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¹⁵⁶ 『동아일보』, 2009년 7월 2일.

¹⁵⁷ 『중앙일보』, 2009년 8월 31일.

나) 북한 기업 및 외국 기업 제재

미 재무부는 6월 18일 북한이 유엔 안보리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현금거래를 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주의보를 발령하였다.¹⁵⁸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주의 권고문을 통해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은 북한 은행·기업 관계자들과 관련된 계좌가 개입될 수 있는 거래를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미 국무부는 6월 30일 우라늄 농축장비 구입에 관여해온 북한 무역회사 남춘강이 보유한 미국 내 자산에 대해 동결조치를 취하고 미국 기업 및 개인들과의 거래를 금지하였다.¹⁵⁹ 미 재무부는 이 날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의 남부 키시섬에 소재한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¹⁶⁰ 이란인이 소유한 ‘홍콩일렉트로닉스’는 유엔 안보리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대해 지원을 제공해 왔다.

다) 외국과 대북압박 공조

오바마 행정부는 국무부·재무부·국방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전담반을 구성하고, 그 대표에

¹⁵⁸-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North Korea Government Agencies’s and Front Companies’ Involvement in Illicit Financial Activities” (June 18, 2009), <www.fincen.gov/statutes_regs/guidance/html/fin_2009_a002.html>.

¹⁵⁹-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State Designation of North Korean Nuclear Entity” (June 30, 2009).

¹⁶⁰-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oom, “Treasury Targets North Korea’s Missile Proliferation Network” (June 30, 2009), <www.ustreas.gov/press/release/tg191htm>.

골드버그(Philip S. Goldberg)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대사를 임명하였다.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은 한국·일본·중국·러시아 및 동남아 국가들과 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을 협력하며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¹⁶¹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북제재 전담반은 7월 2일 중국을 방문하여 유관 부처 책임자들을 만나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에 관한 미국의 계획을 설명하고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7월 4일에는 말레이시아를 방문해 관련 당국자와 북한 계좌 봉쇄문제를 협의했다. 골드버그 대북제재 조정관 일행은 8월 2~4일 러시아를 방문하여 러시아 외교 당국자 및 금융 당국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대북제재 이행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그 후에도 싱가포르·태국·한국·일본 등을 연쇄 방문하여 대북 제재 협력을 강화하였다.

라) 유엔 안보리와 대북제재 협력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는 7월 16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및 거래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5명의 인물과 5개 기업 및 기관, 2개 물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하였다.¹⁶²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제재대상으로 확정된 북한 인사는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장, 리홍섭 전 영변 원자력연구소 소장, 한유로 련각산수출조합

¹⁶¹-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Philip S. Goldberg, Implement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74 on North Korea" (August 13, 2009)

¹⁶²- UN Security Council Sanctions Committees, Security Council Committee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718(2006), "List of Entities, Goods and Individuals subject to the measures imposed by paragraph 8 of Resolution 1718(2006)" (Updated July 16, 2009).

책임자 등 5명이다. 제재대상이 된 5개 기관 및 기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을 주관하고 있는 조선원자력총국·남촌강무역회사·홍콩일렉트로닉스·조선혁신무역회사·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이다. 유엔 안보리는 사상 처음 제재대상에 북한 정부 인사들을 포함시킴으로써 대북 제재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호응하여 미 재무부는 7월 30일 북한의 조선혁신무역회사를 대북 금융 제재 대상기업으로 추가했다.¹⁶³

2) 대북제재와 병행한 대화 재개 모색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주도하는 한편,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였다. 캠펠(Kurt Campbell)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7월 18일 한국을 방문해 대북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Two Track Approach)을 대북정책의 골격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검증가능하고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¹⁶⁴ 그러나 동맹국들의 승인 없는 한 포괄적 패키지를 북한에 제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자 압박감을 느낀 북한은 억류 중인 미국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보이며 미국과 관계개선을 원한다는 신호를 보냈다.

¹⁶³.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Press Room, “Treasury Designates North Korean Entity Tied 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velopment” (July 30, 2009).

¹⁶⁴. 『중앙일보』, 2009년 7월 20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에 클린턴(William J. Clinton) 전 대통령 일행은 8월 4~5일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하고, 여기서 2명과 동행하여 귀국하였다. 미 국무부는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사적으로 이루어진 인도적 차원의 문제이며 공식적인 미·북대화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표명하였다.¹⁶⁵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이뤄진 여기서 석방은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6개월간 지속되어온 교착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은 대남 강경자세에서도 변화된 태도를 보였다. 8월 21~23일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에 특사조의방문단 파견하고, 8월 26~28일 남북적십자회담을 금강산에서 진행하여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였다.¹⁶⁶ 북한은 이와 같이 미국과 남한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핵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의 유엔주재 상임대표는 9월 3일 유엔 안보리 의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대북제재 1874호를 전면 배격하며 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⁶⁷ 이 서한에서 북한은 자주권을 유린하는데 이용된 6자회담 구도를 반대한 것이지 한반도비핵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없다고 변명하면서도 폐연료봉의 재처리가 마감단계에서 마무리되고 있으며, 추출된 플루토늄이 무기화되고 있고, 우라늄 농축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어 결속단계에 들어섰다고 계속 위협적인 주장을 하였다.

¹⁶⁵- U.S. Department of State, Diplomacy in Action, “Robert Wood, Daily Press Briefing” (August 6, 2009).

¹⁶⁶- 통일부, “남북적십자 회담 개최 관련 동향,” 『주간 북한동향』, 제958호 (2009. 8.24~8.30), pp. 8~9.

¹⁶⁷- 통일부, “북, 플루토늄 무기화 및 우라늄 농축 실험 성공 주장,” 『주간 북한동향』, 제959호 (2009.8.31~9.6), pp. 9~10.

아울러 유엔 안보리 일부 상임이사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북한 역시 핵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즉, 미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면 북한도 대화와 핵개발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보즈웬스 대북특사는 북한과의 대화재개 방안을 협의하기 중국·한국·일본 등을 연쇄적으로 방문하였다. 그는 9월 6일 한국을 방문하여 북한이 최근 일부 유화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¹⁶⁸ 또한 미국은 북한과 양자대화를 시작할 준비가 돼있으나 미·북대화는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즉, 대화와 제재의 ‘투 트랙 전략’을 통하여 북핵문제 해결을 추구해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은 9월 18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방문을 계기로 대화에 복귀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김정일 위원장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면담에서 “북한은 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¹⁶⁹ 북한이 대화 재개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북핵문제의 일괄타결을 제의하였다. 유엔 기후변화정상회의 및 G-20 금융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1일 미국 외교협회 등이 주관한 간담회에서 “6자회담을 통해 북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 즉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168. 『세계일보』, 2009년 9월 7일.

169. 『동아일보』, 2009년 9월 19일.

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¹⁷⁰ 한편,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이날 클린턴 국무장관과 한·미 외무장관회담을 갖고 북핵문제 공조에 필요한 원칙들에 합의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3일 유엔총회 본회의 연설에서 북한과 이란이 핵개발을 계속할 경우 대가를 치르겠지만, 핵무기를 폐기할 경우 중대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제공될 것을 강조하였다.¹⁷¹ 그리고 9월 24일 유엔 안보리의 핵확산 방지와 군축을 위한 특별 행정상회의를 주재하고, 핵무기 및 핵물질 확산 방지와 핵실험 금지를 위한 유엔 회원국의 노력과 핵확산 금지조약(NPT)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이번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87호는 ‘핵 없는 세상’ 구현을 공언해온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미국이 주도해 작성한 것이다.¹⁷² 한편,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등 미국 정부대표단은 9월 29~30일 한국을 방문하여 핵폐기에 관한 북한의 전략적 결단을 촉구하였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북한에 단호하지 못하면 우리가 핵확산을 묵인한다는 신호를 전세계에 줄 수 있다”며 “북핵문제 자체도 중요하지만 핵비확산체제와 관련해 이 사안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 우리는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하였다.¹⁷³ ‘핵 없는 세상’을 주창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북한의 핵폐기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기본적인 과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170- 청와대, “대통령연설: CFR/KS/AS 공동주최 오찬 연설” (2009.9.21).

171- The White House, Office of the Press Secretary, “Remarks by the President to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United Nations Headquarters, New York” (September 23, 2009).

172-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887(2009)* (September 24, 2009).

173- 『중앙일보』, 2009년 10월 1일.

나. 한·일관계

(1) 과거사 문제

냉전체제 붕괴 이후 한·일관계는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 변화가 한·일관계를 이완시키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일관계의 최대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과거사 마찰은 경험적으로 볼 때, 그 빈도와 심도의 양측면에서 냉전체제가 종결된 1990년대 이후 더욱 격화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권의 변동이나 정권 차원의 대외정책 목표 및 노선과는 무관하게 일단 과거사 마찰이 발생하면 한·일관계를 갈등으로 치닫게 만들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¹⁷⁴

첫째, 탈냉전 상황에 따라 한·일관계의 갈등 요소는 증폭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냉전시기 한·일 간의 결속을 강화시켰던 요인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냉전체제 하에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협력을 기반으로 하여 대 공산권 봉쇄전략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의 역사청산 문제와 관련한 갈등은 잠복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냉전체제가 붕괴되자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양국의 민족주의적 갈등 요소는 표면으로 분출하게 되었다.

둘째, 1990년대 이래 중국의 대국으로서의 급부상은 기존의 한·일 관계가 지녔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의 거대국화는 비단 경제 분야 뿐 아니라 외교, 군사적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은 더 이상 사회주의 이념에 갇힌 제3세계 국가가 아니라 세계대국으로

¹⁷⁴ 이원덕, “한·일과 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김영작·이원덕 편,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6), pp. 411~414.

급성장하는 활력 넘치는 대국이다. 중국의 탈 이념화, 대국으로서의 급부상은 동북아시아 국제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냉전체제 하에서 존재했던 한·미·일 남각 삼각관계와 북·중·러 북방 삼각관계의 도식은 사실상 해체되었다. 경제적 상호의존의 측면에서 볼 때 근년 들어 중국은 한국과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비중이 큰 국가가 되었다. 중국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짐에 따라 한·일관계의 상대적 중요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셋째, 한·일관계 이완현상은 양자관계의 측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우선 한·일관계의 측면에서 보면 1990년대 이후 한·일 간에는 정치인, 경제인의 인적 채널 및 네트워크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었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전반을 통해 한·일 양국에서 급격한 정권 변동과 정치인의 세대교체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형성 유지되어 왔던 한·일 정치인 간의 비공식적 인맥관계는 단절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들은 과거 동일한 일본식 교육을 받았으며 일본어를 모국어로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세대적인 친밀감과 유대감이 강했다. 그러나 근래에는 급격한 세대교체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러한 한·일간 인적 네트워크는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더욱이 정치인 간의 교류나 접촉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갈등 발생 시 문제해결 능력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처럼 한·일관계가 보통의 관계로 변화되면서 갈등을 수습하고 완화시켜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커니즘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넷째, 양국의 국내정치 지형변화도 과거사 마찰을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우선, 1990년대 이후 한·일관계를 변화시키는 한국 요소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정치사회의 민주화

와 국력신장에 따른 대일 자세의 변화이다. 권위주의적인 정권이 한국을 지배하던 1960년대와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한·일 간의 역사문제가 뜨거운 외교 쟁점으로 등장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이 시기동안 한국 정부는 대일관계 악화가 초래할 악영향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과거사 문제가 핫이슈로 부각되는 것을 꺼려하여 문제 제기 자체를 억제하거나 혹시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민주화 운동에 의해 권위주의 체제가 해체되고 사회 정치의 전반적인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대일 자세는 서서히 변화하게 되었다. 민주화와 더불어 일본의 과거사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한국 정부는 관용적인 태도로부터 강경한 자세 표명으로 입장을 전환하게 되었다. 즉, 한국 정부는 폭발적으로 표출되는 국민들의 대일 감정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대일 감정을 활용한 강경한 대일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특히 민주화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따라 그 영향력이 강화된 한국의 젊은 세대는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강렬한 민족주의적 정서를 표출하며 대일 정책에 있어서 강경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일본의 정치적 지형은 보수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는 일로를 걸어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경향은 고이즈미 수상이 집권한 이후 더욱 강해졌다. 평화헌법 개정론은 이미 대세로 자리 잡았으며 자위대의 보통 군대화 움직임 또한 당연한 추세가 되었다. 히노마루, 기미가요의 법제화도 아무런 저항 없이 실현되었으며 수상 및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에 대한 비판 움직임도 상당히 무뎠다. 1990년대 중반 전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 역사인식도 2000년대 이후 점차 보수적인 방향으로 퇴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일본의

I

II

III

IV

V

VI

VII

현 주소라고 할 수 있다.¹⁷⁵ 이러한 경향은 이른바 오자와 이치로가 일찍이 제창한 바 있는 보통국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해되는데 대체로 보통국가론에 대한 국민적 합의는 일본 내에서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사회의 보수화 경향은 정치권의 세대교체에 의해서 영향 받은 바 큰 것으로 이해된다. 전후세대 정치인들은 미·일동맹 중심의 강성 외교안보 정책의 추진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에 대한 근린외교는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독도문제나 역사 마찰과 그로 인한 한·일관계의 악화는 이들에게 중대한 외교현안이 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을 이끄는 정치적 주도권은 점차 전전세대에서 전후 세대로 급격하게 이전되어 가고 있다. 전후세대 일본인들은 과거 역사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일반적으로 과거 식민통치와 침략의 역사에 대한 속죄 의식을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해 전전세대에 비해 거침없는 발언과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이러한 전후세대 일본인의 역사인식 및 태도가 한·일 과거사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2) 한·일 경제관계

한·일 간 경제, 통상관계는 1965년 국교수립 이후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고 투자, 기술이전, 세관 분야에서 제도적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양국간 교역규모를 보면 2000년대 이후

¹⁷⁵- 일본의 보수정치인의 역사인식에 관해서는 若宮啓文, 『戦後保守のアジア観』(朝日選書, 1995).

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8년 89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교역확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중국에 이어 한국의 제2위 무역 상대국이고 일본에게 한국은 제3의 교역 상대국이다. 그러나 한·일 양국 교역의 최대 문제점은 한국이 만성적인 대일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대일 무역역조는 1965년 수교 이래 지속된 구조적인 현상으로서 한국은 일본에 대해 무역흑자를 기록한 적이 한 번도 없을 뿐 아니라, 대일무역 역조는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2008년 현재 대일무역 적자는 3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표 V-1> 참조). 이러한 무역적자는 한국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기업들이 일본의 부품 및 소재산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분간 이러한 구조적 의존상태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표 V-1 한·일 수출입현황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1~6 |
|-------------------|-----------------|-----------------|-----------------|-----------------|----------------|------------------|
| 對日수출 (전년대비증감률) | 217.0 (25.6) | 240.3 (10.7) | 265.3 (10.4) | 263.7 (△0.6) | 282.5 (7.1) | 97.5 (△33.3) |
| 對日수입 (전년대비증감률) | 461.4 (27.1) | 484.0 (4.9) | 519.3 (7.3) | 562.5 (8.3) | 609.6 (8.4) | 221.9 (△30.1) |
| 對日수지 | △244.4 | △243.7 | △254.0 | △298.8 | △327.1 | △124.4 |
| 총 교역액 | 678.4 | 724.3 | 784.6 | 826.2 | 892.1 | 319.4 |

출처: 무역협회.

I
II
III
IV
V
VI
VII

한편 투자 분야에서 일본의 대한 투자는 1999년, 2000년에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 달러로 사상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전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도 일본의 대한투자는 14.2억 달러에 그쳤으나 일본은 누계기준으로 한국에 대한 제2의 투자국이다(<표 V-2> 참조).¹⁷⁶

표 V-2 한·일 간 직접투자

(단위: 건, 억 달러, %)

| 구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1~6 |
|--------------------|----------------|----------------|----------------|---------------|----------------|----------------|
| 對韓 투자 (전체대비 비중) | 22.6 (17.6) | 18.8 (16.2) | 21.1 (18.8) | 9.9 (9.4) | 14.2 (12.1) | 11.8 (25.4) |
| 건 수 | 557 | 612 | 584 | 470 | 460 | 210 |
| 對日 투자 (전체대비 비중) | 3.20 (4.1) | 2.16 (2.3) | 2.91 (1.6) | 7.97 (2.2) | 6.09 (1.7) | 1.05 (1.3) |
| 건 수* | 108 | 135 | 179 | 226 | 152 | 66 |

주: 대일 투자 신고건수는 한국의 대일 진출법인수와 동일하다.
 - 개별건수 기준: 195(04) - 259(05) - 390(06) - 457(07) - 376(08) - 163(09).
 출처: 수출입은행, 지식경제부.

(3) 북한 문제

1965년 한·일기본조약의 제3조 한국의 유일합법성 조항은 북한정부의 존재를 이 조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일본이 한·일기본조약을 한국과 체결하면서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장차 북한과는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의도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제3조라고 할 수 있다.¹⁷⁷

¹⁷⁶ 외교통상부,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9), pp. 129~132.

¹⁷⁷ 한·일기본조약의 체결과정과 북한 문제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 (서울: 오름, 2004), pp. 78~80; 이원덕, 『한·일과거사 처리의 원점: 한·일회담과 일본의 대한정책』 (서울: 서울대출판부, 1996).

한·일 양국이 기본조약 제3조에서 유엔결의 195(III)를 인용하면서 한국의 유일 합법성을 규정한 것은 이 결의가 갖는 의미의 이중구조에 착안했기 때문이다. 즉, 이 조항을 두고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유일 합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하고 일본은 한국의 관할권을 한반도의 이남으로 한정하여 북한의 법적 실체를 사실상 인정하려고 한 것이었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 조항을 각자 편의에 따라 해석하였다. 북한과의 정통성을 다투는 관계에 있던 한국으로서는 이 조항을 “한국이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불법적인 괴뢰집단”이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 조항을 북한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하고 한국의 관할권이 남한에 한정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인식했다. 일본이 이러한 입장을 취한 것은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국교정상화를 반대하는 야당 및 혁신세력의 요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둘째, 장차 사실상(De Facto)의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염두에 두고 한·일기본조약이 북·일 수교의 법적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국회 비준과정에서 양국 정부의 제3조에 대한 공식해석은 근본적인 괴리를 보여 왔다. 한국 정부는 비준 국회에서 유엔결의 195(III)에 따라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일본이 북괴와 정상적인 외교관계 또는 영사관계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을 봉쇄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한·일회담 과정에서 한국만이 한반도의 유일 정통정부임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한국은 조약의 체결로 일본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석한 것은 당연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약에서 아무것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권 협정도 한·일 간의 문제를 다룬 것일 뿐, 북한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부분에 대해서는 “공백상태”로 남겨놓은 것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다. 또 시이나 외상은 한·일협정의 청구권문제와 관련해서 “청구권 문제는 일본의 재산 청구권으로 한국의 실제 관할에 있는, 지배할 수 있는 지역 만에 한정된 것이고 또한 한국의 대일 청구권 역시 전 한반도가 아닌 한국에 한정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⁸

냉전체제 붕괴 이후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교정상화 교섭을 시도해 왔다. 1990년 자민당 가네마루 부총재의 방북을 계기로 시작된 북·일 교섭은 여러 차례 중단사태와 난항을 겪으면서도 18년 동안 13차례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대 이후 일본인 납치문제와 핵, 미사일 개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북·일 정부 간 교섭은 실질적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심각한 정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최근에는 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일본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북·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납치문제의 해결이 전제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교섭을 진척시키지 않겠다는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인 납치문제는 북·일관계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 전체가 일종의 ‘납치마술’에 걸려 있어 혁명적인 정권교체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북·일관계의 진전을 기대하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일본의 입장은 북한과의 교섭을 중단한 채, 북한 체제 자체의

¹⁷⁸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반복적으로 표명되고 있다. 가령 1974년 9월 5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외무성은 “우리로서는 현재 한국내지 한국 정부에 관해서 한반도 전체의 유일한 정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납축의 유효하고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관할하고 있는 국가이며 정부라는 인식에서 있는 것이다. 한·일기본조약을 체결했을 때의 정부의 인식은 바로 그러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변화가 도래하거나 혹은 북한의 대일 정책의 입장 전환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야에서 볼 경우, 지난 18년간의 북·일 교섭에서 일본이 취한 대북한 정책의 원칙 및 기본입장은 일관성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첫째, 일본은 납치문제, 핵 및 미사일 개발 문제 등의 현안 해결을 꾀한 후,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추구하여 궁극적으로는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즉, 가까운 미래에 기회가 온다면 한·일 기본조약 제3조에서 공백상태로 남겨둔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둘째, 미해결의 식민지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정한 처리방식에 따라 일본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경제협력 자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확약했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은 이미 2002년 9월 고이즈미 수상과 김정일 위원장이 채택한 평양선언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일본의 기본 입장은 납치, 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북·일 간의 심각한 갈등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하토야마 정권의 출범과 한·일관계

전후 반세기 이상 동안 일본을 지배해 왔던 자민당 정권이 2009년 8월 30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일으킨 광풍을 맞아 마침내 붕괴되었다. 민주당은 480석 중 308석을 획득하여 압승을 거둔데 반해, 자민당은 119석을 얻어 창당 이래 최대의 참당한 패배를 기록했다. 민주당의 압승은 자민당 지도부의 실정과 무기력이 초래한 민심 이반의 결과이기도 했지만 생활정치와 복원을 내건 민주당의 공약이 일본 유권자에 표심을 끌었다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하토야마

I

II

III

IV

V

VI

VII

민주당 정권은 향후 관료주도의 정치행태가 초래한 모순과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과감한 개혁 드라이브에 나서게 될 것이다.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정치주도의 의사결정은 예산편성과 외교안보 정책의 기본 방침을 수립하는데서 출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은 외교안보 분야의 정권공약에서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를 펼치겠다고 공언해왔고 한·일관계 진전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언급도 하였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정권 하의 한·일관계에 혼풍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민주당의 지도부는 역사인식 문제에서 전향적이고 건전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군사문제나 헌법 문제 등 외교안보 정책에서 다소 유화적이고 온건한 노선을 지향하고 있다. 최근 한·일관계 악화 배경에는 일부 자민당 우파 지도자들의 시대착오적 역사인식이나 선부론 민족주의적 발상 그리고 부적절한 언행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 정권의 출현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불필요한 마찰과 대립을 넘어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구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넓게 열려있다고 생각된다.

하토야마 대표는 ‘동아시아 공동체 수립’과 ‘아시아의 공동통화 구상’을 그의 아시아 중시 외교의 비전으로 주장한 바 있다. 또 자민당 정권 하에서 결렬한 역사 마찰의 뇌관으로 작용해왔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중단하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야스쿠니 문제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 제3의 국립추도시설 건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공약이 무난하게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민주당 집권 기간 중에 야스쿠니 문제가 한·일, 중·일 관계의 외교적인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 밖에도 민주당 지도부는 정권공약과 선거유세,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기대되는 언급을 표명한 바 있다. 첫째,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하여 1995년 자민당-사회당 연립정권 하에서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를 답습, 공유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를 실천적으로 계승하겠다고 공언하였다. 둘째, 재일 한국인에게 지방 참정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셋째, 종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전후보상 문제에 관해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언급하였다.

북·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정권이 단시일 내에 새로운 대북 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은 그다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에 대한 반발과 불신이 워낙 뿌리 깊을 뿐 아니라 북한 핵, 미사 일 문제에 대한 위협과 경계심이 일본 사회 전체에 만연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으로서도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대일 자세 변화에 따라서는 민주당 정권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응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다. 자민당의 대북 제재 일변도 정책을 넘어서 민주당 정권은 새로운 대북 접근을 시도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수교협상의 개시에 물꼬를 트려고 나름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대북 외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외무성 주도의 접근보다는 민주당 내의 거물 정치인의 결단이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의 일련의 발언대로 실천에 옮겨진다면 한·일관계의 최대 장애물 중 하나인 과거사 마찰 이슈는 상당 부분 약화되거나 해소되는 방향으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한·일 과거사 갈등의 불씨가 쉽사리 꺼졌다고 보기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에는 여전히 개운하지 않은 점이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혁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의 보수적 지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주당 내의 좌우에 걸친 다양한 이념 및 정책의 혼재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과잉기대나 지나친 낙관은 시기상조라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야스쿠니 참배, 전후 보상, 과거사 인식 문제와 관련한 정치권 내의 반동적인 움직임은 민주당 정권 하에서 상당 부분 억제되겠지만 한·일 간에 역사 마찰이 재현될 가능성은 여전히 뿌리 깊게 존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¹⁷⁹

다. 한·중관계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 수교 이후 지금까지 약 18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왔다. 이러한 양국관계의 발전은 ‘선린우호관계,’ ‘21세기를 향한 협력 동반자 관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집약할 수 있으며,¹⁸⁰ 이를 경제 및 정치안보 분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협력 관계

먼저, 양국관계의 비약적 발전은 경제 교류·협력관계에서 두드러졌다. <표 V-3>에서 보듯이, 2002년의 411억 달러를 고비로 급속한

¹⁷⁹- 이원덕,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27호』, (2009.9.1).

¹⁸⁰-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pp. 217~223.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마침내 2005년 1,000억 달러를 돌파하고 2008년에는 1,683억 달러를 기록하였다.¹⁸¹ 이는 1992년 수교 당시 64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의 교역규모를 약 26배 이상 증가시킨 것이다. 2003년 이후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대상국이자 무역 흑자국이 되었으며, 2004년 이후 최대 교역대상국, 2007년부터는 최대 수입 대상국이 되었다. 우리는 중국의 제3위의 교역대상국으로 성장하였다. 이처럼, 양국의 교역은 급성장 단계를 지나 점차 안정적 성장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표 V-3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추이

(단위: 억 달러)

| 구분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 |
|------|-------|-------|-------|---------|---------|---------|---------|-------|
| 수출 | 237.5 | 351.1 | 497.6 | 619.2 | 694.6 | 819.9 | 913.8 | 529 |
| 수입 | 174.0 | 219.1 | 295.9 | 386.5 | 485.6 | 630.3 | 769.3 | 340.2 |
| 합계 | 411.5 | 570.2 | 793.5 | 1,005.7 | 1,180.2 | 1,450.1 | 1,683.1 | 869.2 |
| 무역수지 | 63.5 | 132.0 | 201.7 | 232.7 | 209.0 | 189.6 | 144.5 | 188.8 |

주*: 2009년은 1~8월.

출처: 한국무역협회.

이러한 급속한 교역규모의 증가는 한·중 양국간 무역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는데, <표 V-4>와 <표 V-5>에서 보듯이 한국의 수출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7.3%에서 2008년 22% 가까이 상승했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5년 5.5%에서 2008년 17.6%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에서 한국이

¹⁸¹ 양국 정상은 2003년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면서, 2010년까지 1,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으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어 2005년에 달성하였다.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4.4%에서 2008년 5.1%로, 중국의 수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서 9.9%로 각각 증가했다. 이로써 2007년 이후 중국은 한국의 제1위 수출입 국가가 되었는데, 중국으로부터의 무역 흑자가 전체 무역흑자인 약 146.4억 달러를 상회하는 약 189.6억 달러에 달했고, 2008년의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여파로 전체 무역수지가 132억 달러 적자였음에도 중국과의 무역에서는 14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으로써 한국의 대중국 경제의존도도 증대하게 되었다.¹⁸²

표 V-4 한국의 무역 중 중국의 비중

(단위: %, ()는 순위)

| 비고 | 1995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
| 수출비중 | 7.3(4) | 10.7(3) | 21.8(1) | 21.3(1) | 22.0(1) | 21.6(1) |
| 수입비중 | 5.5(3) | 8.0(3) | 14.8(2) | 15.7(2) | 17.6(1) | 17.6(1) |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해관통계.

표 V-5 중국의 무역 중 한국의 비중

(단위: %, ()는 순위)

| 비고 | 1995 | 2000 | 2005 | 2006 | 2007 | 2008 |
|------|--------|---------|---------|---------|---------|--------|
| 수출비중 | 4.4(4) | 4.5(4) | 4.6(4) | 4.6(4) | 4.6(4) | 5.1(4) |
| 수입비중 | 7.8(4) | 10.3(3) | 11.6(2) | 11.3(2) | 10.8(2) | 9.9(2) |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중국해관통계.

투자에 있어서도,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한국의 대중 투자에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2002년부터 중국은 미국을 제치고 한국의 제1위 투자대상국이 되었는데, 한국의 대중 투자액은 해외

¹⁸²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한국의 무역통계,” <<http://www.kita.net/>>.

직접투자 총액의 33%를 차지하여 22%인 대미투자를 훨씬 상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집약적 수출가공 기업 및 현지 진출 대기업의 하청 중소기업 등이 대거 진출하였기 때문이다.¹⁸³ <표 V-6>에서와 같이 2005년 말 현재 한국의 전체 해외투자액 중 대중 투자액은 4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중국의 한국 투자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2005년까지의 누계액이 17.6억 달러로서 전체 누계투자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V-6 한국의 대중 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

| 구분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전체 | 61 | 64 | 63 | 59 | 81 | 92 |
| 대중 | 10 | 10 | 21 | 28 | 37 | 36 |
| 비중 | 16.4 | 15.6 | 33.3 | 47.5 | 45.7 | 39.1 |

출처: 무역연구소.

이러한 양국 경제교류협력의 급속한 증대에 따른 상호의존도의 증가는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과 양국간 상호보완성이 높은 경제적 이익이 외에도, 양국 간의 지리·문화적 유사성도 중요한 이유가 된다.¹⁸⁴ 이러한 이유로 한·중 양국간 산업협력도 활발하다. 2003년 7월 노무현 전 대통령 방중 시 차세대 IT, 미래첨단기술, 전력산업, 중국자원개발,

¹⁸³. 한동훈,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수교 15년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서울: 한국정치학회, 2007.12.7~8), pp. 54~56.

¹⁸⁴. 劉賽力, “合作共贏的中韓經濟關係,”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6年, pp. 61~6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고속철도, 건설사업, 환경산업, 금융협력, 유통 분야 협력, 북경올림픽 지원, 서부 대개발 사업 등 10대 경협사업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또한 2008년 5월의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정부 및 민간 기업이 각 부문에 걸쳐 총 8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이동통신과 에너지 분야 협력, 과학기술과 환경 분야 협력 강화에도 합의했다.¹⁸⁵ 이어 8월 25일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시 한·중 양국은 2010년까지 양국의 교역액을 2천억 달러 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하였고, 에너지, 환경 등 경제통상 분야의 실질적 협력에 관한 총 17개에 걸친 합의사항을 도출했다.¹⁸⁶

다만,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한국의 대중 수출액은 913.8억 달러, 대중 수입액은 769.3억 달러로 전년비 각기 11.5%, 22.1%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9년에는 8월까지 수출은 19.6%, 수입은 36.4% 감소했다. 또한 2004년부터 시작된 경제통상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려는 한·중 FTA에 관한 논의도 2008년 제5차 산·관·학 공동연구를 끝으로 지연된 상태이다.¹⁸⁷

(2) 정치·안보관계

양국의 경제교류협력의 증가는 인적교류의 증대와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켰고, 이는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으로 확산되었다. 양국은 수교 이후 지금까지 상대국이나 제3국에서 거의 매년 정상회담을 갖고 관계를 강화해 왔다. 김대중 정부 시절까지 10년간 11차례에

¹⁸⁵ 『한·중정상 공동성명 전문』(서울), 2008년 5월 27일.

¹⁸⁶ 『한·중정상 공동성명 전문』(서울), 2008년 8월 25일.

¹⁸⁷ 다만, 2009년 10월 제2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은 향후 FTA 추진을 위한 논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쳤던 양국 정상회담은 참여정부 5년간 8차례, 신정부 들어서는 6개월 만에 3차례나 이루어져 양국관계의 발전양상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총 22회의 정상회담 중 상대국에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이 모두 9차례(한국 3회, 중국 6회)에 불과한 반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EAN+3(한·중·일) 등 제3국에서 13차례나 이루어졌다는 점은 한·중 양국이 양자관계 차원만이 아닌 지역협력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2002년 10월 발발한 2차 북한 핵 위기는 한·중 간 정치·외교적 협력을 강화시키는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는 그해 5월 중국을 방문해 한·중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하였고, 이후 5년간 양국의 협력을 실질적인 관계로 확대시켰다. 참여정부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해 남북관계 개선과 6자회담의 병행추진 전략을 사용하였는바, 남북관계의 진전이 6자회담 및 북·미관계 개선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동북아 균형자론’ 및 ‘동북아 공동체론’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는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입장과 상당부분 일치되어 한·중 간 협력범위가 자연스럽게 증대하였다.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한·중 양국은 2003년도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6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비핵화 실현을 긴밀히 협력해왔다. ‘9·19 공동성명’, ‘2·13 합의’, ‘10·3 선언’ 등의 도출이나, 북한의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공조에서도 양국은 외교부장관회담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 등을 통해 상호 협의와 협력을 확대해왔다. 특히, 2006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 직후에도 양국은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가 6자회담의 재개에 도움이 되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않으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러한 양국의 협력은 ‘2·13 합의’ 이후 북핵 봉인과 북핵 불능화 및 신고 등을 통한 평화적 해결에 상호 협조하였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위한 한반도 비핵화, 경제에너지 지원,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등 실무그룹의 주재 또는 참여를 통해 상호 협력하였다. 이와 함께 2007년 10월 2~4일 남북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양국은 상호 협의하였다. 정상회담 직후 한국은 남북정상회담의 연기 배경과 결과를 중국 측에 설명하였고, 중국은 역내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또한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에 대한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도 상호 공감하였다.

양국 간의 관심사도 점차 확대되어 양국관계의 발전을 포함, 한반도와 동북아의 주변정세 그리고 국제무대에서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이는 중국의 부상으로 인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배경으로 하며,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응하려는 중국의 다자주의 중시외교와 궤를 같이 한다. 즉, 중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평화적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6자회담이나 APEC, ARF 등 국제다자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중시하기 시작하였고, 양국간 국제무대에서의 협력도 강화되었다.

이러한 양국 간의 협력은 군사·안보 분야에서도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2006년 4월, 차오강촨(曹剛川) 국방장관의 방한에 이어 2007년 4월 김장수 국방부장관의 방중을 통해 양국은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의 안보협력을 논의하였다. 2007년의 회담에서 양국은 군부대 간 핫라인 설치, 공동탐색 및 구조훈련 방안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양국은 2007년 8월 사상 최초로 상하이에서 해군수색 및 구조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국은 핫라인 설치를 통해 NLL 상에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남북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7년 11월에 한·중 국방정책 실무협의회도 개최해 2008년도 양국 군사교류계획과 동북아 평화증진을 위한 양국군간 협력증진 방안도 협의하였다. 따라서 수교 후 군 인사교환과 위탁교육생 파견 등 군사교류 위주의 관계에 머물렀던 양국의 군사안보 관계는 군사협력의 수준으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¹⁸⁸ 이처럼, 한·중 양국의 협력이 기존의 경제협력 중심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 질서 및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영역으로 점차 확대되었다.

이러한 협력 기조는 2008년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다. 2008년 1월 중국은 왕이(王毅) 외교부 부부장을 특사로 파견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친서를 전달하는 한편, 북핵 신고 문제해결과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한국의 신 정부와의 입장을 조율하였다. 한국은 비중 있는 인사인 박근혜 국회의원을 특사로 파견하며 답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와 달리 한·미관계의 진전이 남북관계와 6자회담의 진전에 기여한다고 인식하였고, 대북정책에서도 ‘비핵·개방·3000 구상’을 발표함으로써 기존의 평화번영정책과 차별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한·미관계 강화, 한·미·일 3국 공조 확대, 주한미군의 역할 강화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위상과 영향력의 상대적인 약화를 우려하였다.

이러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한 한국은 2008년 3월 유명환 외교통상부

¹⁸⁸ 통일연구원,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p. 3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장관이 주변 4국 순방외교에서 제일 첫 번째로 중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양국의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경제발전에 관한 협력을 논의함으로써 기존 양국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다. 한국의 신정부는 경제적 실리는 물론 6자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에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중국 역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고려 한·미·일 관계의 강화를 견제할 필요가 대두되었다.¹⁸⁹

이러한 양국의 입장은 2008년 5월 27일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로 격상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한·중 간 ‘전략적 관계’로의 격상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사안이었다. 특히 자주노선을 걸으며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온 참여정부 시절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중국 측의 정중한 거절로 성사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중국과 합당한 전략적 관계는 한·중관계의 발전에 커다란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된다.¹⁹⁰

189- Scott Snyder, “China-Korea Relation: Establishing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Comparative Connections, A Quarterly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July, 2008), pp. 1~9.

190- 중국은 외교관계 친소(親疎)에 따라 지난 1996년부터 수교국과의 관계를 단순수교→선린우호→동반자→전통적 우호협력→혈맹의 5단계로 분류해왔다. 이 중 동반자 관계는 협력 동반자→건설적 협력 동반자→전면적 협력 동반자→전략적 협력 동반자→전면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세분하고 있다. ‘전략적’이라는 수식어는 주로 선진국이나 강대국과의 외교관계 설정에 주로 사용하면서 함께 세계경쟁을 논의하면서 군사적 협력과 국제무대에서의 공조까지 상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동반자 관계는 서로 대결하지 않고 ‘구동존이(求同存異)’(이점은 미뤄두고 의견이 같은 분야부터 협력한다.)의 원칙을 지키며 특정한 제3국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북한과의 관계는 현재 혈맹에서 전통적 우호협력단계로 내려온 상태이고, 이 밖의 국가로는 베트남, 몽골,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이 있다. 한국과 같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는 현재

이어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폐막 직후인 8월 25일 한국을 방문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였다. 예를 들면, 2010년 내 2,000억 달러 교역 달성과 정치 분야 5개, 경제 분야 17개, 인적·문화 교류 분야 6개, 지역 및 국제협력 분야 6개 등 총 34개의 합의사항을 도출했다. 또한 ‘전략적 관계’에 걸맞은 군사교류 확대와 외교부 간 전략대화의 상설화에도 합의했다.¹⁹¹ 양국관계의 발전은 10월 신임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한 청용화(程永華)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부국장급에서 임명되던 관례를 깨고 처음으로 국장급에서 임명된 케이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양자관계의 발전과 더불어 한·중 양국은 북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 및 국제무대에서도 상호 협력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2008년 4월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의 방중에 이어 새로 임명된 김숙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6자회담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과 면담하고 북핵 2단계의 진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에도 협의하였다. 6월 26일 북한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 폭파 이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북핵 신고와 검증문제를, 10월 11일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한 이후 12월 8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는 검증방법과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등이 있다. 그러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건설적 협력 동반자로 관계가 하향 조정된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러한 형태가 반드시 고정된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¹⁹¹ 「한·중정상 공동성명 전문」 (2008.8.2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대북 중유지원 문제의 합의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 더불어 한·중 양국은 7월 23일 ARF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의, 10월 25일 7차 ASEM 정상회의 계기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활발한 협력을 전개하는 한편, 11월 14일부터 16일 개최된 G-20과 22일부터 23일 개최된 APEC 정상회담 등을 통해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특히, 12월 13일 개최된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에 합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4월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5위인 리창춘(李長春) 방한 시 한·중 양국은 고위층 인사교류 유지 및 정치신뢰 증진, 금융위기에 공동 대응, 인문교류 확대, 전략대화 및 다자협력 심화 등에 합의하는 등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2009년 9월 제3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2010년 11월 예정인 제5차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데 중국의 협조를 얻는 것으로 이어졌으며, 10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포괄적 협력에도 합의하였다. 다만, 2009년 4월 5일 북한의 로켓발사와 5월 25일 2차 핵실험 등을 둘러싼 대북제재에 대한 양국 간의 이견과 한·미동맹 강화에 대한 중국의 우려로 인해 양국간 안보협력은 외교협력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라. 한·러관계

(1)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2000년 이후 한·러관계는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부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1992년

11월 열린 전 대통령의 방한 이후 러시아연방 대통령으로는 두 번째로, 8년 만에 방한하였다.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001년 2월 27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7개항으로 된 「한·러 공동성명」¹⁹²을 발표하였다. 정상회담의 의의는 ‘건설적이고 상호 보완적인 동반자 관계’ 심화,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 테러와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 등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인식공유, 양자간 및 남북한·러시아 3각 경협 증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10월 20~21일 상하이 APEC 정상회담에서 한·러 양국 정상은 한반도 문제와 콩치분쟁, 경제협력 방안 등 양국 공동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러 결과를 청취하고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러시아측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바노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002년 6월 말 서해교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TSR-TKR 연결 등 실질적인 이익을 위하여 7월 26~28일 방한하였다. 그는 남북한 정상에게 제3국, 즉 연해주에서의 남북정상회담을 제의하였다. 한국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6·15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서 반드시 남측 지역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한·러 양국은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정치, 군사·안보,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확대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콕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월 21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제2차 6자회담 조기개최와 철도연결 사업 등 양국간 실질협력에 관해 합의하였다.¹⁹³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한·러 정상회담이 2004년 9월

192. 청와대 보도자료, “김대통령,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2001.2.27).

193. “한·러 정상 첫 대면서 실무논의,” 『연합뉴스』, 2003년 10월 21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21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상은 한·러관계를 ‘건설적이고 상호·보완적인 동반자 관계’에서 ‘상호 신뢰하는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는 10개항의 공동선언¹⁹⁴을 채택하였다. 또한 한인 러시아 이주 14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2005년 5월 9일 제2차 세계대전 러시아 전승 60주년 기념행사,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11월 19일 실무 정상회담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양국 정상은 한·러관계가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 최상의 수준을 실현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특히 부산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채택, 푸틴 대통령의 평화변영정책 지지, 인적 교류 증진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관행에 따라 유엔 사무총장의 아시아지역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고, 반기문 장관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도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로 평가하였으며 유엔 역할의 강화를 희망하였다.¹⁹⁵ 반기문 장관이 2006년 10월 13일 유엔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것은 러시아 정부의 지지에 힘입은 바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프라드코프 러시아 총리가 10월 17일 방한하여 한명숙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공조, 에너지·석유화학·최첨단 기술 분야 등의 협력 강화 방안, 대규모 프로젝트의 공동추진,

194. 한·러 공동선언의 주요내용은 한반도 비핵화원칙 재확인 및 6자회담 틀 내에서의 협력 강화, WMD 비확산, 정상간 회동 정례화, 경험 확대, 상호주의 차원의 총영사관 신설 추진, 테러리즘 공동대처, 세계평화와 안보 및 협력증진을 위한 유엔의 역할 지지, 푸틴 대통령 방한 초청 등이다.
“한·러 공동선언 전문,” <<http://www.pyung.co.kr/bodo/20040922.htm>>.

195. “Russia supports nomination of South Korean diplomats as UN chief,” <<http://en.rian.ru>> (검색일: 2006.10.10).

군사기술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 등에 합의하였다. 또한 「한·러 가스 산업협력 협정」,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에 관한 협정」,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협정」,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와 러시아 특별경제구역청 간의 교역투자촉진 양해각서」, 「양국 산림청간 협력 양해각서」가 각각 서명되었다.¹⁹⁶

노무현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호주 시드니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07년 9월 9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가 심화·발전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양 정상은 교역 및 투자, 자원, 에너지, 우주항공, 정보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으며,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2012년 여수 박람회 유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 외교통상부는 한인 동포들의 영주귀국과 현지생활 지원 확대, 에너지 외교의 활용 등을 위해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 2007년 7월 3일 영사관을 개설하였다. 러시아 정부는 10월 3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진심으로 지지하였고 한반도에서 안보와 평화의 시대를 열수 있기를 희망하였다.¹⁹⁷

이명박 당선인은 동부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된 한·러간 협의 진행의 상세한 파악 및 협의를 위해 특사(이재오 의원)와 6명의 특사단을 2008년 1월 20~25일 러시아에 파견하였다. 이재오 특사는 줍코프(Zubkov) 부총리, 라브코프 외교장관, 다르킨 연해주 주지사 등을 면담하고 동부 시베리아에서 연해주 일대에 이르는 동북아시아를 21세기 평화와 경제가 함께 번영하는 지역으로 발전시키자는 이명박 당선인

196. “한-러 총리 ‘안보리 대북결의 충실히 이행,’” 『연합뉴스』, 2006년 10월 17일.
 197. “RF hopes Korean peninsula would become peace zone,” <<http://www.ruvr.ru>> (검색일: 2007.10.3).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의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¹⁹⁸을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줍코프 부총리는 ‘극동개발특별위원회’¹⁹⁹ 구성을 제안하고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 사할린과 러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연륙교 및 관계도로 건설 사업, 항만 경제특구 건설 사업 등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촉구하였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 취임식에 줍코프 러시아 총리가 참석하여 푸틴 대통령의 축하와 안부 인사를 전하고 양국간 투자와 교류증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러관계는 <표 V-7>와 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표 V-7 2008년 한·러관계 전개과정

| 일자 (2008년) | 주요 내용 | 주요 논의사항 |
|---------------|---------------------------------|--|
| 3.28 (서울) | 2008~2009년 외교부간 교류 계획서 서명 | - 권종락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바센초프 주한 러시아 대사 - 외교차관 및 담당 실국장 연례 상호 방문,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문화·영사 분야 협력 등 |
| 4.7 | 이명박·푸틴 대통령 전화통화 | - 북핵문제 해결에서 러시아의 지속적 역할 요청 -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4.8)에 감사 -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논의 - 푸틴 대통령의 방한 제의 |
| 5.20 | 이명박·메드베데프 대통령 첫 전화통화 | - 러시아 대통령 취임 축하 - 이 대통령의 조속한 방러 기대 - 투자 증대, 철도 분야 협력, 북핵문제 협력 등 의견교환 |
| 5.20 (서울) | 야쿠닌 철도공사 사장 방한 | - 유명한 외통부장관 면담 - TKR-TSR 연결사업 협의 |

198.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상’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러시아가 추진 중인 동시베리아와 극동지역 개발 사업에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노동력 제공을 조건으로 공동 참여하는 내용이다.

199. 이명박 당선인과 푸틴 대통령이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민간 기업인들도 특위 위원으로 참여시켜 운영하면서 단계적으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자는 구상이다.

| 일자 (2008년) | 주요 내용 | 주요 논의사항 |
|-------------------|--|---|
| 5.27 (모스크바) | 차관급 대화 | - 권총락 제1차관 방러 - 한·러 정상회담과 전략대화 추진방안, 북핵문제 등 논의 |
| 5.29 (모스크바) |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 | -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바라다브킨 외교차관 - 비핵화 2단계조치 마무리 및 차기 6자회담을 통한 3단계 협상 개시 문제 등 논의 |
| 5.29~30 (모스크바) | 제9차 한·러 포럼 | - 러시아외교아카데미와 한국국제교류재단 1997년 이후 공동개최 |
| 7.8 (모스크바) | 한·러 양자간 경제 동반자 협정 (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 | - ‘한·러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Action Plan’(2005.11)에 포함된 ‘교역체제의 상호 추가적인 자유화 연구’에 대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BEPA 공동연구를 진행키로 이미 합의(1차 회의 2007.10.31~11.1, 서울) - 상품교역 분야 전반에 대한 양국의 제도 및 정책에 대해 협의 |
| 7.9 (도야코) | G8 정상회담(7.7~9) 계기 한·러 정상회담 | - TKR-TSR 연결사업과 러시아 가스관의 한반도 통과 등 남·북·러 3각 협력 실현을 위한 긴밀 협력 논의 |
| 7.23 (싱가포르) | ARF 계기 한·러 외교장관 회담 | - 금년 중 대통령 방러, 에너지 및 극동 시베리아 개발 협력, 북핵문제, TSR-TKR 연결 등 남·북·러 3각 협력 사업 등 의견 교환 |
| 9.10 (모스크바) | 외교장관 회담 | - 유명환 외통부장관·라브로프 외교장관 -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북핵문제, 통상투자 진흥 및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등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논의 |

2008년 한·러관계가 활발히 전개된 것은 첫째, 우리 정부가 대러 외교정책 목표를 ①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한·러 협의체제 강화, ② 에너지·자원 및 동시베리아 개발협력 사업 확대, ③ ‘2012 APEC 정상회담’(블라디보스톡) 및 ‘2014 동계올림픽’(소치) 인프라 구축 참여, ④ ‘2008 한·러 우주협력의 해’ 계기 첨단 우주산업 협력 등에 두고 있기 때문이었다.²⁰⁰ 둘째,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분야 경력과 에너지

²⁰⁰ 외교통상부, “선진 일류국가로 가는 외교 -2008년도 활동계획-” (2008.3. 11), p. 7.

외교 강조로 러시아는 우리 정부에 큰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방러 경험도 한·러 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러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2008년 양국간에는 부분적으로 몇 가지의 갈등이 노정되었다. 대통령 당선자 특사였던 이재오 한나라당 의원은 방러 시 대미·대일·대중 특사와는 달리 국가수반인 푸틴 대통령을 만나지 못했다. 2006년 3월 19일 소위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²⁰¹과 관련, 우리 법원이 2008년 2월 19일 관련자 120여 명 전원에 무죄판결을 내렸으나 검찰이 항소함으로써 러시아 정부의 불만을 야기하였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탈북자, 노동자, 외교관과 접촉한 한국인 3명을 3월 7일 강제 출국하였고 한국 최초 우주인 고산씨가 ‘러시아연방 우주청’에 의해 3월 10일 이소연 씨로 전격 교체되었다. ‘러시아 가짜 석·박사학위 사건’ 관련 언론보도²⁰²를 통해 한국 정부의 내사 사실을 인지한 러시아 정부는 4월 15일 우리 외교통상부에 공한을 보내 강력히 항의하면서 진상규명을 요청하였다. 항의공한 이후 러시아 정부는 주러 한국대사관의 정보외교관 4명을 강제 출국시켰다. 이 사건이 한·러관계에 심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갈등을 해소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상기와 같은 한·러 양국의 실용주의 외교에 기초된 양자관계 발전과 2008년 상반기 노정된 갈등의 해소 필요성 등은 이명박 대통령과

201. 러시아 정부는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들이 모두 합법적인 학위라는 입장이다.

202. 이 사건과 관련, 노무현 정부는 2006년부터 주한 러시아대사관 참사관을 비밀 내사하고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 총장에 대해 지명수배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신동아』, 4월호, 통권 583호 (2008), pp. 82~94; 『신동아』, 8월호, 통권 587호 (2008), pp. 96~102.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5월 7일 취임한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8~10월 1일 러시아를 공식방문하고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수교 이후 다방면에 걸친 양국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유익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국 대통령은 회담 직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 다양한 분야의 양자협력 확대, 국제안보 문제에 대한 공동대처, 남북대화의 중요성 확인 등 10개 항에 달하는 ‘한·러 공동성명’²⁰³을 발표하였다. 이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래지향적 대러 관계 확립, 북핵문제 해결의 공감대 유지, 호혜적 실용외교 추진,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확보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제1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가 12월 18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권종락 외통부 제1차관과 데니스프 러시아 외교부 제1차관은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발전방안, 동북아정세, 아태지역 협력 등 지역과 국제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 차관은 정상 간 빈번한 회동,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2010년 수교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등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를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북한 비핵화의 조기 실현을 위해 6자회담에서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²⁰⁴

2009년 한·러관계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기초로 상호

²⁰³. “한·러 공동성명,” 청와대 홈페이지 <<http://www.president.go.kr>> (검색일: 2008.9.29).

²⁰⁴. 외교통상부, “제1차 한·러 외교차관 전략대화 개최” (2008.12.26);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First Round of Russian-Korean Strategic Dialogue” (2008.12.1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해의 폭을 넓혀 활발한 고위인사 교류가 있었다. 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보론초프(러시아 과학아카데미 동방학연구소, 한국·몽고 과장)도 “현재 양국관계는 매우 안정적이며 바람직하다”²⁰⁵고 평가하고 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문제 등으로 방북한 후 바로 방한하여 유명환 외통부장관과 4월 24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참가 거부를 선언한 북핵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의 로켓 발사 대책 등 상호관심사에 대해 협의했다. 그는 이튿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북한은 쉬운 상대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²⁰⁶고 말했다.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ARF외교장관회의에서 유명환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7월 23일 재차 만나 양국관계 및 한반도 상황을 논의했고, 이샤예프 러시아연방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 대표가 8월 26~29일 연해주·하바롭스크주·사할린주 주지사 등 극동 지방 정부 주요 인사 및 기업대표 20여 명과 함께 방한하여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하고 협력증진 방안을 협의하였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6~10일 광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방러, 9월 9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에서 “이명박 정부의 비전: 한·러 동반성장과 한국의 신성장 동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 방문은 ‘한·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화하고 한국의 중장기 발전전략에 대한 러시아 인사들의 이해를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²⁰⁷

205- “한·러 협력사업 봇물,” 『중앙일보』, 2009년 2월 23일, <<http://article.joins.com>>.

206- “러’ 외무, 남북 연쇄 방문 성과는,” 『연합뉴스』, 2009년 4월 25일.

207- 외교통상부, “광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러시아 방문”(2009.9.6).

(2) 군사협력 확대와 북핵문제 공조

2000년 이후 한·러 양국간 군사교류와 협력이 강화되었고 방산·군수 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으며, 러시아 정부는 제2차 북핵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5월 조성태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국방장관 간 회담을 갖고 동북아 및 한반도 안보정세 관련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간 군사교류·협력 증진에 합의하였다. 11월에는 제1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어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군사기술·방산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푸틴 대통령이 2001년 2월 27일 방한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해결, 동북아대화 실현,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조약의 조기발효, 「탄도탄요격미사일(ABM) 제한협정」의 보존강화 등에 합의하였다.²⁰⁸

2003년 4월 이바노프 국방장관의 방한, 제2차 ‘한·러 군사기술·방산·군수 공동위’의 모스크바 개최 등을 통해 양국간 군사적 신뢰증진 뿐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가 발전되었다. 미사일 순양함 1척과 대잠 초계함 2척으로 구성된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2004년 2월 10~15일 인천항을 공식 방문하여 한국해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러시아 해군장병들은 1904년 러·일 전쟁 당시 인천에서 일본 함정과 전투를 벌이다 자폭한 러시아 해군병사들의 넋을 위로하는 추모행사가 가졌다. 러시아는 베이징에서 2월 25~28일 개최된 북핵 관련 2차와 6월 23~26일 3차 6자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의 일괄타결 및 ‘동결 대 보상’ 원칙을 지지하는 한편, 대북

²⁰⁸ 여인근,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안전보장과 경제 및 에너지 지원에 참여할 용의를 표명하였다.²⁰⁹

양국의 긴밀한 협력은 2005년 2월 10일 북한의 핵보유 선언 이후 제4차 6자회담 재개, '9·19 공동성명' 채택 등이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세르게이 이바노프 국방장관과 4월 22일 한·러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양국 사이에 비행정보교환용 긴급 통신연락체계(핫라인)를 조기 설치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측은 고위급 인사의 상호방문과 실무급 대화·접촉을 활성화하고 군사기술과 방산·군수 분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러시아측은 자국산 무기구매를 우리측에 집요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²¹⁰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협력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양국은 모스크바에서 『한·러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 상호협력협정』을 10월 6일 체결하였다. 한국군이 현재 운용중인 호크(Hawk) 미사일을 대체할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를 2010년까지 개발할 목표로 러시아 기술력을 접목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 외무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직후인 2006년 7월 5일과 핵실험 직후인 10월 10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실험이 한반도 상황, 지역평화와 안정에 상응하지 않는 행동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양자간 및 유엔 내에서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16일 푸틴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실험 후속대책과 관련, “핵실험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6자회담 당사국들이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²¹¹고 말하고 교착상태의 타결을 위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였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209. “러 대표 ‘대북 안전보장 동참 용의,’” 『연합뉴스』, 2004년 6월 25일.

210. “한·러 비행정보 핫라인 조기설치,” 『세계일보』, 2005년 4월 23일.

211. “노대통령·푸틴 ‘북핵 대화 해결 노력,’” 『연합뉴스』, 2006년 10월 16일.

10월 17일 프라드코프 총리를 접견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같은 압박과 6자회담 재개와 같은 대화재개 노력을 동시에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같은 날 한·러 양국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 핵비확산체제에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유엔 결의안의 충실한 이행과 평화적 해결 및 긴밀한 공조에 합의하였다.²¹²

북핵문제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2007년 9월 9일 시드니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진 푸틴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에서 러시아 정부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과정에 기여한 데 대해 평가했으며, 양국 정상은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행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직접 관련된 당사국들이 적절한 별도의 포럼에서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협상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2·13 합의’에 동의하였다.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 체결 과정에서 자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러시아의 참여 이유는 첫째, 구소련이 한국 전쟁의 실질적인 참전국이었던 때문에 러시아는 구소련의 계승국으로서 그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둘째,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평화조약의 내용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의 비무장화, 북한이 주장하는 일본의 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¹³

2008년에도 북핵 폐기를 위한 노력이 한·러 양자간 및 6자회담을

²¹²- “노대통령, 러총리 ‘압박·대화 병행’ 인식공유,” 『연합뉴스』, 2006년 10월 17일; “한·러 총리 기자회견 일문일답,” 『연합뉴스』, 2006년 10월 17일.

²¹³-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러포럼 제8차 회의보고서』 (2007), pp. 58~5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통해 지속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7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북핵 사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서 러시아가 북한을 설득하는 데 지속적인 역할을 맡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한 북핵문제의 진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²¹⁴고 약속하였다. 북핵문제는 2007년 12월 이후 농축우라늄과 핵기술 이전문제로 교착상태에 직면하였다. 6자회담 한국 측 수석대표인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008년 5월 29일 모스크바에서 러시아 측 수석대표인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을 만나 북한의 핵 신고 단계 마무리 및 핵 폐기 3단계 협상 개시 등 북핵과 관련한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반도 비핵화 실현에 양국이 공조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하였다.²¹⁵ 보로다브킨 외무차관과 김 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월 23일 모스크바에서 재차 회동하고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핵 불능화 과정과 6자회담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11월 20일 러시아에서 한·러 국방정책실무회의가 개최되어 국방정책 및 지역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2008년도 군사교류협력 현황 및 2009년도 군사교류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²¹⁶

2009년 전반기에는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시험발사와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으로 한·러 간 외교채널이 긴박하게 작동하였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를 전후해 모순된 입장과 정책을 보여주었다. 3월 12일 서울을 방문 중이던 러시아의 6자회담 수석

214- 청와대, “한·러 정상 전화 ‘북과 3각 협력’” (2008.4.8).

215- “Russia, S. Korea, U.S. envoys to meet for N. Korea nuke talks,” *Novosti* (May 29, 2008).

216- 국방부, “한·러 및 한·중 국방정책실무회담 참가” (2008.11.18).

대표 보로다브킨 외무차관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 위반여부를 로켓발사 이후에 판단할 수 있다”²¹⁷고 함으로써 북한의 로켓발사 자체를 묵인 또는 용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로켓발사 직전에는 ‘투명성 촉구,’ 발사 직전 긴장고조 상황에서는 ‘자제 요청,’ 발사 직후에는 ‘수용,’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시에는 ‘규탄’이라는 일관되지 못한 입장과 정책을 보였다. 또한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4월 23~24일 방북 시 “위성발사가 매개 나라의 자주적 권리”라는데 대해 인정하고 러시아가 북한 위성을 대신 발사해 주는 방안도 제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접견 시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행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북한이 로켓발사를 하지 않도록 설득작업을 벌였다”고 평양에서와는 모순된 발언을 하였다.²¹⁸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이와 같이 일관되지 못한 입장은 첫째, 동북아와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했을 수가 있다. 둘째, 러시아가 6월에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예정된 우리의 인공위성 발사를 협력하는 상황에서 인공위성을 위한 로켓발사라고 주장하는 북한에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북한이 로켓발사를 중단한다는 조건으로 러시아가 북한의 인공위성을 대신 발사해주고 경제이익을 취하려는 계산이 있었는지 모른다.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직후는 러시아 외무부는 이를 동북아에서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보와 안정을 위협하는 것으로 강력히 규탄하고

217. 『경향신문』, 2009년 3월 14일.

218. “러 외무, 북에 위성발사 지원 제안(2보),” 『연합뉴스』, 2009년 4월 24일; 청와대, “이 대통령,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 접견” (2009.4.25).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준수와 6자회담으로의 복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²¹⁹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5월 27일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 핵실험의 대응방안을 협의하였다. 이 대통령은 “강력한 성명을 발표하고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신속한 대응을 해줘 감사하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지도록 긴밀한 협력이 이뤄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국 등 관련국들과 유엔 안보리에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북한과의 정부 간 대화(28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러 통상회의)도 연기했다”²²⁰고 응답했다.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유명환 장관과 라브로프 장관은 7월 23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긴장고조에 우려를 표명하고 핵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엄격한 적용과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²²¹ 이후 한·러 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3) 경제관계의 확대

국제고유가에 따른 러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2000년 이후 한·러 경제관계는 확대되고 있다. 2001년 2월 27일 서울에서 개최된 김대중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한·러 정상회담 결과 양측은 무역과 투자,

²¹⁹-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Statement of the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09.5.25).

²²⁰- 『중앙일보』, 2009년 5월 28일.

²²¹-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er of Foreign Affairs Sergey Lavrov Meets with ROK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Yu Myung-hwan” (2009.7.23).

에너지와 자원, 산업, 중소기업, 과학기술, 정보기술과 통신, 어업, 해운, 항공, 철도, 환경, 관광 및 지역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과 세계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편입을 지지하였다.²²²

푸틴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 취임 시 전달한 친서에서 TKR-TSR 연결 사업, 가스 협력 등 경제 분야의 협력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한국의 대러 직접투자 확대를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서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은 한국과 시베리아 지역과의 통상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인사, KIST 등 학계인사, 벤처기업인, KOTRA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점도시 협력 기반 구축행사를 시베리아 과학도시 노보시비르스크와 톰스크에서 6월 16~20일 개최하였다.²²³ 이어 우리 정부는 러시아 어업·에너지 분야의 중심지인 블라디보스톡과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도 러시아 거점도시 기반구축 사업을 10월 6~10일 시행하였다.

양국 경제부총리급 협의채널인 ‘한·러 경제공동위’ 산하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가 2004년 2월 19~20일 부산에서 개최되어 양측간 통상과 투자 확대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되었다. 총 25억 달러가 소요될 전망이다 TKR-TSR 연결사업을 위해 남북한·러시아 전문가들이 4월 28~30일 모스크바에서 최초로 회합을 가졌다.

3국 대표자들은 철도연결을 위한 재원 마련, 한반도내 연결 노선, 철도기관 간 공동연구 등 철도연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폭넓게 논의

222. 여인곤,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223. “시베리아 거점도시 기반구축 행사,” 『연합뉴스』, 2003년 6월 13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하였다.²²⁴ 러시아의 정치안정과 경제회복세를 배경으로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 중 하나인 LG전자의 가전공장 기공식이 2005년 4월 19일 거행되었다. 이 공장은 모스크바 근교 15만평 부지에 2006년 완공되어 세탁기와 냉장고, PDP/LCD TV, 오디오 등 4개 제품을 각각 연간 100만 대씩 생산하고 있다. 부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005년 11월 19일 실무 정상회담에서는 ‘한·러 간의 경제통상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²²⁵이 채택되었다. 또한 KOTRA는 국내업체의 시베리아 지역 진출 지원을 위해 노보시비르스크에 무역관을 12월 1일 공식 개설하였다.

2006년에는 한·러 양국간에 활발한 인사교류와 다양한 합의들이 이루어졌다. 이 철 ‘한국철도공사’ 사장과 김영삼 북한 철도상 및 야쿠닌 ‘러시아국영철도회사’ 사장이 함께 참석하여 사실상 3국 철도대표간 첫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러 철도운영자 회의’가 3월 17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북한 철도의 현대화 개량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 등 남북철도와 대륙철도 연결을 위한 현안들이 논의되었고, 『한·러 철도협력 양해각서』도 체결되었다.²²⁶ 폴리코프스키 국가기술감독청장이 12개 부처 대표단을 이끌고 서울에서 10월 12일 개최된 제7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러시아 측 위원장 자격으로 방한하여 통상, 에너지, 정보통신, 우주기술, 어업, 교통 등 10개 경제 의제들에 대해 논의하였고 프라드코프 총리의 방한 일정까지 수행하였다.²²⁷ 2007년에도 한·러 통상장관회담,

224. “남·북·러, TKR-TSR 연결 3자회담 시작,” 『연합뉴스』, 2004년 4월 28일.

225. 외교통상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의 경제·통상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Action Plan)” (2006.3.22).

226. “남·북·러 3국 첫 철도회담 열려,” 『머니투데이』, 2006년 3월 16일.

227. “러 ‘북한통’ 폴리코프스키 11일 방한,” 『연합뉴스』, 2006년 10월 9일.

한·러 경제위 협동회의, 한·러 극동시베리아 분과위원회, 한·러 경제 공동위 등이 연이어 개최되었다. 대러 차관문제와 관련, 9월 10~11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한·러 군사기술협력 실무회의에서 양국은 러시아가 남은 12억 9,500만 달러를 현금과 현물 각각 50%로 상환하고, 현물은 군사기술협력과 완성 장비를 5대 5의 비율로 한국에 제공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²²⁸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해인 2008년에도 5월 20일 야쿠닌 ‘러시아 철도공사’ 사장의 방한, 7월 8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한·러 양자간 경제 동반자 협정(BEPA) 공동연구그룹 제2차 회의, 7월 8일 도야코 G8 정상회담, 7월 2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ARF 계기 한·러 외교 장관회담, 9월 10일 모스크바 외교장관 회담 등이 개최되었다. 이러한 양자·다자 간 회의를 통해 한·러 고위인사들의 교류, 투자, 철도협력, 가스관 연결, 극동시베리아 개발 관련 대화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우리은행 러시아법인’은 러시아 진출 이후 첫 개발금융투자 사업으로 5월 20일 ‘한·러 비즈니스센터’ 건립에 3,600만 달러를 지원키로 했는데 이 센터는 9월 착공해 2010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극동지역의 나훗카에 한국 선박 전용 항구를 건설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부산 항만공사’와 러시아 측이 이미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으며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상하였다. 2009년 공사를 시작해 2011년부터 실제 사용에 들어간다는 목표이다.²²⁹ 우리 정부는 시베리아 개발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참여와 에너지 외교 강화를 위해 이르쿠츠크에 총영사관을 신설하기로 2008년 6월 24일 결정하였다.

228. “대한 차관 절반 현물로 갚겠다,” 『조선일보』, 2007년 9월 12일.

229. “나훗카에 ‘한국 전용 항구,’” <<http://kr.blog.yahoo.com>> (검색일: 2008.6.14).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 간의 9월 29일 모스크바 정상 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2005년 11월 채택된 ‘한·러 경제·통상 협력 행동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교역량의 신속한 증가 및 상호 투자 확대를 환영하였다. 양국 투자협력을 위한 정보교환, 인프라 구축 협력, 가공·첨단기술·에너지·천연자원 개발 분야 협력 등을 촉진하기로 하였으며,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와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프라 건설 사업 등에서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은 서캄차카 해상광구 개발사업, 석유가스 화학단지 건설, 극동지역 액화가스 기지 건설 등에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나노기술, 정보화, 원자력 에너지,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분야와 극지 연구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러시아 측은 철도연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북한을 설득하기로 하였다. 이 외에 양측은 해운과 수산업 협력,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 북서태평양 수역 내 불법조업 방지, 법집행, 자연 및 인적 재해 예방, 국방 분야 교류협력,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²³⁰

2009년 한·러 경제관계에서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세친 러시아 부총리는 방한에 앞서 2월 18일 사할린에서 개최되는 LNG 액화기지 준공식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수행하였다. 러시아 최초의 사할린 LNG 액화기지 건설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였기 때문에 이 준공식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이규형 주러 대사 등이 참가하였다. 세친 부총리는 18~20일 에너지부 장관, ‘로스네프트’ 국영석유회사 사장, 국영방산회사 사장, 한·러 민간경협위원장 등을 수행하고 방한하여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지식경제부 장관 및 국내

²³⁰- 여인곤,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관련기업 대표들과 면담하였다. 이들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 서캄차카 해상유전 공동개발, 원자력 등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의 한·러 간 전략적 협력 증진방안을 협의하였다.²³¹ 러시아의 철강 거대기업 메첼(Mechel)은 현대중공업에 매년 10~30만 톤 코크스탄을 2010년부터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현대중공업은 4월 14일 러시아 연해주 하롤스키 라이온 지역에 1만 ha(약 3,000만 평) 규모의 농장을 소유 운영하고 있는 영농법인 하롤 제르노(Khorol Zerno)를 인수해 여의도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대규모 해외 농장에서 옥수수과 콩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²³²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시 양국 정상은 2015년부터 30년간 매년 750만 톤의 천연가스(PNG)를 들여오기로 합의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북한 경원선을 경유해 우리나라로 연결되는 육상 가스관을 건설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였다. 우리 측의 입장을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즈프롬’에 전달하였으나 남북 관계 악화 때문에 이 사업은 보류되었다. ‘한국가스공사’는 평양이 남한에 요청할 때까지 북한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이 바라지 않는다면 액화천연가스(LNG) 형태로 배로 들여오는 방법밖에 없다.²³³

한·러 양국 교역액은 연 평균 7%의 성장률에 따른 러시아의 신속한 경제회복으로 2005년 78억 달러에서, 2006년 98억 달러, 2007년 151억 달러, 2008년 180억 달러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여파로 우리나라의 대러 교역 성장세는

²³¹ 외교통상부, “세친 러시아연방 부총리 방한” (2009.2.16).

²³² “현대중, 여의도 33배 연해주 농장 인수,” <<http://news.nate.com>> (검색일: 2009.4.15).

²³³ “Russian gas project suspended over Korean peninsula tension,” <<http://en.rian.ru>> (검색일: 2009.9.29); 『서울신문』, 2009년 2월 9일.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2007년에 전년대비 54.1%에서 2008년에 전년대비 19.2%로 둔화되었다(<표 V-8> 참조). 양국의 무역수지는 대체로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대부분 천연자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교역조건을 개선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표 V-8 한국의 대러 교역추이

(단위: 억 달러, 전년대비 증감율 %)

| 수출입/연도 | 2005 | 2006 | 2007 | 2008 |
|--------|--------------|--------------|---------------|---------------|
| 수출 | 39 (65.2) | 52 (34.0) | 81 (56.2) | 97 (20.5) |
| 수입 | 39 (7.2) | 46 (16.2) | 70 (52.6) | 83 (19.5) |
| 교역량 | 78 | 98 (25.6) | 151 (54.1) | 180 (19.2) |
| 무역수지 | 0 | 6 | 11 | 14 |

출처: 주 러시아 대사관, “한·러 교역통계,” <<http://rus-moscow.mofat.go.kr>> (검색일: 2009.3.23) 참조.

러시아는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롯데제과의 제과공장, 현대자동차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과 롯데호텔 건립 공사 등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6월말 현재 한국의 대러 실질 투자액은 724건, 12억 4,145만 달러이고, 투자 신고액도 20억 3,3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국의 대러 실질 투자액은 대중 투자액 273억 달러의 4.5%에 불과해 러시아의 대한국 관계에서 최대 불만 요인이다.²³⁴ 최근 러시아가 중동과 동남아에만 편중됐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²³⁴ 한국수출입은행, “국가별 해외투자 현황,” <<http://www.koreaexim.go.kr>>.

공급체계에서 핵심 에너지 공급원으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 러시아 산 원유 수입(38,129,000배럴)이 2006년(13,973,000배럴)보다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 외에 한·러관계에서 주목할 사항은 우주과학 분야에서 2009년 8월 25일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한 과학 위성 2단계 ‘KSLV-1’ 로켓이 발사되었으나 100kg의 연구위성을 목표 궤도에 올리는 데에 실패한 것이다.

2. 한·ASEAN 관계

ASEAN이라는 명칭과 동남아라는 지역의 명칭은 국내에서 자주 혼란을 일으킨다.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ASEAN이라는 명칭은 현재 동남아의 10개국을 아우르고 있는 지역협력 기구의 명칭이며, 동남아라는 명칭은 동남아라고 부르는 지리적 지역 안에 포함된 동티모르를 포함한 11개의 개별 국가 단위를 칭한다.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동남아와 ASEAN은 구별되어 쓰여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여기서는 지역기구인 ASEAN과 한국의 관계를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주의할 점은 어차피 ASEAN이라는 지역기구가 유럽 연합과 같이 고도의 통합단계에 들어선 것은 아니며 느슨한 지역협력 기구이기 때문에 결국 한국과 ASEAN이란 지역기구의 관계는 ASEAN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서 한국이 동남아지역에 있는 개별 국가와의 관계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한국은 1989년 ASEAN과 부분대화 상대국의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한국이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이전에 내부와 한반도에 머물렀던 시각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을 차츰 지역적으로 넓혀나가는 시기와 동일하며, 또 한국이 경제적으로 동남아지역에 진출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한국이 ASEAN과 대화상대국 지위를 얻은 것은 이런 정치, 경제적으로 변화된 흐름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부분 대화 상대국 지위에 머물렀던 한국은 1991년 ASEAN의 전면대화 상대국 지위를 획득한다. 이어 1994년에는 ASEAN의 주도로 만들어진 ASEAN 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하고 적극적인 대ASEAN 외교에 나서게 된다. 특히, 한국의 ARF에 적극 참여는 당시 한국이 안고 있던 안보문제인 제1차 북핵위기와 맞물린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소강상태를 보이던 한·ASEAN 관계의 새로운 전기는 1997년 경제위기 상황이 시작된 직후 ASEAN이 한·중·일 3국 정상을 초청하여 처음으로 비공식 ASEAN+3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다시 시작된다. 1997년에 ASEAN+3 회의에 참석한 한국은 이후 김대중 정부 시기에 ASEAN+3 정상회의와 각종 협력 사업에 적극 참여하면서 지역협력을 주도해 나갔다. 이런 관계는 더욱 발전하여 2004년 한국은 「동남아 우호협력조약」(TAC)에 가입했다. 「동남아 우호협력조약」은 상호불가침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것으로 동남아 국가와의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중요한 발전단계라고 할 수 있다. 또 2004년은 지역기구로서 ASEAN과 한국이 몇 가지 의미 있는 발전을 경험했던 해인데, 「동남아 우호협력조약」 가입 외에도 한국의 대사회상대국 지위 획득 1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과 ASEAN이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포괄적 협력 동반자 선언 행동계획’을 발표하여 실질적인 협력의 단계로 진행한다. 이 연장선상에서 2005년에는 한·ASEAN간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공동선언’이 이어지고, 이후로 한·ASEAN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한 협상이 이어져 2006년에는 상품 분야 FTA의 서명이, 그리고 2007년에는 서비스 분야 FTA가 각각 합의 되었다.

한·ASEAN 관계의 또 하나의 전기는 2009년인 바, 2009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과 ASEAN 간의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해이다. 처음으로 ASEAN 정상들이 모두 한국에 모여 대화상대국 수립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꾸준히 발전되어 가는 한·ASEAN 관계의 공고함을 재확인했다.²³⁵ 또한 태국 차임-후아한에서 개최된 제12차 한·ASEAN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ASEAN 10개국 정상들과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²³⁶ 이처럼 지난 20여 년간 지역기구로서 한국과 ASEAN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왔지만, ASEAN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중국과 일본의 노력에는 조금 못 미치는 속도를 한국이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미 중국과 일본은 ASEAN과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했고 그에 따라 양자간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며 최근에는 ASEAN 전담 대사를 임명했다. 그에 비해서 한국과 ASEAN의 관계는 여전히 포괄적 협력관계에 머물러 있어 고위급 회의에 못 미치는 협력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ASEAN 전담 대사 역시 임명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ASEAN과 한국의 관계 발전 속도는 조금 더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235. 청와대, “2009 한·ASEAN 특별정상회의.”

236. 청와대, “제12차 한-ASEAN 정상회의 결과” (2009.10.24).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가. 정치·안보 분야

정치·안보 분야에서 한국과 ASEAN 관계의 현주소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될 수 있다. 가장 먼저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범주 안에서 ASEAN과 한국의 협력을 주요한 관계의제로 들 수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ASEAN이라는 지역기구는 역내 평화와 안정, 그리고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출범했다. 1967년 시작된 ASEAN이라는 지역기구는 당시 동남아시아의 국가들이 안고 있던 안보문제, 즉 외부로부터의 위협,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확산되고 있는 공산주의의 위협,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내 국가들 간의 잠재적 갈등에 따른 위협을 관리하고자 출범했다.

1960년대라는 시점은 이들 국가들이 식민지배에서 막 독립을 한 시기로 외부의 간섭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한 동남아 국가들이 극도로 민감한 시기였다. 또 1960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확대되면서 동남아에서 인도차이나 발 공산주의 위협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갔던 시기이며, 특히 태국은 이런 공산주의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60년대 초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의 일촉즉발의 군사적 긴장, 그리고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불편한 외교관계, 개별 국가들의 소수민족 문제로 인한 역내 국가 간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시기이다.²³⁷

이런 배경 하에 탄생한 ASEAN이라는 지역기구는 역내 안정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했다. 그 결과로 공산주의 문제에 공동대응하고 역내 국가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 결과 비핵시대화

²³⁷- Donald E. Weatherbee,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Lanham: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pp. 65~71.

선언, 『우호협력조약』(Treaty of Amity and Cooperation, TAC) 등이 선포되었고, 내정불간섭-주권존중의 원리가 ASEAN의 핵심 질서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런 노력은 ASEAN 역내에 궁극적으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었고, 이런 평화와 안전은 동남아 국가들의 성장의 원동력이 된 해외직접투자가 동남아로 쏟아져 들어오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항상 최우선의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²³⁸

이런 ASEAN의 입장과 한국의 입장이 가장 적절히 조화되는 계기는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동아시아 차원에서 보면 현재 가장 첨예한 안보의제이면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 한반도이다. 한반도 상황의 군사적 전개 혹은 물리적 충돌로의 발전은 한국뿐만 아니라, ASEAN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역내 안정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번영이란 관점에서 환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하여 한국과 ASEAN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 항상 공동의 보조를 취해왔다.²³⁹ 뿐만 아니라 ASEAN은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 협의체인 ASEAN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을 이끌고 있다. 2009년 6월 한·ASEAN 특별정상회의 시 ASEAN

²³⁸ Richard Stubbs, “ASEAN: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in Mark Beeson (e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Regional Dynamics, National Differences* (London: Palgrave, 2005), pp. 216~224.

²³⁹ ASEAN+3 계기로 한·ASEAN 정상회의, ASEAN+3 정상회의 후 발표된 공동성명과 의장성명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북한 핵의 확산에 대한 우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등의 내용으로 ASEAN은 꾸준히 한국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1997년 한·ASEAN 정상회의 공동선언, 2002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4년 ASEAN +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5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2007년 ASEAN+3 정상회의 의장선언 등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측 의장을 맡은 태국의 아피싯 총리의 언급에도 나타나듯이 역내 안정을 중시하는 ASEAN에게 북한 핵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이의 해결을 위해서 언제든지 ARF를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²⁴⁰ 현실적으로 창립 당시의 많은 관심과 달리 ARF의 실질적 효능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 유일 다자 안보기구인 ARF는 지금도 그렇지만 향후 중요해질 수 있는 기구이며 따라서 ASEAN과의 협력을 통한 ARF의 적극적 참여 역시 한·ASEAN 정치·안보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는 틀림없다.

한·ASEAN 정치안보 협력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분야는 동아시아 지역 협력을 통한 새로운 동아시아 질서의 모색이라고 볼 수 있다. 동아시아지역 협력을 통한 한·ASEAN 관계의 새로운 국면 전개는 한·ASEAN 관계에 있어 한국에게 지역 국가 간 역학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틀 안에서 전개되는 국제정치적 상황은 한국에게 왜 ASEAN을 중시해야 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더해준다. 동북아의 한·중·일 3국과 ASEAN 10개국이 모인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구도에서 한국은 애매한 위치, 혹은 취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그 자체로 객관적으로 정치, 경제, 군사적 대국인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 ASEAN 10개국의 경우 10개 국가가 하나의 ASEAN이라는 단위로 지역협력에 참여하고 있고 나라 수가 가지는 이점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 이 10개국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국과 일본이 ASEAN에 다양한 이익과 양보를 제공하고 있다. ASEAN은 이를 이용한 약자의 외교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확보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은 ASEAN과 같은 수적

240. “한·태정상, 특별정상회의 공동회견 문답,” 『연합뉴스』, 2009년 6월 2일.

우위를 누릴 수도 없고, 중국, 일본과 같이 그 자체로 대국으로서 지역 협력에서 상당한 무게를 차지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한국에게 위협적인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의심과 두려움을 가진 ASEAN 국가들이 바로 한국과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상이다. 중국, 일본, ASEAN의 삼각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ASEAN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한국은 ASEAN의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위협적이지 않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할 수 없는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므로 훨씬 큰 중국이나 일본 보다 덜 위협적으로 생각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 일본과 중국 역시 중국, 일본 중 어느 한 국가가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주도권을 쥐는 것 보다는 ASEAN이나 한국이 지역협력을 이끌고 갈 때 큰 반발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주 강대국도 아니고 ASEAN 개별 국가처럼 소국도 아닌 한국이 가진 이런 위치는 한국에게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ASEAN 국가와의 전략적 연대를 통해 누구에게도 위협적이지 않은 중립적 지역협력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²⁴¹

물론 ASEAN+3 지역협력의 심화와 ASEAN+3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동아시아 공동체가 천명하는 비전은 3Ps(Peace, Prosperity, Progress)에 기반을 둔 위계가 없이 모든 국가들이 수평적이고 다자 주의적 관계를 맺는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²⁴¹ 이런 전략적 제휴에 관한 아이디어는 단지 한국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며,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대해서 관찰하는 ASEAN의 학자들 그리고 일부 정부에서도 공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Edy Prasetyono, "Next Steps in ASEAN-Korea Rel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Ho Khai Leong (ed.), *ASEAN-Korea Relations: Security, Trade and Community Building*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007).

현실적으로 이런 비전으로 나가기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역내 강대국들의 이기적 행위를 제어하고 공동체의 비전에 걸맞은 행동을 할 수 있을 때 까지 역내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한 과도기를 지날 수밖에 없다.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을 제어하고 이들을 동아시아 공동체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과 ASEAN이 전략적 연대를 하여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이들을 제어할 수 있는 견제자(Casting Vote or Veto Power), 양자 사이의 심각한 충돌을 중간에서 중재할 수 있는 조정자(Coordinator), ASEAN 국가들을 이끌고 중국과 일본처럼 역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주도자(Leader)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한-ASEAN 정치·안보 협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은 초국가적 문제에 관한 협력이다. 이 사안은 지금 현재 협력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지만 향후 더욱 발전시켜 나갈 소지가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남아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긴급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통합의 과제가 어느 정도 실현된 1990년대 중반 이후 초국가적 문제, 인간 안보의 문제가 이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를 반영이나 하듯 ASEAN 차원의 국가 간 협력은 물론이고, 동아시아 차원의 국가 간 협력에서도 이런 초국가적 문제의 공동의 해결 모색이라는 이슈가 최근 들어 부쩍 많아지고 어느새 논의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이런 초국가적 문제에 대한 강조는 동아시아지역 협력차원에도 투영되었다. 2007년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ASEAN+3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관한 실행계획(Work Plan 2007~2017년)을 보면 전통적인 정치·안보 협력에 이어 반테러에 관한 사항, 해상 안전에 관한 협력, 그리고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범죄에 관한 사항들

이 경제·금융 협력보다 앞서 주요 협력사항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환경, 질병 등에 대처하는 보건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재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협력 등이 주요한 협력의제로 상정되어 있다.

ASEAN 지역의 초국가적인 문제는 한국의 이익과도 관련이 있다. 동아시아지역 협력이 심화될수록 ASEAN 국가들이 가진 문제들이 보다 많이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테이블에 올라올 것이다. 지역협력에 참여하는 이상 이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이 더 이상 동북아에 있는 한국이 동남아라는 다른 지역의 문제를 바라보듯 여유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다. 한국도 직접 참여하여 이 과제들의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들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은 이미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이슈들이 부상한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이고, 따라서 한국도 ASEAN 국가들의 초국가적 인간안보 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한다면 이미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제대국에 선점된 경제적 원조와 같은 부문과 달리 한국이 ASEAN 지원에서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초국가적 인간안보의 문제이다.

나. 경제개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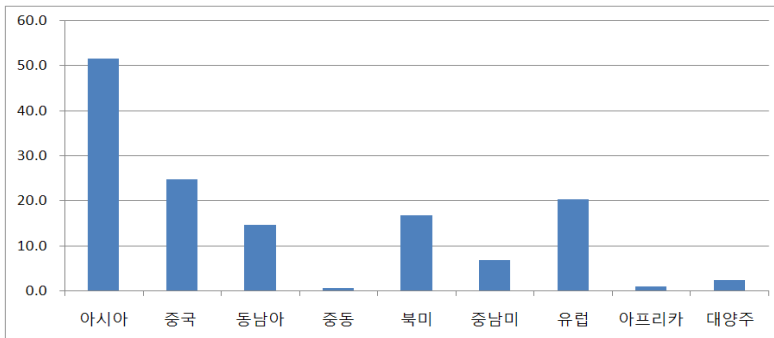
지난 40년간 꾸준히 발전되어온 ASEAN이라는 지역기구는 ASEAN 자유무역지대(ASEAN Free Trade Area, AFTA)의 실현 등 최근 경제 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의 경제 통합은 거의 6억에 달하는 인구와 GDP 1조의 통합된 시장을 의미한다. 또 동남아는 원유, 천연가스, 고무, 목재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한국의 주요한 천연자원 도입 시장 역할을 해왔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거리가 가까운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관계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중요한 천연자원 공급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유럽, 중동에서 동북아로 이어지는 해상교역로가 말라카 해협을 지나며 동남아를 관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정학적으로도 동남아는 한국에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이런 ASEAN 국가들의 객관적인 경제적 매력 외에도 한국과 ASEAN 국가의 경제관계는 다른 지역에 견주어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 우선 한국의 해외투자를 보면, 아시아 지역에 대한 해외투자가 전체 투자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동남아에 대한 해외투자도 전체 투자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비중은 북미에 대한 투자와 유사한 수준이고 유럽에 비해서 약간 낮은 수준이다. 동남아는 순위로 중국, 유럽, 북미에 이어 네 번째 중요한 해외투자 대상지역이다(그림 V-1). 해외투자의 건수로 계산하면 ASEAN 국가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는데, 아시아 국가가 전체 건수의 70%를 상회하며, 중국이 전체 건수의 38%, 동남아가 약 20%를 차지한다. 반면, 북미는 19%이고 나머지 지역은 모두 10% 미만이다. 따라서 건수로는 제2위의 투자대상 지역이 된다.

●그림 V-1 2008년 한국의 지역별 해외투자 비율



출처: 수출입은행 Database.

수출입 측면에서 볼 때 ASEAN 10개국의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2008년 수출을 기준으로 볼 때 동남아는 한국의 전체 수출의 11.7%를 흡수하고 있다. 이는 유럽(13.8%)보다는 작지만, 북미(11%)보다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장이다. 더욱이 유럽이 27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ASEAN은 10개국이란 점을 감안하면 ASEAN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진다. 또 대미 수출과 대일 수출은 1990년대 이후 1/3로 줄어들었고, 유럽의 경우 약간 감소추세인 반면, ASEAN은 작지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입의 비율에서 볼 때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특히 2008년에는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체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ASEAN은 9.2%를 차지하는 수입원이다. 또한 2008년 기준으로 무역액 증가율은 유가상승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중동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지역이다.²⁴²

● 표 V-9 한국의 교역규모

(단위: %)

| 구분 | 수출비율 | 수입비율 | 증가율 |
|-------|------|------|------|
| 아시아 | 49.4 | 45.1 | 17.1 |
| ASEAN | 11.4 | 9.2 | 23.6 |
| 중국 | 21.1 | 17.4 | 22.1 |
| 유럽 | 17.7 | 12.1 | 11.9 |
| 북미 | 11.6 | 9.7 | 5.7 |
| 중동 | 6.1 | 23.0 | 50.5 |

출처: 무역협회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²⁴² 이 표에서는 제외된 대양주 증가율에서는 동남아를 앞서지만, 총 무역규모가 다른 지역에 비해 크게 작은 점을 고려하면 ASEAN의 증가율이 보여주는 의미와 대양주의 증가율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차이가 있다.

무역수지의 측면에서도 동남아는 한국이 북미 교역에서 얻는 이익보다 큰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지역이다(<표 V-9> 참조).

또한 2008년 1~9월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동남아지역이 중국에 이어 수출 측면에서 2위에 올라 다른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한국의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한 수출은 739억 달러로 전체의 22.5%를 차지했고 그 다음이 640억 달러를 기록한 동남아 (19.5%)였다. 3위는 455억 달러(13.8%)의 유럽연합, 4위는 349억 달러(10.6%)를 기록한 미국이다.²⁴³ 여타 다른 경제적 지표의 부문에서도 ASEAN 국가들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ASEAN 국가들은 중동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건설 수주 지역이다.

또 2007년 한국에서 제공하는 공적원조(ODA) 수원국 상위 10개국 가운데, 5개국이 동남아 국가들이다. 캄보디아가 3,530만 달러로 이라크에 이어 2위, 인도네시아가 2,880만 달러로 4위, 필리핀과 베트남, 라오스가 각각 2,820만 달러, 2,470만 달러, 1,790만 달러로 5, 6, 7위를 차지한다. 이 중에서 유상원조만을 놓고 볼 때는 캄보디아가 제1위 수원국이 된다.²⁴⁴

이런 실질적인 경제적 교류 외에도 향후 한국과 ASEAN이 경제·개발의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 앞서 언급한 한국의 ODA와 연관 지어 한국은 ASEAN 국가들로부터 한국의 발전경험 전수에 관한 수요가 많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아직 경제적으로 많이 낙후된 CLMV 국가 즉,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²⁴³ 『한겨레』, 2008년 10월 19일.

²⁴⁴ 한국수출입은행, “2007년도 우리나라 ODA 통계 (확정치)의 주요 내용,” <http://www.koreaexim.go.kr/kr/file/311/081112_07.pdf>.

베트남 등의 국가와 아직 ASEAN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지만 지역적으로 동남아에 속하는 동티모르 등은 한국의 발전경험을 전수받고 이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물론 개별 국가의 경제적 상황과 부존자원 등이 상이하므로 이들 국가에서 요구하는 발전의 방향도 다를 수 있지만, 한국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전수받기를 원하는 점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아시아 차원에서 이들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국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험을 전수받기를 원하는 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동북아에서 경제적으로 성장한 국가들 중에서 일본은 이들 국가와 경제규모의 면에서 너무 큰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고 자신들이 따라잡고 싶은 목표로 설정하기에 이들 국가와 경제적 격차가 너무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최근 빠른 발전을 보여 이들 국가에게 모범이 될 수 있고 또한 비교적 성공적으로 공산주의 경제를 탈피한 경험이라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너무 큰 국가이고 따라서 전체 경제규모에 있어서도 너무 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좋은 모범이라고 볼 수 없다. 더불어 중국은 역사적으로 인도차이나 반도에 정치·군사적으로 깊숙이 개입한 경험이 있고 따라서 이들 국가와 역사적 감정이라는 면에서 그리 선호되는 모방상대가 아닐 수 있다.

이에 비해서 한국은 이들이 노력하여 따라 갈 수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비교적 빠른 성장을 보였고, 국토, 인구의 규모 등에서 보다 이들 국가들이 모범으로 삼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역사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은 이들 국가와 직접적인 접촉이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많지 않았고 따라서 중국과 같은 역사 감정 문제가 생길 소지가 별로 없다. 더욱이 최근 한류로 인해서 한국의 발전상과 생활수준이 생생히 전해짐에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큰 원인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들 국가에게 많은 원조와 개발 경험을 전수한 것은 사실이나, 그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보고 따라 배우기에는 체계성이 좀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개발 경험 전수가 필수적이고 이를 통해서 한국의 지역 내 리더십과 연성 권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은 한국과 ASEAN 국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한·ASEAN 관계의 발전을 위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과 일본은 그들의 막강한 경제력을 무기로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예를 들면 중국은 ASEAN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있어서 상당한 양보를 했으며, 일본은 오래전부터 ASEAN 지역 국가들에 많은 원조, 투자를 통해서 ASEAN 국가들로부터 상당한 호감을 얻고 있다. 이런 노력은 국가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차원에서도 이들 국가의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어왔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을 강화하려는 추세는 자국의 경제적 희생이 대외전략에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의 경제위기 속에서 중국이나 일본도 이전과 같이 ASEAN 국가들에게 전적으로 혜택을 주는 경제원조나 경제정책을 펴기 쉽지 않다.

한국은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ASEAN 국가들에 대한 약간의 상징적인 조치와 선언으로 상대적으로 중국과 일본에 비해 ASEAN의 입장

을 이해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 어려울 때 오히려 다가가는 전략이다. 물론 국내경제사정 역시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이나 협력 사업에 대한 지속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앞으로 새로운 지원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한·ASEAN 특별협력기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는 것, ‘한·ASEAN 센터’의 개소를 ASEAN 국가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것, 또 한국의 대외원조의 상당 부분이 ASEAN 국가들에게 향한다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재확인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번 경제위기에서 수출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많은 ASEAN 국가들은 환율과 금융 위기 못지않게 실물경제 특히 수출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보호무역에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역내에서 공고히 하며, 수출위기에 대비하여 역내 시장통합 즉,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의 추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경제위기로 인한 보호무역의 증가 속에 한국이 주장하는 보호무역의 반대, 역내 시장통합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의 주장은 위기 시 한국을 신뢰할 만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국가로 ASEAN 국가들에게 각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이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진행되는 G-20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저발전국으로 구성된 ASEAN 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가교 역할을 잘 해낸다면, 이후 동아시아지역 협력에 있어 한국이 주도적 리더 국가가 되는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다. 사회·문화 분야

이런 경제적 관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회·문화적 교류이다. 이미 동남아에서 시작된 한류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류의 확산은 그로 인한 경제적 수입 못지않게 동남아에서 한국 국가 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미 ASEAN 국가는 한국 속으로 깊이 들어와 있다. 부지불식간에 ASEAN 국가는 한국과 인적교류가 가장 많은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2007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 15위 안에 ASEAN 국가가 7개가 포함된다. 3위인 태국(685,992)명을 비롯하여 필리핀(5위, 445,235명), 베트남(7위, 260,609명), 싱가포르(8위, 212,123명), 캄보디아(12위, 116,295명), 인도네시아(13위, 113,923명), 말레이시아(14위, 105,268명) 등이 15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총 해외 출국자의 20.3%가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한 해에 출국했다.²⁴⁵

또한 <표 V-10>에서 보듯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있어서도 비교적 한국으로 취업이 용이한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하고는 동남아인의 비율이 가장 높아, 전체 외국인 근로자수의 30.5%에 해당하는 12만 4천여 명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²⁴⁶ 이는 물론 합법 노동자로 통계에 집계된 수만을 보여주고 있고, 불법 노동자까지 포함할 경우 ASEAN 국가 출신의 국내 노동자 수는 이 수의 두 배를 훨씬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시민권 등의 방법으로 한국 사회로 편입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²⁴⁵-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미래방향: ASEAN+3과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2008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²⁴⁶- 위의 글.

경우에 해당하지만,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 사회에 유입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사회로 편입되는 사람들이며, 그들에 의해 출생한 2세는 한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외국의 다른 국가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2007년 한 해 통계에 의하면 약 10만여 명의 결혼 이주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중에서 2만 6천여 명 즉, 25%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ASEAN 국가 출신이다.²⁴⁷

●표 V-10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수

| 구분 | 체류자 수 | 비중 | |
|---------|---------|--------|--------|
| 한국계 중국인 | 184,216 | 45% | |
| 동북아 | 27,218 | 10.50% | |
| 동남아 | 베트남 | 37,389 | 30.50% |
| | 필리핀 | 34,262 | |
| | 태국 | 27,968 | |
| | 인도네시아 | 20,588 | |
| | 미얀마 | 2,346 | |
| | 캄보디아 | 2,180 | |
| | 동티모르 | 17 | |
| 남아시아 | 23,924 | 14% | |
| 중앙아시아 | 7,192 | | |
| 오세아니아 | 1,744 | | |
| 북미 | 13,892 | | |
| 러시아 | 1,442 | | |
| 기타 | 10,604 | | |
| 총 계 | 408,915 | 100% | |

출처: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미래방향: ASEAN+3과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2008년도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²⁴⁷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미래방향: ASEAN+3과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한국과 ASEAN 국가와의 관계 발전에 있어 사회·문화 협력은 한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미 한류가 동남아시아에 널리 확대되어 있는 상황이고, 많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문화적 교류의 확대·강화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필수적이기도 하다. 또한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차원에서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ASEAN 국가와 훨씬 더 긴밀한 사회·문화 분야 협력을 지속해왔다. 한 예로 ASEAN의 통계에 따르면 2000~2005년 사이에 ASEAN과 이루어진 문화·정보, 교육 부문의 대학 간 교류, 환경문제, 사회개발, 관광 등의 사회·문화 협력에서 한-ASEAN 간에는 모두 28건의 협력 사업이 진행된 반면, 중국-ASEAN 사이에는 14건, 일본-ASEAN 사이에는 3건의 협력 사업만이 이루어졌다.²⁴⁸ 이런 기존의 추세를 그대로 반영하여 문화교류, 인적교류, 관광, 학술교류 등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한국의 입장에서 ASEAN과 관계를 발전시키고 더욱 공고히 하는데 유리하다.

특히 사회·문화적 교류는 그 파급효과가 사회 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바, ASEAN 국가 전반에서 한국에 대한 위상과 이미지 제고에 다른 분야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인적, 문화적 교류가 만들어 내는 장기적인 효과는 숫자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크며 무엇보다도 직접적인 접촉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국가 간 신뢰구축이라는 사항은 경제·정치·군사적 교류를 통해서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자산이다. 또한 인적 교류를 통한 상호 간의 신뢰구축은 경제, 정치적인 교류와 협력이 만들어내는 양국가 간의 호감에 비해

²⁴⁸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 협력 및 동아시아 공동체: 평가와 과제,”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6).

서 보다 만들기 어렵지만 일단 만들어지면 지속되기 쉽고, 한번 만들어진 이런 신뢰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한 예로 ASEAN 국가의 학생들이 한국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많은 국가에서 이들이 곧 바로 그 사회의 엘리트층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좋은 경험은 이들을 지한파 혹은 친한파로 만들게 되고 따라서 해당 국가의 여론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결국 이런 사회·문화적, 인적 교류는 역내에서 한국의 리더십에 매우 긍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내실화 또는 확대하는 한편, 한국과 ASEAN 국가의 일반 대중들에게 이런 사회·문화 협력의 진행과 성과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ASEAN은 한·ASEAN 특별협력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간 200만 달러 수준으로 총 3,600만 달러가 출연된 이 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한·ASEAN 교류의 활성화에 따라서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기금은 교역, 투자 분야의 교류에도 집행이 되지만, 많은 부분이 관광, 문화, 학술, 환경 교류 등에 투자되어 한·ASEAN간 사회·문화 부문 교류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ASEAN 국가들에게 한국이 이런 특별기금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동시에 ASEAN 측에게도 이 프로그램이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적극 참여, 협조할 것을 주문해야 한다. 또한 ‘한·ASEAN 센터’를 적극 홍보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007년 양해각서 체결 이후 각국의 비준을 거쳐 2008년 말에 비준이 모두 끝나고 2009년부터 ‘한·ASEAN 센터’가 본격적으로 사업의 수행에 들어갔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한·ASEAN 센터’는 무역·투자와 문화·관광의 두 부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2009년 ‘한·ASEAN 센터’의 개소를 국내뿐만 아니라 ASEAN 국가 쪽에도 적극 홍보하고 센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사회·문화적 협력 부문에 있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 개별국가 차원의 관계

우리나라의 ASEAN 관계에서는 지역협력기구로서의 ASEAN에 대한 관계뿐만 아니라, 10개 개별 회원국에 대한 관계도 중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6~7일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분야 주요 협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ASEAN의 중심국이자 비동맹 운동의 지도국이며 APEC, ARF, EAS 등 역내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11번째 교역국으로서 2008년 교역액이 192억 달러에 달하고 우리나라가 33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에 인프라 진출, 산림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 20만ha 조림지 추가 확보 등을 논의하고 G-20 제도화,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제금융문제 협의에 대비한 사전공조를 강화하였다.²⁴⁹

2009년 10월 24일 태국에서 개최되는 제12차 ASEAN+3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이전,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1일 베트남 주석궁에서 응웬 밉 쩌엣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간 공고한 정치·안보 협력체제 구축을 위해 외교·안보 부처 간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²⁴⁹ 청와대, “2009 동아시아 3국 순방.”

ASEAN과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2015년까지 교역액을 200억 달러로 확대, 한국의 베트남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ES)인정, 베트남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와 천연자원 개발에 대한 협력, 한국 정착 베트남 배우자와 근로자의 지원, 문화교류 확대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²⁵⁰

베트남에 이어 캄보디아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10월 22일 캄보디아 외교부에서 훈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을 통한 녹색성장 사업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고, 캄보디아 정부는 우리 진출 기업들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양국 관련기관 간에 조립협력, 광물자원 공동연구, 상공회의소 간 협력, 방송콘텐츠 제작 등과 관련한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고, 「범죄인 인도협정」 체결로 양국간 협력범위가 사범 분야로 확대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²⁵¹

3. 기타 관계

가. 한·호주 관계

한국은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호주와 1961년 수교한 이래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 범세계적 가치를 공유하면서 정치·외교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과 호주 공히,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미국의 지역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고, 양국 모두 통상국가이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중강국(Middle Power)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한국의 대호주 정책기조는 첫째, 중강국 간 외교관계를 유지하면

²⁵⁰ 외교통상부, “한-베트남 정상회담 결과” (2009.10.21).

²⁵¹ 외교통상부, “한-캄보디아 정상회담 결과” (2009.10.2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서 지역 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하는 것이다. 둘째, 안보·협력 관계를 긴밀히 하는 것이다. 호주는 한국전쟁 참전국이며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고 양국은 동아시아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안보 유지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자원외교를 확대하는 것이다. 넷째, 다자관계와 범세계적 문제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양국은 G-20 또는 APEC, ARF, EAS 등을 통해 협력을 논의하고 있고 군축, 환경, 테러, 초국가적 범죄 등 새로운 국제적 이슈뿐만 아니라, 빈곤감소, 전염병 퇴치 등 인간안보(Human Security) 분야에서도 협조를 모색하고 있다. 호주는 한반도의 안정이 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인식하고 있다. 또한 한·호주 고위정책 협의회, 정치군사 협의회 등 기존 정부 간 협의 채널 외에 정부, 민간 지도급 인사를 포함한 1.5 트랙의 안보대화 신설 추진에 관심이 많다. 호주는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우리 정부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과거에는 KEDO 사업에도 참여한 바 있다. 또한 대북 식량지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포기 유도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행동하도록 노력하고 있다.²⁵²

케빈 러드(Kevin Michael Rudd) 호주 총리가 방한하여 2008년 8월 11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통가치를 기반으로 한 양국관계를 평가하고 정치·외교 협력 강화, 경제·통상 협력 확대, 교육·문화 협력 증진 및 인적 교류 확대 문제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북핵문제 및 남북관계와 호주·북한 관계, 동아시아지역 협력,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협력, 기후변화·환경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정상회담

²⁵² 주호주대사관 “양국관계 및 각국정책” <<http://aus-act.mofat.go.kr>> (검색일: 2009.5.6).

결과, 대양주 지역의 핵심우방국인 호주와의 관계가 기존의 경제·통상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안보·국방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으로 지평을 확대하였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호주의 건설적 기여를 확보하였고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호주의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한·호주 FTA 예비협약, 호주 내 한국어, 한국학 교육기회 및 유학생 상호교류 확대를 통한 교육·문화 협력 증진 및 양국간 인적교류의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²⁵³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3월 4~5일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분야 주요 협력국인 호주를 대상으로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한·호주 정상회담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 및 북핵문제 등을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으며 에너지·자원 협력 증진을 도모하고 탄소저감 분야 협력 확대, 기후변화 대응 공동연구 등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결과 에너지자원 인프라투자, 개발, 탐사 등에 대한 다수의 MOU 체결로 한·호주 간 에너지협력이 제도화되었다. 특히 호주 맥커리사와 우리은행은 한국의 인프라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총 10억 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에 합의함으로써 호주 측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또한 G-20 제도화, 국제금융체제 개편 등 주요 국제 금융문제 협의에 대비한 사전 공조를 강화하였고 호주의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호주는 금융안정화포럼(FSF)의 회원국으로 우리의 FSF 가입을 지원하기로 하였다.²⁵⁴ 8월 31~9월

²⁵³ 청와대, “호주총리 방문”; 청와대, “한-호주정상, FTA 예비협약 개최합의” (2008.8.11).

²⁵⁴ 청와대, “2009 동아시아 3국 순방.”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4일에는 한·호주 FTA 제2차 협상이 개최되었다. 이어 사이먼 크린(Simon Crean) 호주통상장관이 방한하여 10월 28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진행 중인 FTA 협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G-20 정상회의 및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도하개발아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 협상 등 다차원의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²⁵⁵

교역면에서 한국은 호주의 3위 수출 대상국, 10위 수입 대상국이며 전체 교역기준으로는 일본, 중국, 미국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대호주 교역추이는 <표 V-11>와 같다. 2001년 약 77억 달러에 불과하였던 양국 교역액은 2007년 약 179억 달러로 132%나 증가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도 33억 달러로부터 85억 달러로 158% 증가하였다. 대호주 무역수지 적자 축소를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V-11 한국의 대호주 교역추이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 2001 | 2003 | 2005 | 2007 |
|------|------|---------------|----------------|----------------|
| 수출 | 2.2 | 3.3 | 3.8 | 4.7 |
| 수입 | 5.5 | 5.9 | 9.9 | 13.2 |
| 교역액 | 7.7 | 9.2 (19.5) | 13.7 (48.9) | 17.9 (30.7) |
| 무역수지 | -3.3 | -2.6 | -6.1 | -8.5 |

주: 괄호는 전년대비 증감 %이다.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8* (2008), p. 296.

²⁵⁵- 외교통상부,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개최” (2009.10.27).

나. 한·뉴질랜드 관계

한국과 뉴질랜드는 전통적인 우방국이고 6.25 참전 및 1962년 수교 이래 정치, 외교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정치·경제적으로 APEC 국가들과의 증진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Pacific Cooperation, APEC),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등에서 뉴질랜드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양국은 2006년 12월 ‘21세기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였다. 뉴질랜드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이나 대북 정책에 있어서 우리 입장을 지지하고 있고 유엔 및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하고 있다. 1995년 이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KEDO)에 참여하여 2002년까지 약 450만 뉴질랜드달러 상당을 지원하였고 우리 정부의 대북한 정책을 적극 지지하면서 2001년 3월 26일 북한과 수교하였다. 북핵문제와 관련, 뉴질랜드는 6자회담 과정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헬렌 클라크(Helen Elizabeth Clark) 뉴질랜드 총리가 방한하여 2008년 5월 16일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관계, 지역 및 국제 정세,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을 협의하였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공동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간 핵심 우방국 관계 구축, 경제·통상 분야, 인적 교류 및 문화 분야 등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함으로써 양국간 ‘21세기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북핵 문제의 해결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뉴질랜드의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유도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주요 이민·유학·관광 대상국으로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교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할 수 있게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되었다.²⁵⁶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녹색성장, 에너지·자원 분야 주요 협력국인 뉴질랜드를 방문해 2009년 3월 3일 헨덴 클라크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를 전개하였다. 양국 정상은 바이오에너지·조림사업 협력 등 양국간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며 북한과 아태지역에서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정상회담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기반이 마련되었고, 한국은 뉴질랜드 농업개혁 경험을 전수받고 농업 분야 인적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한·뉴질랜드 간 농업 분야 협력을 증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뉴질랜드 브로드밴드 인프라 구축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였다.²⁵⁷ 한·뉴질랜드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양국 정부는 FTA 제1차 협상을 6월 8~12일 서울에서 그리고 제2차 협상을 9월 14~18일 뉴질랜드 웰링톤에서 각각 개최하였다.²⁵⁸ 제1차 협상 시에는 한·뉴질랜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이 다수의 양국 경제계 인사들의 참석 하에 개최되어 첨단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경제와 녹색기술력을 자랑하는 뉴질랜드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최근 한국의 대뉴질랜드 교역추이는 <표 V-12>와 같다. 2001년 약 10억 1,500만 달러였던 양국 교역액은 2007년 약 18억 7,000만 달러로

²⁵⁶ 청와대, “뉴질랜드 총리 방문.”

²⁵⁷ 청와대, “2009 동아시아 3국 순방.”

²⁵⁸ 주뉴질랜드대사관, “한-뉴질랜드 <http://nzl-wellington.mofat.go.kr> (검색일: 2009.9.21).

84.2%나 증가하였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4억 7,100만 달러로부터 2005년 2억 2,100만 달러로 축소되었다가 다시 2007년 4억 7,200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2008년 신고기준 누계로 한국의 대뉴질랜드 투자는 3억 달러, 뉴질랜드의 대한민국 투자는 3,800만 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V-12 한국의 대뉴질랜드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 2001 | 2003 | 2005 | 2007 |
|------|-------|-------|-------|-------|
| 수출 | 272 | 433 | 670 | 699 |
| 수입 | 743 | 708 | 891 | 1,171 |
| 교역액 | 1,015 | 1,141 | 1,561 | 1,870 |
| 무역수지 | -471 | -275 | -221 | -472 |

출처: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2008* (2008), p. 296.

다. 한·인도 관계

한·인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정치면에서 인도는 기본적으로 비동맹 중립정책을 표방하면서 표면적으로는 남북한과 등거리 외교를 수행하고 있다.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지지하였고, 남북한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평화통일 추진을 적극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한·인도 양국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 국민방문, 2006년 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방한 등 대통령과 총리를 비롯한 주요 지도자들이 상호 방문을 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및 서남아 정세를 포함한 역내 문제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각종 국제무대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과 만모한 싱(Manmohan Singh) 인도 총리는 2008년 7월 일본 도야코에서 G-8 확대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자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우호협력 증진 방안 및 경제·통상 증진 방안, 국제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인도 외교부 지역국장회의는 외교부 실무 국장 간 정례협의 채널로서 한·인도 양국간 실질협력 관계 증진에 유용한 대화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11월 25일에는 우리 외통부 남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인도 외교부 동아시아국장이 서울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고위인사 교류, 경제·통상 협력, 영사 및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등 양국간 현안을 점검하고 지역정세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협의하였다.²⁵⁹ 동아시아의 주요 국가이자 국제사회의 위상이 날로 제고되고 있는 양국간 협력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제면에서 한·인도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과 수 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양국간 교역액은 2005년 67억 1,000만 달러, 2008년 155억 5,800만 달러(전년 대비 38.6%)로 급증하고 있다. 2005~2008년 기간 중 교역수지는 한국이 매년 약 20~25억 달러 수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표 V-13> 참조).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한국의 최신 상품을 인도 시장에 판매하는 데에서 나아가, 인도에서 생산한 우수한 제품을 전 세계 시장으로 수출함으로써 인도의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는 한국의 10위 수출국이자 16위 수입국이며, 한국은 인도의 14위 수출국이고 15위 수입국이다.²⁶⁰

259- “G-8 확대정상회의 계기 한-인도 정상회담 개최” (2008.12.22); “한-인도 외교부 지역국장회의 개최,” <<http://ind.mofat.go.kr>> (검색일: 2008.12.22).

260- “한-인도 양국관계,” <<http://ind.mofat.go.kr>> (검색일: 2008.5.30).

●표 V-13 한국의 대인도 교역추이

(단위: 백만 달러, %)

| 구분 | 2004 | 2005 | 2006 | | 2007 | | 2008 | |
|-------|-------|-------|-------|------|--------|------|--------|------|
| | | | 교역액 | 증감율 | 교역액 | 증감율 | 교역액 | 증감율 |
| 총 교역액 | 5,482 | 6,710 | 9,174 | 36.7 | 11,224 | 22.4 | 15,558 | 38.6 |
| 수 출 | 3,632 | 4,598 | 5,533 | 20.3 | 6,600 | 19.3 | 8,977 | 36.0 |
| 수 입 | 1,850 | 2,112 | 3,641 | 72.4 | 4,624 | 27.0 | 6,581 | 42.3 |
| 교역수지 | 1,782 | 2,486 | 1,892 | - | 1,976 | - | 2,396 | - |

출처: “한-인도 양국간 교역현황(2009년 1~7월),” <<http://ind.mofat.go.kr>>.

1990년대 초 인도가 경제 개방을 시작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기업들의 대인도 투자는 부진했지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의 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인도의 저력과 잠재성을 믿고 적극적인 대인도 투자를 감행, 인도 내 각 분야 시장점유율에서 수위를 점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양국의 상호 투자진출은 2004년 인도 타타(Tata) 그룹의 한국 대우자동차 사용차 부문 인수(약 1억 달러 규모)에서 보는 것처럼, 한국의 대인도 투자라는 일방적인 방향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 중이다. 2009년 6월말 현재 한국의 대인도 투자는 1,017건에 15억 5,863만 달러이다.²⁶¹

한국의 대인도 관계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는 8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²⁶²이다. 2006년 3월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타결된 이 협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

²⁶¹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www.koreaexim.go.kr>>.

²⁶²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상품교역, 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 무역협정(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된다. CEPA가 발효되면 인도는 한국의 대인도 수출 중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물품도 한국산으로 인정을 받아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한편 한국은 대인도 수입 중 품목 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이 협정은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도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양국간 CEPA 체결로 인도의 고도성장에 따라 증가세에 있는 양국간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²⁶³

문화면에서도 한·인도 관계는 최근 확대일로에 있다.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2003~2004년 간 양국에서 상대국의 문화, 예술행사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양국 TV, 신문에는 상대국에 관한 특집기사가 수시로 방영·게재되었다. 2006년 한국 TV 드라마(해신, 대장금)의 인도 국영TV 방영 이래 2007년 영화 '괴물' 상영, 2008년 '천년호' 등 영화 7편 상영 등으로 활발한 문화교류와 이에 따른 인적교류가 확대 추세에 있다.²⁶⁴

라. 다자관계

국제관계에서 다자주의(Multilateralism)란 국가 간 또는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개 이상의 국가들이 어떤 원칙, 규범 또는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에 따라 국가정책을 상호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가 복잡해지고, 국가 간 양자주의(Bilateralism)

²⁶³ “한-인도 CEPA 협정 정식 서명” <<http://ind.mofat.go.kr>> (검색일: 2009.8.6).

²⁶⁴ “한-인도 양국관계(2008년 5월)” <<http://ind.mofat.go.kr>> (검색일: 2008.5.30).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가 등장한 현 국제 사회에서는 다자주의의 역할과 중요성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정례적인 3자 협력은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있고, 다자간 협력은 아태경제협력체(APEC),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3 정상회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이 있다.

먼저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ASEAN+3(한·중·일) 정상회의 시 일본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의 제의로 최초로 개최된 이후 정례화 되었다.

2003년에는 ‘한·중·일 협력에 관한 3국 정상 공동선언’, 2004년에는 이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행동전략’이 각각 채택되었고 2007년에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별도 개최가 합의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 및 아소 일본 총리는 2008년 12월 13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3국 별도의 제1차 정상회담을 열고 3국 현안과 세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3국간 협력에 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고 ‘한·중·일 3국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세계 금융위기 극복, 지역협력체 발전에 기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포괄적 협력 추구이다.

또한 3국 정상은 구체적 실천 과제들을 담은 ‘국제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한·중·일 3국 협력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을 채택하였다.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의는 최초의 별도 정상회의로 향후 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²⁶⁵ 제2차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중국 베이징에서 이명박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 간에 2009년 10월 10일 개최되었다. 3국 정상은 한·중·일 협력, 북핵문제, 국제 경제 및 금융상황, 기후변화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교환을 하고 1999년 최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이후 3국 협력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담은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또한 3국이 경제성장과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도 채택하였다. 특히, 3국 정상들은 이날 ‘한·중·일 협력 사이버사무국’²⁶⁶을 개설하고 대학 간 교류 활성화 및 청년예술가 대화제 설립을 추진키로 하였다. 3국의 경제인들이 교역·투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제1차 경제정상회담(Business Summit)을 개최하였고 항공안전 분야의 협력 강화, 수자원 관리방안 협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체 신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 국제적 금융·경제위기 대응,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하였다.²⁶⁷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는 회원국 간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고 역내 지속적 경제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아태지역 경제공동체를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1989년 호주 캔버라에서 12개국 간의 각료회의로 출범했으며,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총 21개국이 가입해 있고, 한국은 1989년

²⁶⁵ 청와대, “한·중·일 정상회담 결과”; 정형곤 외,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8, No. 47 (2008. 12.15).

²⁶⁶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 홈페이지는 <<http://www.tccs.asia>>이다.

²⁶⁷ 청와대,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과” (검색일: 2009.10.10).

APEC 출범 시, 12개 창설 회원국 중 하나로서 APEC에 참가했다. APEC은 전 세계 GDP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다. 2005년에는 한국에서 제13차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2008년 11월 22~23일 개최된 제16차 페루 APEC 정상회의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²⁶⁸ 협상의 조속한 완결을 위해 2008년 내 방안들의 합의 촉구와 G-20의 ‘새로운 무역장벽 도입 금지’(Stand-Still) 합의결정 지지 확인 유도 등 자유무역 촉진, 지역경제통합 촉진문제를 협의하였다. 한국은 ‘저탄소 녹색 성장’ 전략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하고 대한국 투자 확대를 모색하였다.²⁶⁹ 제17차 APEC 정상회의는 2009년 11월 12~19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아세안 지역 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은 아태지역 26개 국가 및 EU 의장국 등 총 27개국(ASEAN 10개국, ASEAN 대화상대국 10개국, 기타 7개국)²⁷⁰ 외무장관이 참석하는 아태지역 내 유일한 정부 간 정치·안보 협의체이다. 1992년 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4차 ASEAN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ASEAN 확대외무장관 회의(PMC)의 틀을 활용하여 ASEAN과 역외 국가들 간 정치·안보 대화를 증진키로 합의하였다. 1994년부터 PMC와 병행하여 아태 지역 정치 및 안보협력 문제를 협의하는 ARF를 출범시켰다. 역내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증진, 비전통적 안보문제 대처, ARF 발전방안

²⁶⁸.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4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출범한 새로운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상품 위주로 범위가 제한된 기존 우루과이라운드(UR)와는 달리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을 포괄하고 이행 강제력도 높다.

²⁶⁹. 청와대, “G-20, APEC 정상외교 성과.”

²⁷⁰. ASEAN 대화상대 10개국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EU의장국이고, 기타 7개국은 파푸아뉴기니, 몽골, 북한, 파키스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등을 협의하고 한반도 정세, 북한 핵문제 등 국제 및 지역안보 정세를 논의한다. 북한은 23번째 회원국으로 2000년 7월 제7차 ARF 외교장관회의부터 참가하고 있다. 매년 7~8월 중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ARF 외교장관회의가 ASEAN 의장국에서 개최된다.²⁷¹ 회의운영 체제는 외교장관회의, 고위관리회의(SOM), 4개 분야 회기간회의(ISC: 대테러·초국가범죄, 재난구호, 해양안보, 비확산·군축)이며 매년 개최된다. ARF는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아태지역 안보협력 체로서 한반도 및 아태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7월 24일 싱가포르에서 유명환 외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5차 ARF 외교장관회의가 개최되어 지역 및 국제정세, ARF 내 신뢰구축 및 예방외교 협력, ARF 미래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유명환 장관은 7월 10~12일 중국에서 개최되었던 제6차 6자회담 수석 대표회의 및 7월 2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6자회담 외교장관 비공식 회동 등 한반도 비핵화 관련 진전 상황을 설명하고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추구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참석 타국 장관들은 6자회담의 진전을 평가하고 지속적 발전과 금강산 피격사건의 남북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였다. 또한 유명환 장관은 사이버 테러 대처를 위한 ARF 회원국 전문가 간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였다.²⁷² 2009년 7월 23일 태국 푸켓에서 개최된 제16차 ARF 외교장관회의는 한반도와 미얀마 정세 등 지역 안보정세와 테러를 비롯한 국제 및 지역 안보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명환 외통부장관은 5월 25일 감행된 북한의 핵실험 등 북핵문제와 관련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주최국인

²⁷¹ 외교통상부, “ASEAN+3/EAS/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2008.5.2).

²⁷² 외교통상부, “제15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2008.7.24).

태국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총 39개항의 의장성명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의 주장도 대부분 반영해 논란이 되었다.²⁷³

ASEAN+3(한·중·일) 정상회의는 1997년 12월 ASEAN이 창설 30주년을 계기로 비공식 정상회의에 최초로 3국 정상을 동시에 초청하였으며 이후 정례화 되었다. 지난 10년간 ASEAN+3 체제는 1997~1998년의 역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개 분야의 정부 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역내 가장 진전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2007년 ASEAN+3 체제 출범 10주년을 맞아 11월 2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제2차 동아시아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이 성명은 지난 10년간의 ASEAN+3 협력을 점검하고 향후 10년간(2007~2017년) 지역협력에 있어 ASEAN+3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분야별 협력증진 방향을 제시하였다.²⁷⁴ 2008년 12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12차 ASEAN+3 정상회의는 반정부 시위와 유혈진압이 격화되면서 연기되었다. 마침내 2009년 10월 24일 태국 후아힌에서 개최된 제12차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 정상들은 동아시아지역협력에서 ASEAN의 중심적 역할에 대한 한·중·일 3국의 지지 및 ASEAN과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확고한 협조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정상들은 기후변화·에너지·A 인플루엔자(H1N1) 대응방안, 식량안보와 바이오에너지 문제

273. 의장성명 8항에는 “북한은 미국 사주로 채택된 안보리 결의 1874를 부정하고 전면적으로 거부했다”면서 “북한은 회의에서 현재 악화되고 있는 한반도 상황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산물이라고 밝혔고 6자회담이 이미 끝났다고 말했다”고 적시됐다. “ARF 의장성명 채택.. 北 주장도 반영(종합), 『연합뉴스』, 2009년 7월 23일.

274. 외교통상부, “ASEAN+3/EAS/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2008.5.2).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및 교육 분야 등을 협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포괄적 해결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또한 미안마 정부의 민주화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동아시아지역의 관광 증진을 지지하고 역내 금융감시기구와 아시아 채권신용보증투자기구(CGIM)의 설립을 환영하였으며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동아시아 싱크탱크 네트워크(NEAT)의 기여를 평가하였다.²⁷⁵

아시아-태평양 안보협력이사회(Council for Security Cooperation in the Asia Pacific, CSCAP)는 아태지역 국가의 민간 안보문제연구소 간 비정부차원의 협력기구로서 역내 주요 안보이슈와 국가 간 신뢰구축 및 안보증진에 대한 연구와 정책건의를 통해 정부차원의 안보 협력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학자·관리·전문가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1991~1992년 ‘서울국제포럼,’ ASEAN 각국 민간연구소 단체인 ASEAN-ISIS, 미국의 Pacific Forum/CSIS, ‘일본국제문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아태지역 안보협력에 관한 일련의 회의를 통해 역내 신뢰구축과 안보증진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의 필요성에 합의하였다. 1993년 6월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7차 아태 라운드테이블에서 10개국²⁷⁶이 CSCAP 창립에 대한 쿠알라룸푸르 성명을 채택하였다. 1994년 러시아와 북한, 1996년 중국과 베트남, 1998년 EU, 2000년 인도, 캄보디아 등이 가입하여 정회원이 21개국이다. 총회는 2년마다 개최되며, 6개 연구그룹(Study Groups)이 구성되어 소관 분야별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개 연구그룹은 아태지역 해양안보

²⁷⁵- 청와대, “제12차 ASEAN+3 정상회의 의장성명” (2009.10.24).

²⁷⁶- 한국, 미국,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호주, 말레이시아, 캐나다이다.

협력, WMD 확산방지, 동북아지역 다자안보협력, 인신매매, 역내 평화유지 및 반테러 국제공조이다.²⁷⁷ 2009년 7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WMD 확산방지 연구그룹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제2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1874호 결의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스커드 미사일 7기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과 관련 유엔 결의안을 거부하는 북한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제를 촉구하였다.²⁷⁸ 제7차 CSCAP 총회는 11월 16~1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아태 안보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회원국들은 세계 금융 위기의 지역안보에 대한 시사점, 지역안보구조, 아태지역에서 해군력 증강, 군축과 군비통제, 동남아의 정치적 도전과 전망, 동북아의 긴장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²⁷⁹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는 기존 ASEAN+3 회원국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여 2005년에 출범하였고 역내 전략적, 정치적 현안에 대해 각국 정상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정책대화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에너지, 금융, 교육, 재해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변하는 역내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다. EAS가 실질 협력 분야로 논의의 폭을 확대해 감에 따라 기존 ASEAN+3 체제와의 기능 중복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정립 문제가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주요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²⁸⁰ 이러한 배경에서 2008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AS 고위관리회의에서는 제3차 EAS 후속조치 및 EAS 미래방향에 대해

277- 외교통상부,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개요”; “CSCAP-About us,” <<http://www.cscap.org>>.

278- “[세상읽기] 北의 ‘계산된’ 무리수,” 『매일경제』, 2009년 7월 8일.

279- “7th CSCAP General Conference,” <<http://www.cscap.org>>.

280- 외교통상부, “ASEAN+3/EAS/ARF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2008.5.2).

협약하였고 동아시아 협력 증진을 위한 EAS의 역할과 ASEAN+3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재난대비, 조류인플루엔자, 교육, 에너지 등 EAS 협력 분야에 대한 한국의 후속 조치 등을 소개하였다. 2009년 10월 25일 태국 차암-후아헌에서 개최된 제4차 EAS 정상회의에서는 정상들이 기후변화, 경제·금융위기, 재난관리 등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개도국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인정, 역내 기후변화 대응 협력,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강화, 역내 재난관리 협력 필요성과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확대 등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참석 정상들은 지역의 평화·안정과 세계 비확산 체제의 수호를 위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지속적 이행과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²⁸¹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Pacific, ESCAP)는 유엔사무국의 아태지역 지부로 1947년 창설되어 현재 53개 정회원국과 9개 준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태국가 이 외에 프랑스, 네델란드, 영국 및 미국 등도 포함된다. 관할 인구와 지역면에서 유엔의 5개 지역위원회 중 가장 큰 위원회로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활동 보고를 하며, 지역적 초점은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개발, 무역, 인권 프로그램을 통한 세계화 관리이다.²⁸² 한국은 1954년 4월, 북한은 1991년 11월 정회원국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는 ESCAP 기여기금인 한국-에스캡 협력기금(KECF)을 통해 아시아육상교통망 건설 사업의 컨테이너 운송 시범

281- 청와대, “제4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결과” (2009.10.25).

282- <<http://unescap.org>>.

사업, 무역박람회 참가지원 사업 등 아태 역내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다. ESCAP이 기금을 운용하며 한국은 매년 연례회의시 사업선정, 실적평가들을 통해 기금운용 내용을 조정 감독하는데 매년 40~50만 달러를 기여하고 있다.²⁸³ 2009년 3월 방콕에서 열린 제65차 ESCAP 정기총회는 천년개발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시스템 점검과 녹색성장을 주제로 열리는 2010년 5월 ESCAP 총회를 인천에서 열기로 확정했다.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해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북한 등 6개국을 관할하는 ‘ESCAP 동북아시아사무소’를 인천에 유치하는데 성공해 2010년 1월 문을 연다.

동북아시아 협력대화(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NEACD)는 비정부 차원(Track 2) 동북아시아의 안보대화로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주관하고 있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정부 관리와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993년 이래로 7~8개월 간격으로 5개국을 순환하면서 개최되고 있다. 북한은 준비회의에는 참석하였으나 본 회의에는 계속 불참하다가 2003년부터 참석하고 있다. 주요 논의사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정세에 대한 각국 평가 및 의견교환, 정부 간 다자안보협력대화 출범의 필요성 등이다. 또한 상호신뢰조치, 국가 간 원칙, 국방 정보보유, 인터넷 활용에 대한 별도의 실무회의가 개최되고 있다.²⁸⁴ 제19차 NEACD는 관련국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2008년 11월 17~18일 베이징에서 개최되었다. 참가국들은 동북아 안보에 대한 시각을 각각 발표하고 동북아에서 안보관계를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한편,

²⁸³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 (2007.12.12).

²⁸⁴ University of California IGCC, “The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http://igcc.ucsd.edu/regions/asia_pacific/neacdddefault.php>.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미국 신정부 하에서 동북아정책을 전망하였다. 이 당시 북핵 불능화 조치 중 검증문제를 둘러싸고 북한과 미국 등 간의 참여한 대립이 있었다.²⁸⁵ 제20차 NEACD는 2009년 10월 26~27일 샌디에이고에서 개최되었고 동북아 안보질서의 상황, 세계금융·경제위기의 동북아에 대한 시사점 및 다자·양자 간 신뢰증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성 김(Sung Kim) 미국 6자회담 대표와 리근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 등 북핵 6자회담 관련자들은 6자회담 재개를 모색하기 위한 비공식 대화를 가졌으나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²⁸⁶ 허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취지와 의미에 대해 설명하였다.

²⁸⁵- University of California IGCC,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19,” <http://igcc.ucsd.edu/regions/asia_pacific/NEACD19.php>.

²⁸⁶- “6자회담국 관료, 회담재개 모색,” 『연합뉴스』, 2009년 10월 30일; “20th Nor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http://igcc.ucsd.edu>>.

VI. 한국·동아시아국가 관계 평가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1. 협력 촉진요인

앞 장에서 분석된 한국·동아시아국가 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거나 향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은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 추세,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 한·미관계 정상화, 신아시아외교 추진, 다자관계의 활성화 등인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이나 유로지역보다 훨씬 빠른 회복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동아시아 경제는 향후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들의 협력관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제Ⅲ장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2008년 9월의 세계경제 위기는 구조적인 원인과 직접적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야기되었다. 구조적인 원인은 세계경제에서 금융 부문의 비정상적인 급성장에 따른 금융체제의 불안정과 국제유동성 확대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2007년 초 발발한 미국의 ‘비우량 주택 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사태이다. 세계경제 위기가 초기에는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전례 없는 거시경제와 금융 정책 지원으로 2009년 하반기부터 안정되고 있다. IMF에 의하면 세계 경제는 아시아 경제가 견실한 성과를 내고 전 세계적으로 미약하나마 경기가 회복되거나 안정세를 보이면서 다시 성장하고 있다. 소매 판매의 점진적인 안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보다 견고해진 주택시장 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²⁸⁷ 이에 따라서 세계경제(GDP) 성장률이 2009년 -1.1%에서 2010년에는 3.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회복 추세는 미국이나

²⁸⁷ KDI, “국내외 언론동향: IMF, 세계경제 전망 상향조정,” <<http://epic.kdi.re.kr>> (검색일: 2009.10.5).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유로지역보다 훨씬 빠르다. 미국은 2009년 -2.7%, 2010년 1.5% 그리고 유로지역은 2009년 -4.2%, 2010년 0.3%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2009년 8.5%, 2010년 9.0% 그리고 아시아신흥공업국(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은 2009년 -2.4%, 2010년 3.6%의 경제성장률이 전망된다.²⁸⁸ 한국 경제의 회복 속도는 선진국과 중국, 인도 등 주요 신흥국이 참여하는 경제협의체인 G-20(주요 20개국) 회원국 중 6위에 속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의 2009년 2분기 GDP 성장률은 2.6%로 같은 기간 G-20 회원국 평균성장률 0.8%의 세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중국(7.9%), 인도(6.1%), 인도네시아(6.0%), 터키(2.7%)가 한국보다 앞섰다.²⁸⁹ 이와 같이 세계의 평균성장률을 훨씬 능가하는 동아시아국가들의 경제 회복 추세는 한국이 이 국가들과 경협뿐만 아니라, 정치·안보·문화 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둘째,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어 왔던 기존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는 한국이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입지를 확대해주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간 역학구도는 1996년 4월 미·일 신안보체제와 중·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형성을 계기로 ‘미·일 대 중·러’의 견제 관계로 나타나게 되었다. 1996년 중·러·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간 발족된 상하이 5개국회의는 우즈베키스탄이 가입하여 2001년 ‘상하이협력기구’(SCO)로 제도화되었다. 반면 미국은 북한 등 불량국가들로부터 안보를 확보하고 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와 2004년 7월 미사일방어(MD) 협정을 체결하였다.

²⁸⁸- 본문 p. 28의 <표 III-1> 주요국의 2009~2010년도 경제성장률(GDP) 전망 참조.

²⁸⁹- 『조선일보』, 2009년 10월 5일.

이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간 역학구도는 ‘미·일·호주 대 중·러·SCO’의 견제 관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이러한 강대국간 역학구도는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집권 및 9월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주의 외교정책을 수행했던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군사력·경제력 중심의 하드파워(Hard Power)와 문화·가치·아이디어 중심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접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 외교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대중 및 대러 관계에서는 갈등이나 견제 면보다는 협력의 면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이전 자민당 정부의 대미 외교를 종속적 외교로 평가하고 미국과의 대등한 협력외교, 미·일동맹과 아시아 중시정책의 병행을 주장하면서 미·일 동맹을 포괄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그는 재일동포의 지방참정권 허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²⁹⁰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 신정부의 대외정책 변화는 동아시아에서 강대국간 기존 역학구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아시아 강대국 간의 갈등과 견제 면이 축소되고 협력과 대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외교정책의 폭도 넓어지고 있다. 2008년 12월 13일 개최된 후쿠오카 제1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2009년 10월 10일 개최된 베이징 제2차 3국 정상회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며, 미국은 우리의 통일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290. 『조선일보』, 2009년 11월 4일.

할 국가이다. 우리의 과거 진보정부와 미국은 대북정책과 한·미동맹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갈등을 겪었으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함께 한·미관계는 정상화되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한·미관계를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전략동맹을 구축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의 가치와 신뢰에 기반을 두고 안보협력을 넘어선 포괄적 협력동맹을 지향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 17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상황에 대비한 한국군 주도 하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2008년 8월과 2009년 8월 실시하였고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또한 북한체제 불안정 가능성을 고려한 5개 시나리오 행동계획을 마련하였고,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에 대한 핵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제공 등 미국의 대한국 방위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4월 19일 부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을 합의하였고 2009년 6월 16일 오바마 대통령과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한 차원 더 높게 구체화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을 선언하였다. 이를 통해 동맹을 군사·안보 위주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대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동북아 및 세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국이 미국 무기를 구매할 경우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에서 NATO나 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2008년 11월 17일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어 한국 국민은 관광과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무비자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 한·미 양국은 청소년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양국이 2007년 6월 30일 합의한 FTA의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나,

한·미 FTA가 양국 의회 비준동의를 얻어 발효될 경우 양국간 무역과 투자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안보차원에서도 한·미동맹을 포괄적으로 확대·강화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넷째, 이명박 정부가 동남아시아, 대양주, 인도에 대한 관계를 확대 하되 대상국별로 맞춤형 접근을 꾀하는 신아시아외교를 추진하고 있어 미·일·중·러 4국 이외의 동아시아국가들에 대한 관계가 심화·강화되고 있다. 한국은 대ASEAN 관계에서 이전에는 주변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 6월 1~2일 제주 한·ASEAN 특별정상회의와 10월 24일 태국 차암-후아한 제12차·ASEAN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대ASEAN 관계의 동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과 ASEAN 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지난 시간동안 꾸준히 발전해왔고, 특히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시작 이후 큰 폭으로 전진해 왔다. 이는 개별 국가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ASEAN이라는 지역기구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ASEAN은 한국과 불가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 ASEAN 사이의 2004년 ‘포괄적 동반자 협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인정되었다. 2009년 6월 처음으로 한·ASEAN 특별정상회의가 열려 국내외에 한국과 ASEAN의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동시에 향후 한·ASEAN 관계를 한층 긴밀한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이 ASEAN의 대화상대국 지위를 획득한지 20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이 정상회의와 한국 정부가 밝힌 신아시아외교라는 외교정책 기조를 발판삼아 한·ASEAN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8년 5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와 8월 캐빈 러드 호주 총리의 방한을 통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2009년 3월 이명박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대통령의 뉴질랜드와 호주에 대한 경제살리기 세일즈 외교를 통해 양국에 대한 협력 네트워크가 강화되었다. 또한 대체에너지·에너지 정책·기후변화·녹색성장 등에 대한 정보교환과 공동연구 등에 합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한국은 뉴질랜드 농업개혁 경험 전수·농업 분야 인적 교류 활성화 등을 통해 뉴질랜드와는 농업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를, 그리고 에너지자원 인프라투자·개발·탐사 등에 대한 다수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호주와는 에너지협력의 제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양국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조체제가 구축되었으며, FTA 협상이 시작됨으로써 타결과 비준 시 교역 확대가 전망된다.

최근 한국·인도 관계의 비약적인 발전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 21세기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이 될 브릭스(BRICs)의 일원인 인도와 선진경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한국의 자국 성장과 도약을 위한 상호 필요성, 양질의 노동력 및 첨단 소프트웨어 기술 등을 보유하고 있는 인도와 이동통신·가전·자동차·철강·건설·조선 등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는 한국의 상호 보완성 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9년 1월 1일부로 한·인도 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의 발효로 우리 기업들이 12억 인구의 인도 시장에 대한 중국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등 한국의 수출 잠재력이 큰 품목이 개방 대상에 포함되고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최근 연 20% 이상 증가해온 대인도 수출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동아시아에서 3자 및 다자관계의 활성화가 한국의 역내 국가들에 대한 관계를 확대·강화시키고 있다. 2008년 12월 개최된 후쿠

오카 제1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2009년 10월의 베이징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만의 별도 정상회의로 회담 정례화를 통해 동북아 역내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향후 3국간 경제협력을 위한 양자 또는 3자간 협력체제가 보다 강화되고 장기적으로는 통합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동아시아에는 본문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아태경제협력체(APEC), ASEAN 지역안보포럼(ARF), ASEAN+3 정상회의, 아태안보협력이사회(CSCAP),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아태경제사회이사회(ESCAP), 동북아협력대화(NEACD) 등의 다자간 협력체나 협력기구들이 역동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나 협력기구들은 역내 안정과 평화를 위한 사전 예방을 위하여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환경, 테러, 마약, 전염병 등 다양한 안보영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 협의를 통해 역내 안보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역내 국가 간 안보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공동의 안보정책 과제를 개발하며, 공동의 안보영역이 확대되도록 한다. 그리고 안보의 상호 의존 및 상호 신뢰의 증대를 통하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국가 간 상호 의존과 지역 통합을 촉진·강화시킬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동아시아지역 내 다자간 협력체나 협력기구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한국에서의 회의 개최 등은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 및 상호의존을 심화·촉진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2. 협력 장애요인

앞 장에서 분석된 한국의 동아시아국가 관계 현황을 고려할 때,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협력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들은 한·미동맹에 대한 중·리의 부정적 시각, 일본과의 역사 마찰, 한·중 간 상호 이해와 신뢰 부족, 러시아의 상대적 홀대 인식, ASEAN의 특수성과 우리의 경제이익 우선 정책,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 인도의 미진한 투자 환경, 다자간 협력의 한계성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한·미동맹에 대한 중·리의 부정적인 시각은 우리 정부의 대중·대러 안보·군사 관계 확대뿐만 아니라, 대북정책 수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온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매우 중요한 안보·군사적 요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08년 5월 27일 한·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로서, “시대가 변하고 동북아 각국 상황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냉전시기의 이른바 군사동맹으로는 역내에 닥친 안보 문제를 처리할 수 없다”²⁹¹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러시아 정부도 한·미동맹을 ‘냉전 산물의 폐쇄된 군사동맹’²⁹²으로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러시아의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한·미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 또는 체제전환 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리의 상기와 같은 시각은 한·중과 한·러 안보·군사 관계 확대를 제약하고 있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291- “친강 ‘북중 우호조약은 우호협력 위한 것,’” 『연합뉴스』, 2008년 5월 29일.

29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The Asia Pacific Dimension of Russian Foreign Policy: Unity of Bilateral Relations and Multilateral Diplomacy” (2008.12.28), p. 1.

개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노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시 유엔 안보리는 1718호 결의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결의안 채택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중·러의 반대로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5월 25일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 1874호 결의에 따른 유엔제재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중·러는 개별국가 차원의 제재는 가하지 않고 있다.

둘째, 한·일관계의 발전에서 가장 큰 장애요인은 역사문제 마찰이다. 한·일 간 역사 마찰의 발생 원인은 양측에 공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일본 측의 원인은 한·일관계에서 과거사 문제가 갖는 이슈의 중요성이나 민감성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무관심·무신경한데서 찾을 수 있는 반면, 한국 측은 지나치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민하게 반응하고 과잉 대응하는데서 찾을 수 있다.²⁹³ 과거사 문제나 독도 관련 움직임이 한국의 대일관계나 대일정서에 얼마나 치명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과연 일본이 어느 정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은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지닌 폭발성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심각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시마네 현의 독도조례 제정이 많은 한국 국민들에게 일제의 한반도 침략의 제1보인 1905년 시마네 현의 독도 강제편입 역사를 연상시켰다는 사실을 아는 일본 지도자는 별로 없었을 것이다.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가 가져올 한·일관계의 파장에 대해 일본 지도층

293. 이원덕, “한·일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pp. 422~429.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은 무신경하거나 무관심한 대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일부 지도자들은 헌법문제, 자위대문제, 대북정책, 중국정책 등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던 일본 내 보수적, 우경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과거사 갈등이나 독도 영유권 마찰을 부채질 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기라도 하듯이 일부 우익단체나 보수적 색채의 미디어는 한국과의 역사 마찰을 선동하고 자극하는 경향도 보인다.

역사 마찰 격화의 한국 측 요인으로는 과잉 대응의 구조와 대중 영합주의를 지적할 수 있다.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문제 등의 과거사 갈등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외교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사나 독도와 관련된 이슈가 일본 측에서 제기되면 한국 측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초강경 대일 정책을 구사는 패턴을 보이게 된다. 정권에 따라서 다소의 강약 차이는 존재하지만 어느 정권도 일본 발 역사 쟁점 혹은 독도 쟁점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초강경 대일 정책은 한·일 간 과거사 쟁점을 상승 작용시키는 정치권-매스컴-여론으로 구성되는 트라이앵글의 존재에 의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다. 즉, 일본에서 과거사 이슈가 발생하여 외교적 쟁점으로 등장하게 되면 한국 국내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쟁적으로 일본에 대한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한다. 매스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한국의 미디어는 거의 예외 없이 일본의 과거사, 독도 도발에 대해서 걱정적으로 비난하고 분개하는 민족주의적 언설과 담론을 경쟁적으로 쏟아 내게 된다. 한편 여론도 반일 정서를 걱정적으로 표출시키며 때로는 일부 국민들은 일본대사관 앞에서 과격한 시위 행동에 나서기도 한다.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를 통해서도 반일정서가 여과 없이 표출되기도 한다.

이러한 트라이앵글의 상호작용에 의해 국민적 여론이 일단 형성되면 어느 정권도 과거사 쟁점에 대해서 강경하고도 단호한 대일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민주화 이후 등장한 정권이 국민여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과거사 쟁점에 대한 대일 정책에 관한 한, 한국 정부가 나름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히 한국에서는 역사쟁점이 대외 정책에서 매우 비중이 크고 우선순위가 높은 이슈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한데 반해, 일본의 경우에는 한국과의 역사쟁점이 상대적으로 매우 가볍고 우선순위가 낮은 정책이슈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셋째, 한·중은 2008년 5월 27일 베이징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였으나, 양국간 상호이해와 신뢰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국가주석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한·중관계는 외교, 안보,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역과 전 세계적 이슈에 대한 긴밀한 협조를 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시기 강화된 한·미관계가 한·중관계를 격상시키는 기회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한·중 양국은 아직 성숙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이를 지향하는 단계에 있으며,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표적인 예로, 한·중 정상회담 기간 동안 ‘한·미동맹은 역사적으로 남겨진 산물’이라는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언은 양국의 상호이해와 신뢰가 여전히 부족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 부족은 각각 자국의 이익과 입장에서 상대방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평가된다. 다시 말해 한국은 한·미관계를 자국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의 안보와 국익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안정적인 중·북관계의 유지를 자국의 국익 상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를 각자 자국의 입장에서 볼 경우 상호 모순이 발생하고 심지어 협력에 장애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로 대북 포용정책을 선호하고 있는 중국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²⁹⁴ 이로 인해 북한 핵문제 및 로켓발사 등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중 간의 긴밀한 협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2009년 4월 북한의 로켓발사체를 인공위성으로 보는지, 미사일로 간주하는 지에 대한 시각과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에 대한 접근에서, 양국은 일정 수준 차이를 보인 바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북한의 로켓발사 행위가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제관례(IMO 및 미·중·러에 사전 통보) 준수를 근거로 정상적인 인공위성 발사로 인식하였고, 북한의 평화적 우주이용권 주장에 암묵적으로 동조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의 2차 핵실험 직후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적극적이었던 한국에 비해 중국은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한 점도 양국 사이의 일정한 간극을 보여주는 예이다. 더욱이 한국의 미국 및 일본과 대북공조 정책에도 불만인 바,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중 협력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긴밀한 의견 교환과 신뢰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양국관계의 토대가 취약한 상태에서 증가된 급속한 교류

²⁹⁴ 중국의 주요 국책기관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국의 대북정책을 압박이나 봉괴 유도 정책으로 오인하거나,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필자의 인터뷰(2009.4.29~30, 5.17~18).

협력은 상대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더욱 증폭시키는 다양한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한국에서의 베이징 올림픽 성화 봉송 시 발생한 물리적 충돌 사건, 올림픽 응원 시 보여준 중국인의 혐한 감정과 이에 대한 한국인 네티즌의 대응,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던 한국인 해경 사망 사건, 도산한 중국 투자 한국기업인의 야반도주 행위 등이 그 예이다. 또한 동북공정을 둘러싼 양국 간의 역사문제가 여전히 잠재되어 있으며, 중국이 국제법이나 인도주의 원칙에 의거 처리하기보다는 북한 체제와 자국 국경지역의 안정을 우선하고 있는 관계로 한국과 이견을 보여 온 탈북자 문제 또한 그러하다.

넷째, 1990년 수교 이후 러시아는 미·일·중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에 의해 상대적으로 홀대를 당하고 있다는 피해의식이 있어 이는 양국 관계의 확대·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한반도와 접경국이며 남북한과의 수교국이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으로부터 소외된 경험을 갖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은 취임하는 해에 미·일·중과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러시아와는 정상회담을 개최하지 않았다. 과거 우리 정부의 이러한 대러 외교정책은 러시아 정부로 하여금 상대적 홀대 인식을 갖게 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 직전 이재오 국회의원 대러 특사로 파견되었으나, 푸틴 대통령 측은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표방한다면 국회위원을 특사로 보낸 것에 대해 격상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재오 특사는 총리급 예우를 받았지만 러시아 정부의 외교 및 대선 캠페인 일정으로 크레믈린을 비운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푸틴 대통령과 그의 후계자인 메드베데프 제1부총리를 만나지 못했다. 이재오 특사 방러 시 및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위한 줍코프 총리의 방한 시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 퇴임일인 5월 7일 이전에 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4월 15~19일 한·미 정상회담과 4월 20~21일 한·일 정상회담 등으로 이행이 불가하여 푸틴 대통령 퇴임 이전의 한·러 정상회담이 무산되었다. 푸틴 대통령은 퇴임 후 실제 총리로서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 중이고 차기 대통령 후보로 다시 거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푸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무산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또한 미·일·중에는 통일부로부터 통일주재관이 파견되고 있으나,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한반도의 운명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가이었고 우리의 통일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국가이다. 러시아는 유독 자국에만 통일주재관이 파견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 정부의 상대적 러시아 홀대로 간주하고 있다.

다섯째, ASEAN만이 갖고 있는 특수성과 우리의 경제이익 우선 정책은 대ASEAN 관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SEAN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조기 출범 문제를 둘러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와의 이견표출 등에서 보듯이 지역협력 문제에 대해 종종 내부의 갈등적 측면을 노출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안별 국가 간 입장 차이는 개별 국가들의 이해관계 득실 또는 역내 리더십 경쟁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ASEAN 내부의 일상적 행태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와 태국을 비롯한 대다수 ASEAN 국가들은 ASEAN+3이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폭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기는 하나, 인도네시아·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들에 의해 EAS의 위상과 장래에 대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ASEAN의 이와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여 ASEAN 10개 회원국 개별국가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 지금까지 다양한 한국의 양자 혹은 다자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왔던 점은 국가이익이란 측면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이익 중에서도 한국과 해당 국가 혹은 국가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또한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큰 관심을 두어왔다. 이러한 접근법은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접근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이 강대국 외교를 넘어서 ASEAN과 같은 개발도상국 및 아직 개발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다양한 국가들과 향후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이 국가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객관적인 위치가 이미 어느 정도 개도국을 넘어서 세계의 10위권을 다투는 경제력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중진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접근법을 이용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 신뢰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된다.

여섯째,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이 한국이 대호주 교역에서 갖고 있는 장애요인이다. 호주는 원거리의 고립된 시장이고 인구가 약 2,060만 명에 불과해 규모가 협소하고, 소비시장이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아들레이드, 퍼스 등 5대 거점시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호주는 다품종 소액소량 수출시장으로 독자적 유통 네트워크 확보가 어려우며, 유통비용이 높아 이윤 창출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또한 호주에서는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 대부분의 공산품이 수입되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기 때문에 각국의 수입품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고, 일반 종합상사의 역할도 매우 제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곱째, 12억 인구나 광활한 국토를 가진 인도가 BRICs의 일국으로 부상하고 있어 한국의 중요한 교역과 투자 대상국이나, 인도의 미진한 투자 환경은 한·인도 간 협력 증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양국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이 2009년 1월 1일부로 발효됨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과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인도에는 아직도 열악한 교통 인프라, 복잡한 행정 절차, 제약적인 노동법, 만성적인 전력 부족, 민영화 반대와 파업 증가, 폭탄테러 발생 증가, 사법 시스템의 후진성 등과 같은 외국투자의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여덟째, 동아시아 역내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의, APEC, ARF, ASEAN+3 정상회의, CSCAP, EAS, ESCAP, NEACD 등 다자간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어 한국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다자간 협력이 안고 있는 한계성은 한국과 다자간 협력체와의 관계 강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2008년 12월 13일의 후쿠오카 제1차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2009년 10월 10일의 베이징 제2차 3국 정상회의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각국 지도부의 정책변화, 3국간 정치체제의 차이, 과거사 문제, 중·일 간 경쟁관계의 장애요인으로 협력 추진의 모멘텀이 약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²⁹⁵ 또한 탈냉전 이후 대안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다자간 안보협력이 주는 혜택은 적지 않으나, 그 한계 또한 인식되어야 한다. 즉, 관련국 간 가치관과 이익의 차이가 크거나, 지역 내 긴장요소가 많을 경우 안보협력이

²⁹⁵- 정형근 외,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p. 1.

어렵게 되는데, 동북아지역이 그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문제해결 또한 협력 도출 과정에서 참여국의 유연성이 필요한데, 일부 국가가 경직된 태도를 보일 경우 오히려 양자적인 노력의 경우보다 어렵거나 비효율적일 수 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양자적 성격인지 지역적 성격인지 불분명할 경우가 있고, 양자적 문제를 선불리 지역안보 차원에서 해결하려 할 경우 문제의 해결을 오히려 지연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다자간 안보협력의 추진과정에서 기존의 양자적 안보 관계를 검토하고, 양자가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VII. 동아시아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상기와 같은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 관련국의 동아시아 인식 및 정책기조, 한국과 동아시아국가 간 관계 현황과 평가에 대한 분석과 고찰을 기초로 우리 정부는 다음과 같이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국가별 세부정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1. 3대 기본방향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 촉진요인의 확대와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역량구축,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을 3대 기본방향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가. 협력 촉진요인의 확대와 협력 장애요인의 제거

본문에서의 분석을 통해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거나 향후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는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 추세,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 한·미관계 정상화, 신아시아외교 추진, 다자관계의 활성화 등이 도출되었다. 또한 한국과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협력과 관계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요인으로는 한·미동맹에 대한 중·러의 부정적 시각, 일본과의 역사 마찰, 한·중 간 상호이해와 신뢰 부족, 러시아의 상대적 홀대 인식, ASEAN의 특수성과 우리의 경제이익 우선 정책,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 인도의 미진한 투자 환경, 다자간 협력의 한계성 등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같은 협력 촉진요인을 확대·강화하고 협력 장애요인을 축소·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협력 촉진요인과 협력 장애요인을 ① 불가피하게 주변 환경으로 주어진 경우, ② 우리 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③ 관련국의 해결 사안으로 우리 정부의 해결 능력 밖에 있는 경우로 구분해(<표 VII-1> 참조)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 표 VII-1 한·동아시아국가 간 협력 촉진요인과 장애요인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결능력별 구분

| 구분 | 협력 촉진요인 | 협력 장애요인 |
|----------------------------------|---|---|
| 불가피하게 주변 환경으로 주어진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경제의 빠른 회복 추세 - 동아시아 역학구도의 변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과의 역사 마찰 - ASEAN의 특수성 - 다자간 협력의 한계성 |
| 우리 정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거나 할 수 있는 경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관계 정상화 - 신아시아외교 추진 - 다자관계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간 상호이해와 신뢰 부족 - 러시아의 상대적 홀대 인식 - ASEAN에 대한 경제이익 우선 정책 |
| 우리 정부의 해결능력 밖에 있는 경우(관련국의 해결 사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동맹에 대한 중·러의 부정적 시각 -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 - 인도의 미진한 투자 환경 |

먼저 세계경제나 동아시아 경제의 상황 및 동아시아 역내 강대국 간 역학구도의 변화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주변 환경으로 주어진 경우이다. 우리 정부는 세계경제 위기가 아직까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계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

하면서 대내외 경제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경제위기에서 가장 신속히 벗어나고 있는 국가들 중 하나임에는 틀림없으나 일부 경제전문가들이 세계경제의 재침체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일·호주 대 중·러·SCO’의 견제라는 기존의 동아시아 역학구도가 2009년 1월 오바마 미국 행정부와 9월 하토야마 일본 민주당 정부의 출범으로 변화되고 있어 그 변화 방향에 대한 면밀 주도한 분석과 전망을 기초로 우리 정부의 대미·대일·대중·대러 외교와 대북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일본과의 역사 마찰, ASEAN의 특수성, 다자간 협력의 한계성 등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력 장애요인들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하려는 기본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정상적 관계로 복원된 한·미관계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과의 양자관계를 지속적으로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다자관계도 계속 활성화해야 한다. 한·중 간 상호이해와 신뢰 부족, 러시아의 상대적 홀대 인식, ASEAN에 대한 경제이익 우선 정책 등의 협력 장애요인은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나 정책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이러한 협력 장애요인을 축소하고 제거하기 위해 관계부처 관료와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정책검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대응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미동맹에 대한 중·러의 부정적 시각, 호주의 고(高) 유통비용, 인도의 미진한 투자 환경 등의 협력 장애요인은 관련국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우리 정부의 해결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협력 장애요인들을 축소·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국들에 사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련국과 함께 문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나.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 역량구축

2009년 현재 건국 61년을 맞는 우리나라는 현대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기간 내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한국을 모든 분야에서 품격을 갖추고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로 발전 시킴으로써 2020년경에는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한다. 여기서 성숙한 세계국가란 “한반도의 범주에 국한된 소극적이고 축소지향적인 외교의 관성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와 국가이익을 세계차원의 공간에서 실정하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인 자세에서 출발한다. 성숙한 세계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한 한반도, 보다 풍요로운 아시아, 보다 정의로운 세계를 추구”²⁹⁶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들 간의 관계 증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은 성숙한 세계국가의 역량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의 기본방향을 안보·경제·문화면에서 다음과 같이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안보면에서, 동아시아국가들이 북핵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북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토록 해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안보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1세기 한·미 전략동맹 구축, 일·중·러 등 주요국 관계 강화,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 ASEAN·호주·뉴질랜드·인도에 대한 신아시아 외교 강화 등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외교를 수행하는 한편, 동아시아국가들

²⁹⁶ 청와대,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의 비전과 전략: 성숙한 세계국가』 (2009.3), p. 12.

에 대한 대외군사협력도 확대해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안보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경제면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동아시아국가들과의 양자·다자 간 경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아시아국가들과 에너지 협력외교를 강화하고 FTA 체결을 다변화하는 포괄적 실리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ASEAN 국가들에 대해 한국이 경제 실익만 추구하는 국가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기여외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을 위해서 안보와 경제 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문화면이다.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해 공유되는 지식·신념·행위의 총체’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와 동아시아국가들 간에는 상이한 역사, 이념, 종교, 민족성 등 때문에 공유되지 못하는 지식·신념·행위들이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역내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축소하는 방안이 청소년·체육·문화 등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우리의 강점인 소프트파워를 강화하여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주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류와 한식을 보다 체계화하여 전 세계에 홍보·보급하는 세계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우호적 통일환경 조성

2010년 10월 3일은 우리와 같은 분단의 길을 걸었던 독일이 역사적인 통일을 달성한지 20주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이후 개선되어 가는듯하던 남북관계는 2006년 이후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 등으로 경색 국면에 처해 있다. 2009년 8월 이후 북한이 미국과 남한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근본적인 전략상의 변화가 아닌 전술적 차원의 변화로 분석된다. 북한이 핵 개발과 위협을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한 간에 진정한 신뢰와 협력 및 평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들여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신고·검증·폐기 과정을 진전시켜야 한다. 북핵이 폐기 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당국 간 대화와 협의 채널을 상설화하여 실질적인 군사신뢰구축 조치와 각종 협력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이 새로운 한반도 평화의 출발점이다. 우리 정부는 안보·군사 분야에서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남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임해 새로운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2008년 8월 이후 노정된 김정일의 건강 악화는 북한 체제의 장래에 대한 전망을 매우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2009년 현재 26세에 불과한 3남 김정은의 권력승계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김정일 사후의 북한 체제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리고 있다. 하나의 견해는 북한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 등을 통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권력승계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하고 체제붕괴 등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후자에 동의하는 전문가들 중 일부는 더 나아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우리는 통일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통일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경제력 축적 등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 통일역량 구축과 함께 중요한 것이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즉 통일기회의 도래 시 한반도 주변 4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반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독은 1949년 정부수립 이후부터 1990년 통일 시까지 주변국과의 관계를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였다. 1949~1969년 집권한 기민·기사당 정부는 친서방 정책을 기조로 군사동맹체인 NATO와 서유럽연합(WEU) 및 경제협력체인 EC와 굳게 결속하였다. 1969~1982년 집권한 사민당 정부는 동방정책을 적극 추진하였으나 서방 우방국과의 관계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 또한 1982년 집권한 기민당의 콜 수상은 미국 등에 대한 친서방정책을 기조로 하되 브란트와 슈미트 총리의 사민당 정부가 이룩한 동방정책의 성과를 계승하는 균형된 정책을 추진하였다. 서독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통일독일의 NATO와 EC에 대한 결속을 약속하는 가운데 통독협상에 임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는 한반도 주변 4국 및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가 우호적인 통일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2. 세부 추진방안

가. 대미국 정책추진 방안

북한은 120만 병력을 유지한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어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연합군의 강력한 방위태세에 힘입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억제되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언제 달성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여 확고한 공동방위 태세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계획대로 실시해 나가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상황에 대비한 합동군사연습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전환 이후 새로운 공동방위체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및 감시·정찰(CAISR) 체계의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키고, 유사시 미 증원전력 가용성 문제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핵우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 즉,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긴밀히 협의해 나가야 한다.²⁹⁷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2차 핵실험을 단행하여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지만 당장 전쟁 수행을 위한 군사적 준비는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은 일단 배제해 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 내부 정세가 불확실

²⁹⁷ 임태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 분야 정책과제,” 『주간 국방논단』 (2009. 9.14).

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급변 사태에 대한 대비책도 보다 구체화되어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은 현재 건강이 회복되어 여전히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이 다시 악화되면 후계구도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 내부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면 핵무기 및 핵물질에 대한 통제를 가장 우려하게 될 것이다.²⁹⁸ 한·미 양국은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는 물론 북한 주민의 대량탈북 사태 등을 고려한 급변사태 대비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는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원칙하에 북한의 군사적 도발 차단, 대량 난민 대처 방안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협력 분야를 구체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이에 대한 일본·중국 등 주변국들의 긍정적인 협력을 유도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 정부에 부과하였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관련된 규제 조항도 한국의 원자력 역량 및 국제적인 원자력 환경 변화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1956년 2월 최초로 미국과 「원자력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한·미 양국 정부는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이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1974년 최종적으로 개정되었지만 재처리와 농축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은 변동이 없었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16기의 경수로와 4기의 중수로를 가동함

298. 마이클 오핸런은 북한이 붕괴할 경우 핵물질의 위치 파악 및 확보, 북한의 질서 회복, 북한 주민에 대한 생필품 제공 등을 미국이 준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Michael E. O'Hanlon,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 (The Brookings Institution, June 9, 2009), <www.brookings.edu/opinions/2009/06_north_korea_ohanlon.aspx?p=1>.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으로써 매년 약 700톤 정도의 사용 후 핵연료가 발생되고 있고, 2008년 말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총 1만 87톤에 달한다.²⁹⁹ 핵폐기물을 재처리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바, 평화적 목적의 재처리와 농축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 한국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투명성을 인정받아야 함은 물론 핵무기 보유를 의미하는 군사적 핵주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님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분단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한·미동맹은 북한의 안보위협 억제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동맹은 군사적 차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정치·경제·사회 관계를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특히 탈냉전 이후 경제적 세계화 및 안보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미동맹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선 동아시아지역 및 세계적 차원의 협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즉,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지역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차원의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다. 공통된 가치관에 기초하여 포괄적·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해나가는 한·미동맹의 협력방식은 양국의 국가이익을 고려한 호혜성을 띠게 될 것이다. 한·미 양국은 역할분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일동맹이 발전되어온 양상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의 실천계획은 일본과 다른 분단국으로서 한국의 안보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립되

²⁹⁹ 문병룡, “한·미 양국 동반자 입장에서 2012년까지 개정 완료,” <online.kofst.or.kr/Board/?acts=BoardPrint&bbid=1078&nums=7156> (검색일: 2009.7.31).

어야 한다. 한·미 양국은 매년 개최되고 있는 국방장관회담과 더불어 외교장관회담을 정례화하여 외교·국방장관급 전략대화를 통하여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조율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한·미 양국의 의회 및 민간단체들 사이의 접촉의 폭을 확대하여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대한 정치·사회적 지지 기반을 더욱 확충해나가야 한다.

한·미동맹은 금융위기·기후변화·에너지문제 등 다양한 범세계적 이슈에 공동 대응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합의한 한·미동맹 공동비전에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국은 2010년 제5차 G-20 정상회의를 한국에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또한 이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G-20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중재자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미 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 국제무대에서 한·미 상호 의존적 동반자 관계 확대는 한·미 FTA 비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공정무역을 증시하고 있는 바, 한국은 미국의 무역관행 및 노동 조건 등에 대해서 보다 세심하게 배려하며 미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해야 한다.

범세계적 차원의 한·미동맹을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국과 경제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미국이 개입되어 있는 국제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라크에서의 명예로운 미군 철수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테러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야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이라크 재건 및 아프가니스탄 치안안정을

I

II

III

IV

V

VI

VII

위한 동맹국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는 동맹국으로서의 부담감, 국내적 여론, 중동국가들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방식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지원문제가 한·미관계의 다른 현안들 즉, 한·미 FTA 및 대북 정책 공조 등에 관해서도 양국간 협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이행되자 최근 미·북 양자회담 및 다자회담에도 참석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만성적인 경제침체와 심각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은 갈수록 강화되는 국제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국 또한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압박만 지속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 수를 늘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북한과의 대화재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미·북 관계 정상화 이후에 핵폐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북대화를 우선시하고 있으나, 미국은 양자대화는 6자회담 틀 내에서 추진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한·미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하에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투 트랙’(Two Track) 대북정책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고 6자회담이 재개되면 ‘9·19 공동선언’ 및 ‘2·13 합의,’ ‘10·3 합의’가 새로운 협상의 시발점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핵폐기 결단을 내리지 않은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⁰⁰

북한은 핵문제의 근본적 해결보다는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협상을 타결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자회담은 재개되어도 북한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고수한다면 다시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향후 6자회담은 북한의 도발적인 행태가 잠복되어 있는 상황에서 완전한 핵폐기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감을 안고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한 핵폐기에 관한 원론적인 합의가 도출될 경우에도 북한은 핵사찰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핵협상은 악순환을 거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준 핵협상 행태는 이러한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따라서 한·미 양국은 6자회담에서 북핵 폐기를 위한 ‘그랜드 바겐’ 협상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즉, 북한이 핵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하면서 동시에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을 모색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긴밀한 정책조율을 통하여 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구체화한 일괄타결 협상전략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참여국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완전한 핵폐기에 합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지속됨을 주지시켜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6자회담의 기본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하한 경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³⁰⁰ “북한의 박길연 외무성 부상이 9월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밝힌 내용,” 『세계일보』, 2009년 9월 30일.

나. 대일본 정책추진 방안

한·일의 역사인식을 둘러싼 차이나 독도 문제에 관한 상반된 입장을 고려할 때 당분간 양국간 역사·독도 마찰의 빈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이러한 마찰을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이나 해법은 단기적으로 볼 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한·일관계에서 독도, 역사 마찰이 격화되면 될수록 실효성 있는 해법이 제시되기는커녕 양국간 국민감정의 충돌만을 초래하여 양국관계 전반에 악영향이 파급되는 사태를 막을 수 없게 될 것은 자명하다. 양국간 역사 마찰의 해결은 결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구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양국 국민의 역사인식의 상위가 역사 마찰의 궁극적인 원인 제공자라고 본다면 결국 마찰의 해결 또한 역사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추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어느 일국이 타국에게 역사인식의 합치를 요구하는 일은 간단치 않다. 성과가 적다고 비판받고 있기는 하나, ‘한·일 역사공동위원회’의 활동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통해서 역사인식의 차이를 서로 확인하고 그를 통해 상호 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은 역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역사 마찰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단기적으로 마련되기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양국간 역사 마찰이 초래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역사 마찰의 해결이 어렵다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 마찰의 관리란, 역사 마찰의 발생을 예방적 조치를 통해서 가능한 한 억제하고, 만약 마찰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마찰이 양국관계에 가져올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을 의미

한다. 물론 이처럼 역사 마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국 최고지도자 간의 암묵적인 합의와 공동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즉, 양국의 지도자 스스로가 역사 마찰로 인해 양국관계가 훼손되고 국민감정이 악화되는 것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확고할 때 역사 마찰을 진정시키기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양국 지도자 간의 신뢰와 그에 기반을 둔 전략적 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역사인식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효율적인 방법은 국가가 전면에서 나서는 것보다는 시민사회나 민간 차원의 학문적 대화나 교류를 통한 해법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역사 문제는 배타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의 논리로 해결되기 보다는 보편적인 가치와 규범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의 논리에 의해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국경을 넘어선 시민사회 간의 연대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역사 마찰의 격화에 의해 양국 시민사회 간, 지방자치 간, 인적교류나 문화교류가 중단되거나 위축되는 일은 심히 우려된다. 장시간의 노력을 통해 마련된 풀뿌리 차원의 교류 협력의 토대가 역사 마찰로 인해 중단되는 사태는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한·일 무역역조 문제는 단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중화학 공업이 일본으로부터 부품, 소재 분야의 수입에 구조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의존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 제고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대폭 촉진시키고 교육 및 산업정책 차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국가적 지원체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한·일

무역불균형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는 부품 소재 산업 분야에서의 일본의 대한국 투자가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일본에게 정부 차원에서 촉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의 산업계가 보유하고 있는 선진 기술이 한국에게도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는 제도적·법적 여건을 조성하고 한·일 기업 간, 혹은 산업 간 기술제휴, 공동개발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데도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EU, NAFTA 등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추세를 감안하면 동아시아지역도 경제적 통합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한·일 양국은 정치적 결단을 통해 과감한 경제통합을 추진함으로써 2억 규모의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중심적 존재로 거듭나는 방향의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 의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선진적인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역, 투자, 금융,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일본이 공히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의 규범과 질서를 창출해야 할 것이다. 한·일 양국의 경제 수준, 규모의 차이로 말미암아 한·일의 경제 제휴가 결과적으로는 양국의 경제적 격차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따라서 한·일의 시장통합은 어느 제로섬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고 그것이 양국의 경제 발전에 공히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청구권 문제 관련, 북한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경제난과 외교적 고립이라는 총체적 위기 속에서 핵, 미사일 개발이라는 위협 수단으로

자신의 생존 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극적인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북한 체제가 새로운 변화를 겪게 된다면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 중 하나로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시나리오는 북한의 개방·개혁 시나리오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김정일이나 그의 후계자들은 중국과 베트남의 경험을 답습하여 점진적으로 개혁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가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해결이 이루고 미·북관계도 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다. 일본이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는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최대한의 성의를 보임으로써 일·북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인다. 이렇게 된다면 일·북 수교 교섭은 급진전되어 수교가 이루어지고 일본은 북한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경제협력 자금(약 50억~100억 달러 추정)을 제공한다. 1960년대 한국이 그러했듯이 만약 북한 당국이 이 일본의 경제협력 자금을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피폐한 북한 경제의 인프라를 재건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북한에게 하나의 역사적 교훈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된다.

둘째의 시나리오는 북한 정권이 체제붕괴에 직면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다. 체제붕괴가 곧바로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으로 수습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북한에서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내전이나 내란이 발생한다면 한국, 미국,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어떤 나라가 주요한 역할을 맡든지 간에, 북한은 관계국들의 공동관리 하에 놓일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배권이 한국에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국가도 부정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하지 못할 것이다.

만약 일·북 간에 재산청구권 문제가 미해결의 상태에서 한반도의 통일이 먼저 도래한다면 북한 지역의 대일 재산, 청구권은 당연히 통일 한국 정부가 계승하게 될 것이다. 한국은 비록 1965년 한·일 조약 체결 당시 일·북 수교를 반대하고 북한의 대일청구권을 부정했지만 이러한 입장은 동서냉전과 남북한 군사대결 구조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나온 정치 논리였다. 그러나 ‘7·7 선언’ 이후 일련의 조치를 통해 한국은 북한을 합법 정권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또 한국은 북한이 북한 지역의 대일 청구권 요구를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왔다. 통일한국의 대일 청구권 주장은 국제법적으로도 보더라도 보더라도 정당하고 타당한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북한이 한국 정부에 의해 흡수통일 된다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법적 권리와 의무가 통일한국 정부에 의해 그대로 승계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통일한국이 북한 분의 미해결 청구권 자금을 일본으로 받게 된다면 자금의 일부는 식민지 피해자 보상에 쓰이겠지만 상당부분의 자금은 북한 경제를 재건하는 데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대중국 정책추진 방안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한 문제, 에너지자원·기후·환경 등 역내 안보 및 경제협력 그리고 역사인식, 한·중 FTA, 탈북자와 인권, 무역마찰 등 양국간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중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과 중국의 실용

외교와 ‘조화(和譜)’외교가 상호 조응하는 ‘상생’(Win-Win)의 전략을 주도적이고 창조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중관계, 한·미관계, 중·미관계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상호 촉진적인 관계로 설정되고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한·중 협력이 긴밀해질수록 한·미 협력이 손상되거나 견고한 한·미관계 하에서 한·중 협력은 커다란 효용성이 없다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미관계는 우리의 국익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동맹관계이지만, 중국의 위상과 중·미 협력 관계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국제관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미관계를 공고히 하면서도 한·중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하며, 최소한 한반도 및 북한 문제에 관한 한·미·중 3자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에서 한·중 전략적 협력강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간 상호이해 증진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 다차원적인 교류와 대화를 정례화해야 한다. 여기에는 기존 정부 간 고위급 전략 대화의 장관급 격상과 의회, 정당, 언론, 학계, 민간단체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정례화가 포함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당 지배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 고위직만이 아닌 중하위직에 넓게 포진되어 있는 주요 인사들을 선별·접촉해 장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미동맹을 과거 지향적으로 해석하는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해 중국과의 군사교류 확대 및 안보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 증진을 가속화한다. 한반도 유사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신뢰가 향상되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군사비와 병력 및 무기 공개, 군 당국자 간의 정기적 교류와 정보협력, 군사훈련 참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등을 지향한다.

셋째, 금융위기에 대한 기존의 공동대응(무역보호주의 반대·통화스와프)을 지속함과 동시에, 상호 공동이익 분야인 무역·경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한·중 FTA에 관한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지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중·일 간의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문제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우리의 가치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급속히 증대된 교류협력으로 파생되는 불필요한 마찰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양국 국민 간의 취약한 상호 이해도를 중장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문화교류와 청소년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 양국은 1949년부터 1992년까지 약 40여 년간 단절된 경험을 갖고 있으나 비교적 우수한 전통문화와 정서를 상호 공유하고 있다. 향후 한·중 관계가 한 단계 더 격상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상호 인식과 이해의 폭을 더욱 넓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교류의 질적 확대를 통한 상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감대 형성에는 많은 시일이 필요한 바, 청소년 교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점차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제기구에서 평화·안정·발전 등 공동이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인간안보, 기후변화, 환경 등 주요 이슈에 대한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발언권이 확대될 전망이어서 한국은 중국과의 협력 의제설정도 확대하고 대화채널도 다양하게 확보·구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대북정책을 둘러싼 협력의 강화이다.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증대하는 영향력과 비중, 6자회담 의장국, 중·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배제된 북핵문제 해결, 북한의 개혁·개방, 남북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 중국의 협력과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대화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한·중 간의 정책협력은 전략대화의 틀을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대북정책의 이견 조정 등 민감성을 고려해 국책연구원(통일연구원)을 중심으로 하는 1.5트랙의 대화기제를 사전에 활용하는 수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고려와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 강화라는 요인 사이에서 결정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전략을 감안,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책임 있는 역할 주문과 중·북관계의 채널을 활용할 수 있는 양면적 접근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이 모두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의 대상인 북한에 대한 한국의 정책목표와 중국의 대북정책 목표가 상호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 양국은 상호 공동목표를 찾아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이견을 좁혀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는 양국의 목표가 일치하고 있다. 중국은 정세악화 및 긴장조성 행위 반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실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한국 역시 무력을 통한 해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긴장국면을 해소하고 대화 및 협상국면을 조성하는데 상호 건설적 역할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중·북관계를 활용해 남북긴장 완화는 물론 미·북대화와 6자회담 재개 등 북핵문제의 협상국면이 조성되는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주문할 수 있을 것이다. 협상국면이 전개되더라도 북핵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우나, 6자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실무그룹 의장국인 중국이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국과 대화를 확대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에 대한 국내시각과 정책적 관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 비록 일부이긴 하지만, 국내에는 중국을 냉전적 시각에서 이해하거나, 편협한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중국위협론’이나 북한의 ‘동북 4성론’ 등이 대표적인데, 이러한 관점은 북한에 대한 관점에서 비롯된 남남갈등과 어우러져 중국을 협력의 대상이 아닌 경쟁 심지어 대립·극복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어 중·북관계를 우리의 국익에 맞게 활용하는데 적지 않은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을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이 선행,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라. 대러시아 정책추진 방안

2008년 9월 29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양국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해서는 이 합의 사항을 양측이 상호 신뢰성을 갖고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1990년 한·소 수교 이후 다수의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의 정국 불안과 경제난 및 법체제 미비, 상호 신뢰성 부족 등으로 성실히 이행되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별 단기·중기·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양측의 실천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서울과 모스크바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되는 ‘한·러 포럼’ 등을 통해 실천여부를 평가하고 잘 이행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러 공동성명’에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하도록 초청해야 할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실세 총리로서 여전히 대내외적

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초청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 국가두마(연방하원)가 4년 중임이 가능한 대통령 임기를 6년 중임이 가능하도록 2008년 11월 14일 헌법 개정을 했기 때문에 푸틴 총리의 재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 점을 고려하여 푸틴 총리를 초청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 문제와 관련, 러시아의 일부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경정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상생·공영의 대북정책 등의 각종 해설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여 러시아의 정부, 연구소, 언론계 등에 배포해야 할 것이다. 미·북 양자대화 이후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러 양국 학자들이 구동구 사회주의국가들의 체제전환 사례들을 공동 연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가 통일주재관을 미·일·중에는 파견하고 있으나 유독 러시아에만 파견하지 않고 있어 러시아 정부의 불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외교통상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 러시아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가 선결되어야 하며, 평화협정안 준비 및 협정체결 과정에서 한국과 러시아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북핵문제가 진전되어 6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포럼 구성문제가 제기될 것인 바, 러시아는 다음과 같은 입장과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며 접경국인 자국도 포함된 다자간 포럼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가 다루어져야 한다는 기본입장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을 취할 것이다. 둘째, 일부에서 정전협정 서명국인 미·중·북한 3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는 경우, 러시아는 이를 강력히 비판하는 한편,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한국과 한반도 문제의 이해 당사국인 러시아의 참여 없이는 평화협정 논의 및 체결이 무의미하고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러시아는 평화협정 내용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한의 비무장화, 일본의 대북 보상 문제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가 남북한과 미·중 4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일·러가 보장하는 방식을 추진할 경우, 러시아는 처음에는 크게 반발할 것이나 회담이 진행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에 대한 러시아의 좀 더 정확한 입장과 정책을 파악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2009년 8·15 경축사에서 밝힌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구상 등에 대한 한·러 공동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경제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동북아경제협력체 구상’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하는 남·북·러 3각 경협이지만 북핵 폐기는 장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러시아 측과 이 구상 실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한·러 공동 학술회의 등을 개최하여 이 구상의 로드맵(Road Map)을 마련해야 한다. 러시아가 최근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지난 10년간 극동지역 개발에 투입한 총액은 900억 루블에 불과했다. 그러나 러시아는 향후 6년간 극동개발에 5,670억 루블을 투입할 계획인 바, 7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제품생산의 2.6배 증가가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블라디보스톡

의 이용기능 부지는 거의 대부분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거나 상수원 보호지대이어서 개발에 큰 장애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는 경협차관 잔액 13억 달러를 2012년 내 조기 상환하기 위한 협상을 희망하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대러 외교카드 확보 차원에서 기합의된 2025년까지 분할상환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13억 달러 중 약 7억 달러는 한국이 필요한 군사기술과 군사장비로 받기로 하고 양국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장비와 기술이전 목록을 놓고 이견이 노정된 바 있다.

수교 20주년이 되는 2010년을 ‘한국과 러시아의 해’로 지정하여 대규모 공동 문화·체육·학술 행사 등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양국 정부는 ‘2010 한국과 러시아의 해’ 공동준비 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야 할 것이다.

마. 대ASEAN 정책추진 방안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세계무대에서 지향하는 바는 역동적이고 믿을만한 중견 국가, 성숙한 세계국가(Global Korea)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지향점은 그냥 도달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ASEAN과 한층 더 강화된 협력관계는 향후 한국이 지향하는 세계무대에서의 지위로 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할 과정이며, 이를 통해서 한국은 좋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대ASEAN 관계에 있어 향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성 즉, 신뢰구축 우선, 대ASEAN 접근법의 다각화, 장기적 전략의 마련이란 요소를 견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금까지 다양한 한국의 양자 혹은 다자관계에서 최우선적으로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고려해왔던 점은 국가이익이란 측면이었다고 생각되며, 특히 국가이익 중에서도 한국과 해당 국가 혹은 국가들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질적으로 또 가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큰 관심을 두어왔다. 이런 접근법은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대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고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을 상대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접근법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한국이 강대국 외교를 넘어서 중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아직 개발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다양한 국가들과 향후 보다 깊은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이런 접근법은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한국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이 국가들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세계무대에서 한국의 객관적인 위치가 이미 어느 정도 개도국을 넘어서 세계의 10위권을 다투는 경제력을 자랑하는 상황에서 개도국, 중진국들을 상대로 우리의 가시적이고 경제적인 이익을 우선시 하는 접근법을 이용한다면, 이들 국가로부터 신뢰구축은 매우 요원한 일이 된다. ‘이익을 위한 관계가 아니라 선린을 위한 관계 맺기’(Not For Profit, But For Friendship)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한 관계 맺기만이 한국이 추구하는 연성권력과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 ASEAN에 대한 접근에서 ASEAN이라는 지역기구와 개별 국가를 분리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ASEAN이란 지역기구는 비교적 대외적으로 단일한 전선을 유지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ASEAN의 이런 단일성은 점차 퇴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유사하게 비민주적이고 경제적으로 낙후되었던 ASEAN 국가들이 공통의 안보위기에 직면하여 공통의 이익을

지켜내고자 만든 지역기구가 ASEAN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공통의 이익기반이 지금까지 ASEAN의 통일성을 담보해왔으나 창립 이후 40여년이 넘게 지난 지금 ASEAN은 정치적으로 다원화, 경제적으로 큰 격차, 역내 긴급한 안보 문제의 해소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로 인해 ASEAN의 통일성을 유지하기가 시간이 흐를수록 어려운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대ASEAN 접근에서 한국은 기존 지역기구로서 ASEAN에 대한 외교와 접근의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되, ASEAN 내 개별 국가들에 대해서 다각화된, 그리고 해당 국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접근을 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해서 ASEAN 지역 내 한국을 지지할 수 있는 거점 국가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ASEAN 관계에 있어 한국의 장기적 전략과 비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외관계의 주요 초점은 강대국들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전략이었고 고도의 유연성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ASEAN의 경우 한국이 나서서 보다 긴밀하고 가까운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장기적으로 한국과 ASEAN 관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갈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장기 전략과 방향성이 필요하다. 이런 전략 없이 한국과 ASEAN 관계의 발전은 그때그때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와 반응의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런 식의 대응 방법은 장기적인 관계의 지속과 심화를 가져올 수 없으며, ASEAN과의 관계를 통해서 한국이 추구하는 성숙한 세계국가라는 측면에서도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바. 기타 국가에 대한 정책추진 방안

호주 및 뉴질랜드와 한국은 상호 중요한 경제적, 정치적, 전략적 파트너이고 현재 FTA 협상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일본과 함께 3대 선진공업국인 호주 및 뉴질랜드와 정치·경제·안보·문화면에서 긴밀한 양자관계를 확대하고 다자관계와 범세계적 문제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통상 협력을 확대하되 적은 액수이나 무역수지 적자(2007년 대호주 무역적자 85억 달러, 대뉴질랜드 무역적자 4억 7,000만 달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고려하여 우리의 수출 증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양국 정상들과 합의한 바와 같이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부분에서의 협력을 위해 우리의 관련 국책연구소들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공동연구를 시작해야 한다. 호주와 중국이 FTA 협상 중이고, 호주와 일본이 FTA의 실행성에 관한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는 가능한 한 신속히 호주 및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을 마무리하고 비준할 필요가 있다. FTA 협상에서는 한국 농산품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좀 더 확대하고자 하는 호주 정부의 정책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외교의 다변화 차원에서 호주에 대한 에너지·자원 외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안보면에서 우리 정부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계속 확보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호주가 우리와 1.5 Track의 안보대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강구해

야 한다.

문화면에서 우리 정부는 호주와 뉴질랜드 양국에 대한 교육·문화·관광 협력을 증진하고 인적교류와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우리 교민이 약 2,000여 명 그리고 유학생이 약 1,000명에 달하는 호주에 대해서는 한국어·한국학의 보급과 유학생 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대인도 관계에서 우리 정부가 한 차원 격상된 정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 등 고위인사 교류를 확대하고 기존의 양국간 경제중심 관계를 정치·외교 등 관계로 확대하는 한편, 양국 외교부 지역국장 회의를 차관보급 회의로 격상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에 따라 교역·투자·서비스 산업(금융·통신)의 진출을 확대하되, 특히 한국의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분야 간 결합이 중요하다. 12억 인도 인구를 고려하여 내구소비재에 대한 수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제중심 관계를 안보관계로 확대하는 한편, 양국 국민의 상호 인식도 제고를 위해 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 상영 등 한류 보급과 문화·예술 행사의 개최를 확대해야 한다.

우리 정부의 다자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2009년 10월 10일 제2차 베이징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서 개설된 ‘사이버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시기에 공식 사무국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다자기구 부속센터의 사무소들을 적극 유치하고 기능중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관계정립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학연 연구가 필요하고 투자관련 협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역내 재난관리 문제에 적극 협력하며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ESCAP 기여금(KECF)을 점진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기반조성 및 형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안보면에서 우리 정부는 동아시아지역 내의 다자협력체나 다자기구에 북핵문제 해결과 우리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계속 요청해야 한다. 6자회담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여 동북아평화안보체제로 발전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되, ASEAN 지역안보포럼(ARF)이 동아시아 안보공동체로 발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문화면에서 우리 정부는 다자협력체 회원국들과의 대학 간 교류 활성화, 청년예술가 대화체 추진, 공동 학술·문화행사 추진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문화공동체 기반조성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상기와 같은 우리나라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주요 국가별 정책추진 방안을 도식화하면 <표 VII-2>와 같다.

● 표 VII-2 동아시아국가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위한 국가별 정책추진 방안

| 대상국가 | 정치면 | 경제면 | 안보면 | 문화면 |
|------|---|---|--|--|
| 대미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원자력 협력협정」 개정 - 외교·국방 장관급 전략대화 정례화 - 의회와 민간 단체의 접촉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위기·기후 변화·에너지 문제에 공동 대응 - G-20 정상회의(2010년)에서 중재자 역할 - FTA 비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 폐기를 한 'Grand Bargain' 협상전략 추진 - 연합방위 태세 강화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2012년) 이후 상황 대비 - '확장 여지' 개념의 구체화 작업 - 북한 급변사태 대비책 마련 - 아프가니스탄 지원방식과 수준 결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비전협회(KUVA)를 통한 인적교류 촉진, 교류 프로그램 확대 - 기업·시민단체·문화기관·학술기관 간 교류·협력 강화 |

| | | | | |
|------|--|---|--|---|
| 대일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 마찰의 관리와 장기적 관점 해결 - 정상간 신뢰와 전략대화 - 통일 시 북한의 미해결 대일 청구권 주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산업기술 분야 연구개발 및 국가지원 체제 확립 - 부품소재 산업 분야에 대한 대한국 투자 확대 촉구 - 기업 간, 산업 간 기술 제휴와 공동개발 확대 - 한·일 FTA 체결, 경제통합 추진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동의 중심적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공조 - 한·일 수색 및 구조훈련 등 군사교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역사공동위원회」 활동 지원 - 시민사회나 민간 차원의 학술 대화·교류 확대를 통한 역사인식 변화 |
| 대중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용외교와 조화(和譜)외교의 상생전략 모색 - 북한 및 한반도 문제 관련 한·미·중 3자 협의체 구성 - 전략대화의 장관급 격상 - 중하위직 중국 인사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 의회, 정당 간 교류협력 확대 및 정례화 - 중국에 대한 객관적 이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위기 공동 대응(무역보호 주의 반대·통화 스와프) 지속 - 경제·무역 확대 - FTA 논의 재개·체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에 대한 적극적 책임과 역할 촉구 - 대북정책 협력 강화 - 대북정책 사전 조율 위한 1.5 Track 활용 - 한·미동맹 우려 해소 - 군사교류·안보 대화 확대 통한 신뢰구축 - 국제기구에서 인간안보, 기후 변화, 환경 등에 대한 협력 모색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학계·민간 단체 간 교류 협력 확대 및 정례화 - 문화교류의 질적 확대 - 청소년 교류의 제도화 - 상호 이해 제고 - '중국 위협론'이나 북한의 '동북 4성론'에 대한 국내시간 교정 |
| 대러시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합의들의 이행방안 마련, '한·러 포럼'에서 평가 - 대통령, 총리 초청 - 상생·공영정책 적극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합의들의 단·중·장기 이행방안 마련 - '동북아경제 협력체 구상'의 공동 로드맵 마련 - 투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협력 - 북한의 정상국가화, 새로운 한반도의 평화,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에 대한 공동연구 - 통일주재관 파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수교 20주년 문화·학술 행사, '한국과 러시아의 해' 지정 - 2014년 소치 동계 올림픽 인프라 구축 참여 |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어 번역·배포 러시아의 상대적 홀대 인식 해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차관의 분할 상환 원칙 견지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준비 사업 참여 | | |
| 대ASEAN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구축 우선 정책 접근법의 다양화 포괄적 협력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지역기구와 개별국가의 분리 접근 거점국가 확보 ASEAN 전담 대사 임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이익 우선 정책 지양 한·ASEAN 특별 협력기금 강조 동아시아 자유 무역지대(EAFTA) 선도적 추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가교 역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속적 지지 요청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 지지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인적·관광·학술 교류 확대 사회·문화 협력의 진행과 성과 적극 홍보 한·ASEAN 특별 협력기금 확대 「한·ASEAN 센터」 적극 홍보, 지원 |
| 대호주/뉴질랜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강국 외교 관계 유지 다자관계와 범세계적 문제 협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통상 협력 확대, 무역수지 적자 축소 소프트웨어 등 신기술 협력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협력, 기후 변화 공동연구 FTA 조기 체결 대호주 에너지·자원외교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아시아 평화·번영 위한 안보 협력 북핵문제 해결 지원 요청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유도 대호주 1.5 Track 안보대화 추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문화·관광 협력 증진 인적교류 확대 대호주 한국어·한국학 보급 확대 |
| 대인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상 등 고위 인사 교류 확대 경제중심 관계의 정치·외교 등 관계로 확대 양국 외교부 지역국장회의의 차관보급 회의로 격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PA 발효(2010.1.1)에 따른 교역·투자·서비스산업(금융·통신) 진출 확대 한국의 IT 하드웨어와 인도의 소프트웨어 분야 간 결합 내구소비재 수출 투자 인프라 개선 촉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중심 관계의 안보관계로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인식도 제고 노력 한류(한국의 TV 드라마와 영화 상영) 확대 문화·예술 행사 개최 |

| | | | | |
|------|---|--|--|--|
| 다자관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자기구 부속 센터의 사무소 유치 - 한·중·일 협력 '사이버 사무국'의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공식 사무국 격상 - ASEAN+3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의 관계정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산학연 연구·투자관련 협정 정비 - ESCAP 기여금 (KECF)의 확충 - 재난관리 협력 -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기반조성 및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핵문제 해결 지원 요청 -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 요청 - 동아시아 안보 공동체 기반조성 및 형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간 교류 활성화 - 청년예술가 대화제 추진 - 공동 학술·문화 행사 추진 - 동아시아 문화 공동체 기반조성 및 형성 |
|------|---|--|--|--|

| |
|-----|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참고문헌

1. 단행본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주한미군재배치사업 백서』. 서울: 국무총리실 용산공원건립추진단, 2007.

국방부. 『2008 국방백서』. 서울: 국방부, 2009.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스마트파워위원회·홍순식 율김. 『스마트파워』. 서울: (주)도서출판 삼인, 2009.

김국신. 『한·미 정상회담 결과 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9.

김국신·박영호.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배정호. “탈냉전시대의 미·일동맹: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역할 증대.” 김성철 편. 『미·일동맹외교』. 성남: 세종연구소, 2001.

_____.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 재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버락 오바마 지음·홍수원 율김. 『버락 오바마 담대한 희망(The Audacity of Hope, 2006)』. 서울: 랜덤하우스, 2007.

삼성경제연구소. 『SERI 전망 2009』.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손 열. “일본의 동아시아전략과 공동체론: 중국정책으로서 일본의 지역주의.” 하영선 편. 『동아시아 공동체: 신화와 현실』. 서울: 동아시아연구원, 2008.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1945-1992』. 서울: 오름, 2004.

여인곤 외.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6.

_____.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서울: 통일연구원, 2008.

이원덕. “한·일과거사 갈등의 구조와 해법모색.” 김영작·이원덕 편.

-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6.
- 외교통상부. 『미국개황』. 서울: 외교통상부, 2008.
- 외교통상부. 『2009 외교백서』. 서울: 외교통상부, 2009.
- 테드 게일런 카펜터·더그 밴도·유종근 역. 『한국과 이혼하라』. 서울: 창해, 2007.
- 통일연구원.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은 어떻습니까』.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_____.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7-2008』. 서울: 통일연구원, 2008.
- 한국국제정치학회 중국분과 편. 『중국 현대국제관계』. 서울: 오름, 2008.
- Armitage, Richard L., Joseph S. Nye, JR. (et. al.). *CSIS Commission on Smart Power: A Smarter, more secure America*.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07.
- Hyland, William G. *Clinton's World: Remaking American Foreign Policy*. Westport: Praeger, 1999.
- Kaup, Katherine Palmer·민병오·김영신·이상윤·차재권 옮김. 『현대동아시아의 이해』. 서울: 명인문화사, 2008.
- Prasetyono, Edy. “Next Steps in ASEAN-Korea Relations for East Asian Security.” Ho Khai Leong (ed.) *ASEAN-Korea Relations: Security*. Singapore: Trade and Community Building. ISEAS, 2007.
- Pyle, Kenneth. *Japan Rising: The Emergence of Japanese Power*. New York: Public Affairs, 2007.

- Stubbs, Richard. "ASEAN: Building Regional Cooperation." Mark Beeson. (ed.) *Contemporary Southeast Asia: Regional Dynamics. National Differences*. London: Palgrave, 2005.
- Weatherbee, Donald E. *International Relations in Southeast Asia: The Struggle for Autonomy*. Rowan & Littlefield Publishers, 2005.
- 陳顯泗 主編. 『和解東亞』. 北京: 時事出版社, 2008.
- 小原雅博. 『東アジア共同体』. 日本經濟新聞社, 2005.
- 胡錦濤. “高舉中國特色社會主義偉大旗幟, 爲奪取全面小康社會新勝利而奮鬥.” 『中國共產黨第十七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2007.
- 楊毅. 『中國國家安全戰略构想』. 北京: 時事出版社, 2008.
- 張蘊崙. 『中國與周邊國家: 构建新型伙伴關係』.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8.
- 中共中央文獻研究室編. 『中國共產黨第十六次全國代表大會文件匯編』. 北京: 人民出版社, 2002.
- 若宮啓文. 『戰後保守のアジア觀』. 朝日選書, 1995.

2. 논문

- 곽수중. “제3차 G-20 정상회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Issue Paper』. 2009.
- 권순우. “신금융자본주의의 구조 및 핵심이슈.” 『신금융자본주의: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과 세계경제』. 삼성경제연구소 심포지엄, 2008.

- 김기석.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일본 대외정책의 딜레마.” 『국가전략』. 11권 4호, 2005.
- 김진호. “미 대선, 오바마의 선풍.” 『자유공론』. 7월호, 2008.
- 김홍규. “미·중 전략·경제대화 분석: 한반도 현안에 대한 함의와 더불어.” 외교안보연구원. 『주요국제문제분석』. 2008.8.
- 동아시아공동체연구회. “동아시아지역 협력의 미래방향: ASEAN+3과 EAS의 관계정립 및 우리의 대응 방안.” 외교통상부 연구용역 보고서, 2008.
- 민동석. “한·미 쇄고기 협상의 뒷이야기.” 『외교』. 제87호, 2008.
- 박영민. “미, 한반도 유사시 신속증원군 파견.” 『국방저널』. 11월호, 2008.
- 배정호. “일본 민주당의 출범과 대북정책 전망.” 『통일연구원 Online Seires』. 2009.9.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 인터뷰.” 『국방저널』. 10월호, 2008.
- 유종하. “새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안보정책.” VIP REPORT. 『현대경제연구원』. 2008.1.
- 엄태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국방 분야 정책과제.” 『주간 국방논단』. 2009.9.
- 이승철. “경제살리기 방안처리는 경제위기 극복위한 중요한 해법 될 것.” 『월간 전경련』. 통권 533호, 2009.4.
- 이원덕. “민주당 신정권의 등장 의미와 새로운 한·일관계.”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27호』. 코리아연구원, 2009.9.
- _____.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일본연구논총』. 현대일본학회, 2005.
- 정형곤 외. “후쿠오카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경제협력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8 No. 47, 2008.12.

- “제8차 아시아안보회의 성과: 한·미·일 ‘북 도발 단호 대처... 보상 없다’ 천명.” 『국방저널』. 6월호, 2009.
- “지·해·공 전술전기 연마 총력.” 『국방저널』. 9월호, 2009년
- 한국국제교류재단. “한·리포럼 제8차 회의보고서.” 2007.
- 한동훈.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 수교 15년의 성과와 전망.”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자료집』. 한국정치학회, 2007. 12. 7~8.
- 최원근.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진단 및 과제.” 『상장협연구』. 제59호, 2009.4.
- 최태강. “메드베데프시대 러-일관계.”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회의 발표논문, 2009.8
- Brian P. Klein. “Asia’s Challenges For Obama.” *Far Eastern Economic Review*, November 2008.
- Hecker, Siegfried S. and William Liou. “Dangerous Dealing: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and the Threat of Export to Iran.” *Arms Control Today*, March 2007.
- O’Hanlon, Michael E. “North Korea Collapse Scenarios.” *Brookings Northeast Asia Commentary*. No. 30, The Brookings Institution, June 9, 2009.
- Snyder, Scott. “China-Korea Relation: Establishing a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Comparative Connections, A Quarterly E-Journal on East Asian Bilateral Relations*, 2008.
- 袁鵬. “奧巴馬政府對華政策走向與中美關係前景.” 『中國外交』. 第6期, 2009年.
- 劉賽力. “合作共贏的中韓經濟關係.” 『國際問題研究』. 第3期, 2006年.

邵峰. “金融危機對國際關係的影響及中國的應對.” 『世界經濟與政治』.
第12期, 2008年.

3. 기타 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신동아』.

『연합뉴스』.

『조선일보』.

『조선중앙통신』.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A Times.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Newsweek.

국방부, <<http://www.mnd.go.kr>>.

국회예산정책처, <<http://www.nabo.go.kr>>.

기후변화포털, <<http://www.gihoo.or.kr>>.

녹색연합, <<http://safeclimate.greenkorea.org>>.
대한민국정부, <<http://www.korea.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주뉴질랜드대사관, <<http://nzl-wellington.mofat.go.kr>>.
주호주대사관, <<http://aus-act.mofat.go.kr>>.
청와대, <<http://www.president.go.kr>>.
통일부, <<http://www.unikorea.go.kr/kr/MIPT/MIPTBmain.jsp>>.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http://www.kita.net>>.
한국수출입은행, <<http://www.koreaexim.go.kr>>.

“한·러 공동선언 전문” <<http://www.pyung.co.kr/bodo/20040922.htm>>.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
<<http://ask.nate.com/qna/3740922>>.

ASEAN, <<http://www.aseansec.org>>.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http://www.foreignminister.gov.au>>.
CSCAP, <<http://www.cscap.org>>.
IMF, <<http://www.imf.org>>.
KDI, <<http://www.kdi.re.kr>>.
KIDA, <<http://www.kida.re.kr>>.
Ministry of External Affairs, India, <<http://www.meaindia.nic.i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Russian Federation,
<<http://www.In.mid.ru>>.

New Zealand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Trade,
<[http://www.mfat.govt.nz/Foreign-Relations/Asia/
index.php](http://www.mfat.govt.nz/Foreign-Relations/Asia/index.php)>.

The White House, <www.whitehouse.gov>.

UN Security Council, <www.un.org/sc/>.

U.S. Department of State, <www.state.gov>.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www.ustreas.gov/press/
release/tg247.htm](http://www.ustreas.gov/press/release/tg247.htm)>.

연구총서

| | | | | |
|---------------|--|----------|------|---------|
| 2007-01 | 남북한 재외동포정책과 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할 | 최진욱 | 저 | 6,500원 |
| 2007-02 |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김수암 | 저 | 6,000원 |
| 2007-03 | 북한의 경제난과 체제 내구력 | 서재진 | 저 | 8,500원 |
| 2007-04 | “확산방지구상”(PSI)과 한국의 대응 | 전성훈 | 저 | 10,000원 |
| 2007-05 | 통합정책과 분단국 통일: 독일사례 | 손기웅 | 저 | 7,000원 |
| 2007-06 | 새터민의 증언으로 본 북한의 변화 | 이교덕 | 외 공저 | 10,000원 |
| 2007-07 | 북·중 경제관계 확대와 대응방안 | 최수영 | 저 | 6,000원 |
| 2007-08 |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전략 | 허문영 | 외 공저 | 10,000원 |
| 2007-09 | 북한군대의 대내외 정세 인식 형성과 군대변화 | 정영태 | 저 | 6,000원 |
| 2007-10 | 평화변영정책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 허문영 | 외 공저 | 9,000원 |
| 2007-11 | 비교사회주의 측면에서 본 북한의 변화 전망 : 리비아와 쿠바 사례를 중심으로 | 정영태 | 외 공저 | 7,000원 |
| 2007-12 | 미·일동맹 강화에 따른 동북아정세 변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대응전략 | 김국신 | 외 공저 | 8,500원 |
| 2007-13 | 이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저 | 6,000원 |
| 2007-14 | 중국의 대북 정책과 2·13합의에 대한 입장 | 최춘흠 | 저 | 5,000원 |
| 2007-15(1) |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 연계 추진방안 | 김규륜 | 외 공저 | 10,000원 |
| 2007-15(II)-1 |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연계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II)-2 | New Linkages of Northeast Asian Regional Cooperation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II)-3 | 北東アジア地域協力の新たな連係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5(II)-4 | 東北亞区域合作的新联系 | 김규륜 | 편저 | 10,000원 |
| 2007-16 | 남북 물류·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 김영운 | 외 공저 | 8,000원 |
| 2007-17 | 북한의 통계: 가용성과 신뢰성 | 이 석 | 저 | 8,500원 |
| 2007-18 | 북한 사회개발협력방안 연구 | 조한범 | 저 | 5,000원 |
| 2007-19 | 북한주민의 거주 이동: 실태 및 변화 전망 | 이금순 | 저 | 7,000원 |
| 2008-01 |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 최진욱 | 외 공저 | 9,000원 |
| 2008-02 |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 임강택 | 외 공저 | 10,000원 |
| 2008-03 | 남북한 출입제도 [통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 김영운 | 저 | 8,000원 |
| 2008-04 |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 배정호 | 외 공저 | 10,000원 |
| 2008-05 |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 전병근, 구기보 | 저 | 7,500원 |
| 2008-06 |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 박영호 | 외 공저 | 9,000원 |
| 2008-07 |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 조정아 | 외 공저 | 10,000원 |
| 2008-08 |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 전현준 | 외 공저 | 10,000원 |
| 2008-09 |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 박형중 | 외 공저 | 6,500원 |

| | | | | |
|---------|--|-----------------|------|---------|
| 2008-10 |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 이금순, 김수암 | 저 | 9,000원 |
| 2008-11 |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 김규륜 | 편저 | 9,000원 |
| 2009-01 |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 전성훈 | 저 | 7,500원 |
| 2009-02 |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 황병덕, 신상진 | 저 | 9,000원 |
| 2009-03 |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 전현준 | 외 공저 | 10,000원 |
| 2009-04 |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 임강택 | 저 | 9,000원 |
| 2009-05 |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 여인곤 | 외 공저 | 10,000원 |
| 2009-06 |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 배정호 | 외 공저 | 10,000원 |
| 2009-07 |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 박형중 | 외 공저 | 10,000원 |
| 2009-08 |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 최진욱 | 외 공저 | 10,000원 |
| 2009-09 |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 홍우택 | 외 공저 | 6,500원 |
| 2009-10 |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 허형영 | 외 공저 | 9,000원 |
| 2009-11 |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 이금순, 김수암 | 저 | 7,500원 |
| 2009-12 | 통일대계 탐색연구 | 조민 | 외 공저 | 8,000원 |
| 2009-13 |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 김규륜 | 외 공저 | 7,500원 |
| 2009-15 |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 Gabriel Jonsson | 저 | 20,000원 |
| 2009-16 | 2009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 임강택 | 외 공저 | 10,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
|---------|---|--|--|---------|
| 2007-01 | 2·13 합의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 | 8,500원 |
| 2007-02 | 6·15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체제 | | | 10,000원 |
| 2007-03 | 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변영: 평가와 전망 | | | 9,000원 |
| 2008-01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 | | 10,000원 |
| 2008-02 |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 | | 9,500원 |
| 2009-01 |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 | | 6,500원 |
| 2009-02 |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 | | 5,5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 2007-10-01 | 동북아 지역내 NGO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 외 공저 | 6,000원 |
| 2007-10-02 | 한반도 통일대비 국내NGOs의 역할 및 발전방향 | 손기웅 | 외 공저 | 9,000원 |
| 2007-10-03 | 동북아 NGO 교류·협력의 인프라 개선과 NGO 네트워크의 활성화 방안 | 최대석 |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1 | 한반도 평화·변영 거버넌스의 개선 및 활성화 방안 (총괄보고서) | 김국신 | 외 공저 | 10,000원 |

| | | | |
|------------|---|------------|---------|
| 2007-11-02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논의와 개념적 틀 | 임성학 외 공저 | 6,000원 |
| 2007-11-03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안보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배정호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4 | 한반도 평화체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함택영 외 공저 | 6,000원 |
| 2007-11-05 | 대북정책 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전성훈 외 공저 | 6,500원 |
| 2007-11-06 | 남북경협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김규륜 외 공저 | 8,000원 |
| 2007-11-07 | 남북한 사회문화 협력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이교덕 외 공저 | 10,000원 |
| 2007-11-08 |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로컬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를 중심으로 | 양현모 외 공저 | 7,500원 |
| 2007-11-09 | 한반도 평화교육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박광기 외 공저 | 8,500원 |
| 2008-07-01 |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공저 | 6,500원 |
| 2008-07-02 |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 양현모, 이준호 저 | 6,000원 |
| 2008-07-03 |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 최진욱 외 공저 | 7,000원 |
| 2008-07-04 |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 박종철 외 공저 | 8,000원 |
| 2008-08-01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총괄보고서) | 박형중 외 공저 | 10,000원 |
| 2008-08-02 | 국제 개발이론 현황 | 이금순 외 공저 | 8,000원 |
| 2008-08-03 | 국제사회의 원조 체계와 추진전략 | 임강택 외 공저 | 10,000원 |
| 2008-08-04 |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 최춘흠 외 공저 | 6,500원 |
| 2008-08-05 |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 권 울 외 공저 | 10,000원 |
| 2008-08-06 |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 장형수 외 공저 | 10,000원 |
| 2008-08-07 |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 이종무 외 공저 | 8,000원 |
| 2009-15-01 |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 임강택 외 공저 | 8,500원 |
| 2009-15-02 |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 박형중 외 공저 | 10,000원 |
| 2009-15-03 |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 김정수 외 공저 | 10,000원 |
| 2009-15-04 |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 장형수 외 공저 | 9,500원 |
| 2009-15-05 |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 이종무 외 공저 | 8,500원 |
| 2009-15-06 | 지방자치단체의 북한 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 양현모 외 공저 | 10,000원 |
| 2009-16-01 |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 김국신 외 공저 | 5,000원 |
| 2009-16-02 |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 이교덕 외 공저 | 7,000원 |
| 2009-16-03 |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 이 석 외 공저 | 8,500원 |
| 2009-16-04 |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 민병원 외 공저 | 7,000원 |
| 2009-17-01 |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 여인근 외 공저 | 6,500원 |
| 2009-17-02 |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 박종철 외 공저 | 7,500원 |
| 2009-17-03 |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 조 민 외 공저 | 8,000원 |
| 2009-17-04 |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 함택영 외 공저 | 6,500원 |
| 2009-17-05 |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 조명철 외 공저 | 6,000원 |
| 2009-17-06 |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 이금순 외 공저 | 6,500원 |

논총

| | |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1호 (200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1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6권 2호 (2007)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6, No. 2 (2007)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1 (2009) |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07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7</i> | 김수암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8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09 | 이금순 외 공저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 이금순 외 공저 | 20,000원 |

기 타

| | | | |
|------|---|---------------|---------|
| 2008 | 2006 독일통일백서 | | 8,000원 |
| 2009 |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 Suh, Jae-Jean | 5,500원 |
| 2009 |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 |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07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7~2008 | 6,000원 |
| 2008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 6,000원 |
| 2009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 7,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 2007-01 | 2007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허문영,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전현준, 정영태 |
| 2007-02 | 2·13 북핵 합의이후 북한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 여인곤, 이금순, 정영태, 조한범, 최수영 |

| | | |
|---------|---|-----------------------------------|
| 2007-03 | 2006 미 국무부 연례각국인권보고서(북한부분) 분석 | 김수암, 이금순 |
| 2007-04 | '2·13합의' 전후의 북한동향 | 이교덕, 임순희, 정영태, 최수영 |
| 2007-05 |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 분석 | 전성훈 |
| 2007-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5차 회의 평가 | 최수영 |
| 2007-07 | 7·1조치 이후 5년, 북한경제의 변화와 과제 | 최수영 |
| 2007-08 | 상반기('07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7-09 | 제6차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 결과분석 | 김국신, 여인곤 |
| 2007-10 | 7·29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분석 | 배정호 |
| 2007-11 | 북한의 『전국 당세포비서 대회』 개최 배경과 전망 | 정영태 |
| 2007-12 | 후쿠다 정권의 특징과 대외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 2007-13 | 러시아 총선(12·2)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7-14 | 하반기('07년 7월~12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정영태, 이교덕, 임순희, 최수영 |
| 2008-01 |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정영태, 김영윤,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
| 2008-02 |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 전병곤 |
| 2008-03 |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 전현준 |
| 2008-04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박영호 |
| 2008-05 |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 배정호 |
| 2008-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 최수영 |
| 2008-07 |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 이금순, 김수암 |
| 2008-08 |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 최진욱, 박형중 |
| 2008-09 |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 임순희 |
| 2008-10 |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
| 2008-11 |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 배정호 |
| 2008-12 |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 여인곤 |
| 2009-01 |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
| 2009-02 |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
| 2009-03 |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
| 2009-04 |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 전현준 |
| 2009-05 |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 임강택, 박형중 |
| 2009-06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 최수영, 정영태 |
| 2009-07 |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 김국신 |

KINU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 | | |
|---------|-----------------------------|--------------------|
| 2007-01 | 북핵 '2·13합의'와 평화적인 핵폐기 사례 분석 | 전성훈 |
| 2007-02 | 2차 남북정상회담의 의의와 전망 | 조한범 |
| 2007-03 |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방안 | 김수암, 이금순, 최진욱, 서은성 |

| | | |
|-------------|---|--------------------|
| 2007-04 | 한미동맹 그리고 북한과 동북아 2001~2007년간의 회고와 한국의 정책 대안 | 박형중 |
| 2007-05 | 주변 4국의 대북정책 동향과 전망: '2·13합의' 이후부터 남북정상회담까지를 중심으로 | 여인근, 김국신, 배정호, 최춘흠 |
| 2007-06 | 국제금융기구의 북한 개입: 조건, 시나리오 및 과제 | 임을출 |
| 2007-07 | 평화조약의 역사적 변천과 사례: 한반도평화체제에 주는 시사점 | 최진욱 |
| 2007-08 | 북핵 폐기 한반도 모델: 기본원칙과 추진방향 | 전성훈 |
| 2008-01 |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 서재진 |
| 2008-02 |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
| 2008-03 |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 최은석, 황재준 |
| 2009-01 |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 김규륜 외 공저 |
| 2009-02(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 손기웅 외 공저 |
| 2009-02(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 손기웅 외 공저 |
| 2009-03 |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 조한범 외 공저 |
| 2009-04 | 통일 예측 시계 구축 | 박영호, 김지희 |
| 2009-05 | 북핵일지 1955-2009 | 조 민, 김진하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 | | |
|------|-------------------------------|--------------------|
| 2007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1호 | 이금순, 서재진, 김수암 |
| 2007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2권 2호 | 이금순, 최진욱, 김수암 |
| 2008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
| 2008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 이금순, 김수암 |
| 2009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

월간 북한동향

비매출

| | | |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1호 | 북한연구실 |
| 2007 | 월간 북한동향 제1권 제2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 북한연구실 |
| 2008 |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 북한연구실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 북한연구센터 |
| 2009 |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 북한연구센터 |

- 2007 한반도 평화체제: 자료와 해제 제1호
 허문영, 김수암, 여인곤, 정영태, 조 민, 조정아

Studies Series

- 2007-01 Value Changes of the North Korean New Generation and Prospects
 Lim Soon-Hee
- 2007-02 North Korea's Civil-Military-Party Relations and Regime Stability Jeung Young-Tai
- 2007-03 An Assessment of the North Korean System's Durability
 Chon Hyun-Joon, Huh Moon-Young, Kim Philo, Bae Chin-Soo
- 2007-04 A Study on the Reality and Prospect of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 Tasks for Successful Transformation of the North Korean System
 Kim Young-Yoon
- 2007-05 North Korea's Agricultural Reforms and Challenges in the wake of the
 July 1 Measures Choi Soo-Young
- 2007-06 The Changes of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in the Aftermath
 of their Economic Difficulties Cho Jeong-Ah
-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m
-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정세분석보고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인수동(4·19길 275)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